발 간 등 록 번 호
12-B552524-000031-01



국민이 행복한 건축

– 제4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활동보고서
(2016.02. ~ 2018.01.)

대 통 령 소 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Presidential Commission on Architecture Polic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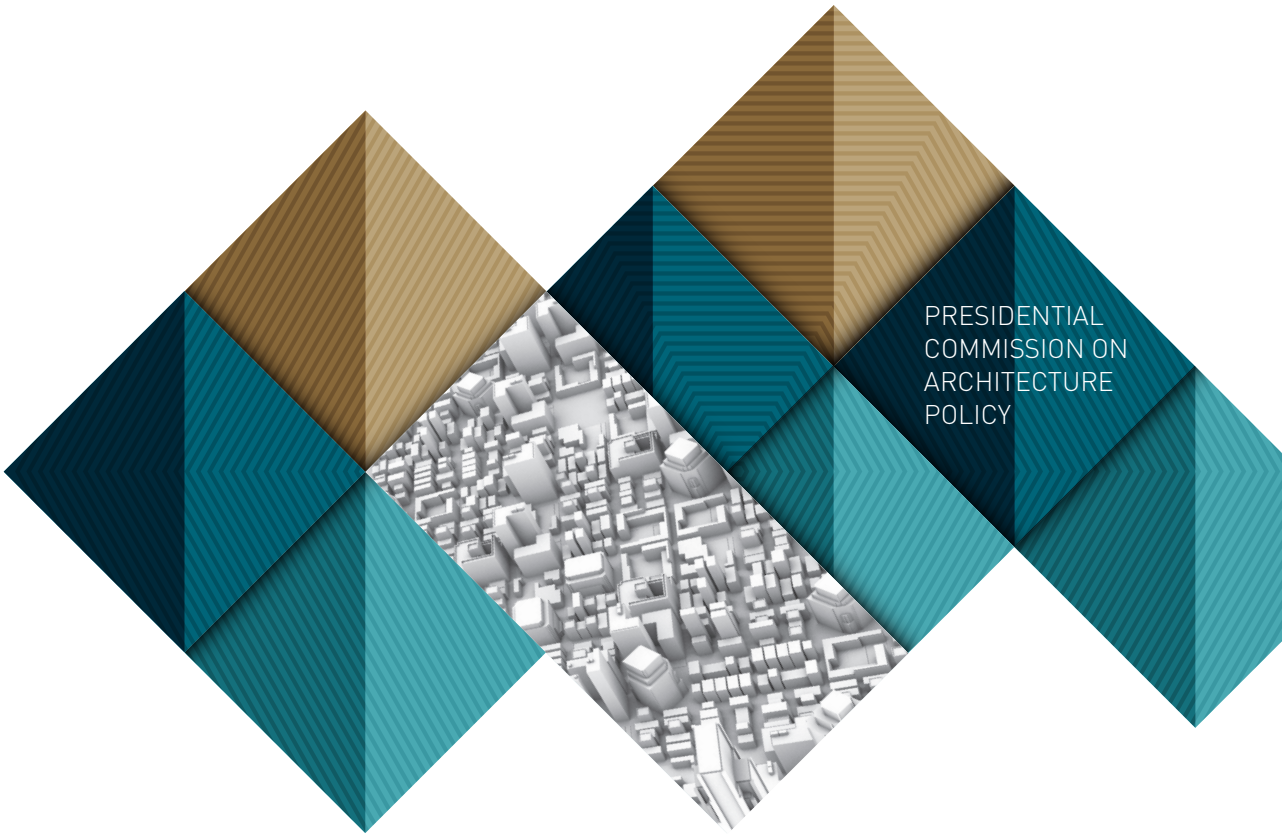
국민이 행복한 건축
제4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활동보고서

대통령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Presidential Commission on Architecture Policy

PRESIDENTIAL
COMMISSION ON
ARCHITECTURE
POLICY

대 통 령 소 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Presidential Commission on Architecture Policy

www.pcap.go.kr
110-733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길 68 코리안리재보험빌딩 809호 Tel 02-397-5523 Fax 02-397-5500



국민이 행복한 건축

– 제4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활동보고서
(2016.02.~2018.01.)

대 통 령 소 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Presidential Commission on Architecture Policy

PRESIDENTIAL COMMISSION ON
ARCHITECTURE POLICY

국민이 행복한 건축

제4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활동보고서

GALLERY



대 통 령 소 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Presidential Commission on Architecture Policy



▲ 미래건축포럼(2016. 10.)

▼ 미래건축포럼(2017. 09.)





▲ 전국순회 건축 · 도시정책포럼(2016. 10.)



▲ 전국순회 건축 · 도시정책포럼(2017. 11.)



▲ 시 · 도 건축 및 도시업무 담당 공무원 워크숍(2016. 06.)



▲ 시 · 도 건축 및 도시업무 담당 공무원 워크숍(2017. 05.)



▲ 대한민국 녹색건축대전(2016.11.)





▲ 대한민국 녹색건축대전(2017.11.)

▼ 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 현장방문(2016. 12.)





▲ 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 현장방문(2016. 12.)

▼ UIA 2017 서울 세계건축대회(2017. 09.)





▲ 포항지진피해지역 현장 방문(2017. 12.)

발 간 사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관계 부처 건축 분야의 중요한 정책을 조정함으로써 건축 문화를 진흥하고 국토환경을 개선하여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안전하고 품격 있는 공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건축기본법」 제13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대통령 소속 위원회입니다.

2016년 2월 1일 출범한 제4기 위원회는 건축 · 도시 · 조경 · 디자인 등 전문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및 업계 인사들과 언론 · 법조계, 경제 · 부동산 분야의 전문가들까지 참여하여 보다 폭넓은 관점에서 다양한 정책을 검토하고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국민이 행복한 건축'을 목표로 출범한 제4기 위원회는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며 건강하게 사는 데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국정운영을 자문하였으며, 특히 서민들이 주로 사는 다세대 다가구를 비롯한 소규모 건축의 품질개선을 위한 정책수립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는 녹색건축을 활성화하고 새로운 기술변화와 교통수단에 대응하는 미래도시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아울러 국민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내 집을 짓고 고치는 데 필요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고유의 생활양식과 문화가 담겨 있는 창조적인 건축문화가 꽃필 수 있는 기반을 닦는 데 힘써 왔습니다.

나아가 제4기 위원회는 국민행복, 경제 활성화, 통일한국을 위하여 건축 분야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찾고 이를 실천하여 나갈 수 있도록 학계, 업계, 정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국민과의 소통과 협력의 창구 역할을 다하여 왔으며, 국민이 우리나라 경제수준에 걸맞게 아름다운 국토에서 쾌적한 삶을 평안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정책 수립에 최선을 다하였다고 자부합니다.

본 보고서는 제4기 위원회의 지난 2년간 활동 내용과 정책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정리하여 발간한 것입니다. 지난 2년간 제4기 위원회 활동은 국가건축정책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그 기틀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국가건축정책의 비전을 실현하고 우리나라를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곳으로 가꾸어 나가는데 본 보고서가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희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2년여 동안 더 나은 건축 ·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 헌신적으로 애써 주신 제4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님들과 기획단, 그리고 위원회 활동에 진심 어린 성원과 조언을 아끼지 않은 정부기관 등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 1월
대통령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

CONTENTS

발간사 10

제 1 장 위원회 현황

제1절 설립 배경 16
제2절 위원회 구성 18
제3절 주요 기능과 역할 21
제4절 제4기 위원회 정책방향 23

제 2 장 위원회 회의

제1절 전체회의 26
제2절 합동연석회의 27
제3절 분과회의 43
1. 정책조정분과회의 43
2. 국토환경디자인분과회의 48
3. 건축문화진흥분과회의 54

제 3 장 위원회 활동

정책 분야

제1절 미래건축포럼 62
1. 추진 배경 62
2. 추진 경과 62
3. 주요 내용 63
4. 성과 및 의의 69
제2절 도시 공공공간 이용 활성화 70
1. 추진 배경 70
2. 추진 경과 70
3. 주요 내용 71
4. 성과 및 의의 75
제3절 소규모 주택 건축 품질관리 76
1. 추진 배경 76
2. 추진 경과 77
3. 주요 내용 77
4. 성과 및 의의 80
제4절 학교 내진 안전성 개선 81
1. 추진 배경 81
2. 추진 경과 83
3. 주요 내용 83
4. 성과 및 의의 87

제5절 군(軍) 주거정책 발전방안 수립 지원 88
1. 추진 배경 88
2. 추진 경과 88
3. 주요 내용 89
4. 성과 및 의의 93
제6절 건축물 사용설명서 제도 도입 94
1. 추진 배경 94
2. 추진 경과 94
3. 주요 내용 95
4. 성과 및 의의 97
제7절 아파트 Farm 조성 98
1. 추진 배경 98
2. 추진 경과 98
3. 주요 내용 99
4. 성과 및 의의 101

행사 분야

제1절 전국순회포럼 102
1. 추진 배경 102
2. 추진 경과 102
3. 주요 내용 103
4. 성과 및 의의 115
제2절 시 · 도 건축 및 도시업무 담당 공무원 워크숍 117
1. 추진 배경 117
2. 추진 경과 117
3. 주요 내용 118
4. 성과 및 의의 125
제3절 대한민국 녹색건축대전 126
1. 추진 배경 126
2. 추진 경과 126
3. 주요 내용 127
4. 성과 및 의의 134
제4절 2016 어린이 건축창의교실 135
1. 추진 배경 135
2. 추진 경과 135
3. 주요 내용 135
4. 성과 및 의의 139
제5절 UIA 2017 서울 세계건축대회 전시 홍보 140
1. 추진 배경 140
2. 추진 경과 140
3. 주요 내용 141
4. 성과 및 의의 144

부 록
1. 제4기 위원회 위원 명단 146
2. 위원회 활동 언론보도 148
3. 위원회 연구과제 수행 실적 154
4. 기획단 직원 명단 154

PRESIDENTIAL COMMISSION ON
ARCHITECTURE POLICY

CHAPTER 1



제 1 장
위원회 현황

제1절 ▶ 설립 배경
제2절 ▶ 위원회 구성
제3절 ▶ 주요 기능과 역할
제4절 ▶ 제4기 위원회 정책방향

제 1 절
설립 배경

우리나라의 국토환경은 경제개발 시대에 공급 중심 정책이 시행되면서 경제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품격 있는 환경으로 거듭나지 못했다. 또한 급속한 발전에 힘입어 양적으로는 많은 성장이 있었으나 질적인 측면에서는 관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앞으로 개선의 여지가 많다.

그동안 우리의 건축문화는 각 지역이 가진 특성이나 정체성을 살려내기보다는 획일적 개발 방식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결과적으로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의 특성화한 이미지를 보여 주지 못했다. 정부에서는 부처별로 공공시설물을 건립하고 있으나 가격경쟁을 기준으로 선정하는 설계사와 시공사로는 독창적인 공공건축물을 조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 게다가 정부부처 간에 정책을 원활하게 조율하고 조정할 수 있는 체계가 없기 때문에 때로는 중복 투자가 되기도 하고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국토환경을 구성하는 건축 환경이 디자인을 비롯한 질적인 문제만 있는 것은 아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건축문화 수준은 세계적이다. 종묘, 해인사 장경판전, 석굴암, 불국사, 창덕궁, 수원화성 등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세계문화유산만 보더라도 우리의 건축문화유산이 얼마나 찬란한지 확인할 수 있다. 우리 조상이 남겨 놓은 이런 훌륭한 건축자산을 바탕으로 기술적으로 발달한 현대에는 더 좋은 건축물을 만들어 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제 양적 성장을 중시하는 개발 중심 시대에서 벗어나 문화와 삶의 질을 중시하는 질적 성장 시대에 걸맞은 인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 건축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장기 비전을 수립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광범위하게 형성됐다. 이에 따라 2007년 12월 21일 국토환경 디자인을 개선하고 건축문화를 진흥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토의 품격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건축기본법」(법률 제8783호)을 제정 · 공포하였다. 같은 법에서는 건축 분야의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고 관계 부처와 건축정책을 조정하는 기능을 담당할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건축기본법」은 공포 후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령 제정과 함께 2008년 6월 22일 시행되었으며, 같은 법에 근거하여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민간위원 사전 간담회가 개최되었다. 「건축기본법」이 제정 · 공포된 지 근 1년 만인 2008년 12월 10일에 대통령이 주재하는 민간위원 위촉식과 간담회가 개최되었다.

2009년 1월 2일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사무국인 국가건축정책기획단을 발족하여 본격적인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운영을 위한 조직과 제도의 틀을 갖추었다. 이렇게 건축정책을 범부처적으로 심의 조정하는 최초의 법정기구인 국가건축정책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건축의 공공성 구현과 문화적 가치 향상 등 국토환경 디자인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나아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설립의 근거법인 「건축기본법」은 '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구성', '건축문화의 진흥을 위한 재정 지원', '건축디자인 기준의 설정',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등이 주요 내용이다. 「건축기본법」은 건축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책무를 정하고 건축정책의 수립 · 시행 등을 규정하여 건축문화를 진흥함으로써 국민의 건전한 삶의 영위와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기본 이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 국민 공동의 노력으로 국민의 안전 · 건강 및 복지에 직접 관련된 생활공간을 조성하고, 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조정하고 수용하며 경제활동의 토대가 되는 공간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또한 지역의 고유한 생활양식과 역사를 반영하고 미래 세대에 계승할 문화공간을 창조하고 조성하여 건축의 공공적 가치를 구현하는 것이다.

2016년 2월 1일 출범한 제4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10명과 위촉위원 20명(위원장 포함)으로 구성되었으며,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제해성 아주대학교 교수가 선임되었다.

제 2 절
위원회 구성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건축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당연직 위원과 건축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 임기 2년의 위촉위원으로 나뉘며,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한다.

2016년 2월 제4기 위원회 출범 당시 당연직 위원은 10개 부처(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의 장관이었으며, 위촉위원은 건축 · 도시 · 조경 · 문화 분야 민간 전문가 중에서 20명을 위촉하였다. 2017년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당연직 위원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추가되었고, 위촉위원 중 김현아 위원의 사임으로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 11명과 위촉위원 19명으로 변경 · 구성되었다. (위촉위원 명단 〈표 1〉 참고)

〈표 1〉 **제4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촉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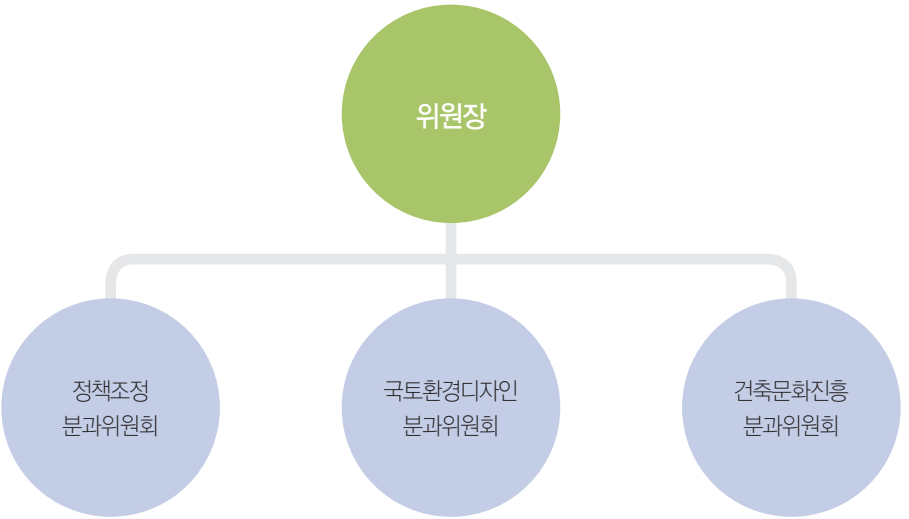
성명	주요 경력	비고
제해성	아주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위원장
구자훈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교수	
김관영	한국리츠협회 회장	
김도년	성균관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국토환경디자인분과위원장
김정곤	건국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건축문화진흥분과위원장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	사임
남해경	전북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성명	주요 경력	비고
박신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박은실	추계예술대 문화예술경영대학원 교수	
윤혁경	ANU디자인그룹 건축사사무소 대표	정책조정분과위원장
이인근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원장	
이형석	법무법인 태평양 파트너변호사	
전병준	매일경제신문사 이사/논설실장	
정규상	협성대학교 시각디자인학과 교수	
진양교	홍익대학교 건축도시대학원 교수	
최원미	(주)도도디자인건축사사무소 소장	
최창식	한양대학교 건축공학부 교수	
하미경	연세대학교 실내건축학과 교수	
한동영	(주)한양 대표이사	
홍원화	경북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소관사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건축기본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정책조정분과위원회, 국토환경디자인분과위원회, 건축문화진흥분과위원회를 두었으며, 각각의 분과위원회는 〈표 2〉와 같이 7인 이상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였다.

〈표 2〉 제4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분과위원

분과위	분과위원
정책조정분과위원회	윤혁경(분과위원장) 김관영, 박신영, 박은실, 이인근, 이형석, 전병준, 최창식, 하미경, 한동영
국토환경디자인분과위원회	김도년(분과위원장) 구자훈, 이인근, 정규상, 진양교, 최원미, 홍원화
건축문화진흥분과위원회	김정곤(분과위원장) 김관영, 남해경, 박신영, 박은실, 전병준, 정규상, 최원미, 하미경



위원회 조직도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건축기본법」에 따라 기획단을 두고 있다. 국가건축정책기획단의 단장은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이 겸임하며, 2015년부터 국토교통부 직제에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운영 및 지원 업무가 포함되어 업무를 수행 중이다.

제 3 절
주요 기능과 역할

위원회는 건축 분야의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관계부처 건축정책의 조정 및 그 밖의「건축기본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시행하며, 주요 심의내용은「건축기본법」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축정책기본계획을 포함한 건축정책의 수립 및 조정
2) 건축 분야 발전에 관한 주요 사업의 지원
3) 건축행정 개선에 관한 사항
4) 건축문화행사 추진에 관한 사항
5) 국민의 건축문화 향유 기회의 확대에 관한 사항
6)「건축기본법」제2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디자인 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
7) 건축에 관한 조사 ·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건축정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이「건축기본법」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을 지정하려는 경우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2016년 2월부터는 건축물 관련 규정을 통합한「한국건축규정」의 개선 ·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도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심의한다.

기획단은「건축기본법 시행령」제16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회의 준비
2)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분과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의 작성

3)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전문적인 조사 · 연구
4) 그 밖의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모든 업무지원

위원회의 일반적 업무처리 절차는 합동연석회의에서 후보과제에 대한 사회적 이슈와 파급효과 그리고 국정철학 등을 고려해 과제를 선정하면, 과제 성격에 적합한 담당 분과에서 회의를 하고, 필요시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추진 여부를 검토한 후, 위원회 합동연석회의에서 심층 검토 결과를 기초로 논의하여 확정한다.

과제검토는 기획단의 사전검토, 분과위 배정, 분과위 검토 등을 거쳐 합동연석회의에서 최종 검토하고, 필요시에는 분과회의 및 합동연석회의에서 반복적으로 과제를 검토함과 아울러, 관계부처의 협의 등이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는 관계부처 등과 협의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조율한 후 반영하며, 타 위원회와 중복되는 과제는 위원회 간 사전 실무협의 등을 거쳐 과제담당 주체를 결정한다.

제 4 절
제4기 위원회 정책방향

제4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국민이 행복한 건축'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5가지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활동하였다.



1. 효율적인 공공건축

- 한정된 국가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공공건축물의 원활한 수급을 도모하며 건축물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방안 추진
  - 여러 부처에 분산된 공공건축 수급업무를 총괄하는 범부처적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여 효율적으로 관리(관계부처 :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2. 편안하고 살기 좋은 집

- 국민들이 내 집을 짓는 데 어려운 제도 · 시장현황 등을 파악하여 안심하고 편안하게 집을 짓고 고치도록 개선방안 마련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는 지역건축안전센터의 기술지원 활성화, 소규모 주택 개보수 지원 보증제도 개선 등(관계부처 :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등)

3. 안전하고 편리한 공간환경

- 국민의 일상생활이 편리하고 안전하도록 공공공간 활용 방안 마련
  - 범죄예방 환경조성, 보행안전 환경조성, 대중교통 환승편의시설 개선정책 등(관계부처: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

4. 건축서비스 산업의 진흥

- 고부가가치 창조 산업인 건축서비스산업을 진흥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서비스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
  - 건축 관련 분야 서비스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지원(관계부처 :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5. 통일한국의 국토 미래상 제시

- 다가오는 통일시대를 대비하여 새로운 한반도 국토 인프라 구축을 위한 건축의 역할 등을 제시하고 국민의 동참 유도
  - 통일 국토와 건축의 미래상 제안 및 각계의 대응방안 모색(관계부처 : 기획재정부, 통일부, 국토교통부 등)

CHAPTER 2



제2장 위원회 회의

제1절 ▶ 전체회의
제2절 ▶ 합동연석회의
제3절 ▶ 분과회의

제 1 절
전체회의

제4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전체회의는 2016년 12월 16일부터 12월 23일까지 서면심의로 진행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총 3건의 안건이 상정되었다.

- 2017 국토환경디자인 지원사업 선정(안)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규정」 및 「국가건축정책기획단 규정」 개정(안)
- 제로에너지건축 활성화 추진 방안

첫 번째 안건은 국토교통부에서 상정한 '2017년 국토환경디자인 지원사업(2015년까지는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선정안'에 대한 심의이다. 국토교통부의 2017년 국토환경디자인 지원사업 선정위원회에는 제4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김도년 위원이 선정위원장으로, 진양교 위원과 최원미 위원이 각각 선정위원으로 참석하였다.

2017년 국토환경디자인 지원사업 공모에는 총 15개 지방자치단체가 응모하였으며, 선정위원회를 통하여 2개소의 후보지를 선정하고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1개 사업을 선정하도록 하였다.

심의 결과 국토교통부에서 올린 원안대로 통과되어 1순위인 경상북도 고령군이 최종 선정되었다.

두 번째 안건은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 상정한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규정」 및 「국가건축정책기획단 규정」 개정안'으로서 모두 원안가결되었다.

세 번째 안건은 국토교통부에서 상정한 보고 안건으로 '제로에너지건축 활성화 추진 방안'이다. 「건축기본법」 제13조에 따라 관계 부처의 건축정책을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심의 · 조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어 관련 규정에 따라 보고되었다.

제 2 절
합동연석회의

합동연석회의는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제10조(합동연석회의)에서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가 참여하는 회의로 규정하고 있으나, 사실상 위촉위원 전체가 참여하는 회의로 운영되고 있다.

제4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총 16회의 합동연석회의를 개최하였으며, 논의한 안건은 〈표 3〉과 같다.

〈표 3〉 제4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합동연석회의

회차	일시	장소	주요 내용(안건 등)
제1차	2016. 02. 05.	서울(종로) 국가건축정책위원회 회의실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소개 ▸ 3개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 제4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활동 방향 논의 ▸ 건축도시박물관 건립 기획 TF(안)
제2차	2016. 03. 10.	서울(종로) 국가건축정책위원회 회의실	▸ 안건 보고 ▸ 포럼 및 자문단 구성 · 운영 계획 ▸ 주요 행사계획(전국순회포럼, 시 · 도 공무원 워크숍)
제3차	2016. 04. 21.	서울(종로) 국가건축정책위원회 회의실	▸ 안건 보고 ▸ 포럼 및 자문단 활동 보고 ▸ 주요행사계획(전국순회포럼, 시 · 도 공무원 워크숍)
제4차	2016. 05. 12.	서울(종로) 국가건축정책위원회 회의실	▸ 안건 보고 ▸ 포럼 및 자문단 활동 보고 ▸ 주요 행사 계획 보고(전국순회포럼, 시 · 도 공무원 워크숍)

회차	일시	장소	주요 내용(안건 등)
제5차	2016. 06. 09.	서울(종로) 국가건축정책위원회 회의실	▸ 안건보고 ▸ 제4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중점 추진과제 논의 ▸ 주요 행사 계획(시 · 도 공무원 워크숍)
제6차	2016. 07. 21.	서울(종로) 국가건축정책위원회 회의실	▸ UIA 2017 추진 현황 보고 ▸ 경부고속도로 서울구간 입체화 계획 보고 ▸ 홍보동영상, 미래건축포럼, 주요 행사계획(순회포럼) 등
제7차	2016. 09. 08.	서울(종로) 국가건축정책위원회 회의실	▸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 선도사업 추진 보고 ▸ 미래건축포럼 추진현황 ▸ 하반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주요 계획
제8차	2017. 01. 12.	서울(종로) 국가건축정책위원회 회의실	▸ 2017년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추진 주요 사업 논의
제9차	2017. 02. 09.	서울(종로) 국가건축정책위원회 회의실	▸ 2017년 정책연구용 추진과제 선정
제10차	2017. 03. 09.	롯데월드타워	▸ 초고층 건축물의 구조, 피난시설 등 현장설명 청취
제11차	2017. 04. 13.	서울(서초) 반포동 대림아크로빌파크타워	▸ 건축진흥원 설립 추진현황 ▸ 감리제도 개선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제12차	2017. 06. 08.	서울(종로) 국가건축정책위원회 회의실	▸ 2017년 신규 추진용역 2건 착수보고 ▸ 전국순회 건축 · 도시정책 포럼계획
제13차	2017. 10. 13.	서울(종로) 국가건축정책위원회 회의실	▸ 도시재생 뉴딜정책 추진계획 ▸ 고층건축물 화재안전대책
제14차	2017. 11. 09.	서울(종로) 국가건축정책위원회 회의실	▸ 광화문광장 조성 기본계획 ▸ 거주자 우선주차장 공유사업 ▸ 기획단 행사 계획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2018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논의
제15차	2017. 12. 14.	인천국제공항	▸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현장방문
제16차	2018. 01. 11.	서울(중구) 코리아나호텔	▸ 지진에 안전한 목조건축물 관련 보고 및 토론 ▸ 제4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이임식

제1차 합동연석회의(2016. 02. 05.)

제1차 합동연석회의에서는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설립 목적과 역할 등 정체성을 제해성 위원장이 재확인하였고, 제4기 위원회의 3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정책조정분과위원회, 국토환경디자인분과위원회, 건축문화진흥분과위원회) 위원 및 위원회의 운영 방안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가) 합동연석회의 개최는 매월 두 번째 목요일로 잠정 결정
나) 분과회의는 매월 세 번째 목요일이 있는 주(합동연석회의 다음 주)에 나누어서 개최하되 연휴를 고려한 전체 운영 일정 등을 감안하여 결정

또한, '건축도시박물관 건립 기획' T/F(안) 논의에서 김정곤 · 박은실 · 하미경 위원이 참여하기로 하였다.

제2차 합동연석회의(2016. 03. 10.)

제2차 합동연석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임기 동안 활동방향과 주요 의제를 분과위원회별로 선정 · 추진하는 계획
나) 주요 안건 보고와 포럼 및 자문단 구성 운영 계획
다) '전국순회 건축 · 도시정책 포럼', '시 · 도 공무원 워크숍' 등 주요 행사 계획

주요 안건으로 OCS사 조경훈 대표의 '볼리비아 산타크루스 신도시 수주', 국토교통부(녹색건축과) 및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업무보고가 있었다.

기타 추진과제로 선정된 '유휴 공공기관 건물 재활용', '건축교육 및 자격증제도 점검', '한옥정책 기반구축', '친환경 건축 관련 준공 후 관리 운영 제도화' 등의 추진 방안과 향후계획이 논의되었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제4장(자문단)에 근거한 자문단 구성 · 직무 등에 관한 논의도 있었다. 건축산업의 미래 이슈를 공유하고 대응 전략 등을 논의하기 위해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중심이 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미래건축포럼'을 구성 · 운영하기로 하였다.

'학교시설 복합화 활성화'를 위해 관계 전문가를 포함하여 자문단을 구성하기로 하였다.

주요 행사 계획으로 '전국순회 건축 · 도시정책 포럼'과 '시 · 도 공무원 워크숍'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제3차 합동연석회의(2016. 04. 21.)

제3차 합동연석회의에서는 제1차 연석회의 · 분과회의 결과 및 추진 계획을 공유하였고 제2차 연석회의 안건(볼리비아 산타크루스 신도시 수주 관련,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실 업무보고,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업무보고)과 포럼 및 자문단 구성 · 운영계획, 주요 행사 계획(전국순회포럼, 공무원 워크숍)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제3차 합동연석회의 주요 안건 보고는 다음과 같다.

가)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실) 업무보고 결과 도시재생, 건축문화 진흥, 공공디자인 개선 등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서로 협력해서 추진 가능한 정책과 사업 발굴의 필요성이 제안되었다.

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업무보고에서 연구결과가 상품화되고 소비자가 누릴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고 스마트도시나 중 · 소규모 주택 표준화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업무보고에서 제도권 밖의 소형건축물의 건설, 건설산업 기능인력 양성, 새로 개발된 기술의 산업화 등과 관련한 제도 연구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위원회와 함께 연구 추진하는 방안도 제안되었다.

제4차 합동연석회의(2016. 05. 12.)

제4차 합동연석회의에서는 제3차 연석회의 · 분과회의 결과 및 추진 계획, 안건 보고 3건(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업무보고,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업무보고), 포럼 및 자문단 활동 보고, 주요 행사 계획(전국순회포럼, 공무원 워크숍)을 논의하였다.

가) 주요 안건에 관한 논의

① 제로에너지빌딩 조기 활성화 방안(국토교통부)

㉮ 빌딩 조성 이후 성능에 대한 사후 유지관리 시스템이 필요

㉯ 민간부문의 활성화를 위해 건축비용 추가 발생분에 대한 인센티브 필요

㉰ 향후 신축 건축물 감소 등 투자 위축에 대비한 접근 필요

② 군(軍) 주거정책 발전방안 지원(국방부)

㉮ 군 주거정책 발전방안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자문 지원 등

㉯ 부처 간 협업을 통한 발전방안 협의 추진(국가건축정책위원회, 국토교통부, 국방부, 한국토지주택공사)

㉰ 관사 신축 또는 대체 지원 방안(주택도시기금 및 금융제도 활용 등)

나) 제4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중점 추진 과제 논의

① 미래건축포럼 중점 추진 과제

② 3개 분과위별(정책조정분과, 국토환경디자인분과, 건축문화진흥분과) 중점 추진 과제

다) 2016년도 전국순회포럼 및 시 · 도 공무원 워크숍 개최 행사 논의

①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주요 정책 소개

② 지역 이슈에 대한 전문가 발제 및 토의에 관한 사항

③ 전문가 특강 및 지방자치단체 특수 시책 발표 등

▶ 제5차 합동연석회의(2016. 06. 09.)

제5차 합동연석회의에서는 제4차 연석회의 · 분과회의 결과 및 향후 추진 계획이 논의되었고,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주요 안건 논의, 주요 행사 계획(순회포럼), 시 · 도 공무원 워크숍 순으로 진행되었다.

가)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문화특화지역 · 생활문화센터)

① 「지역문화진흥법」에 근거한 문화도시 지정을 위해 수립 중인 '문화도시 지정 가이드라인'은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검토 필요

② 부처별로 추진되는 사업들의 관점이 서로 다르지 않도록 통합 · 조정 · 자문 등을 통한 연계성 강화로 시너지 효과 극대화 기대

나) 소규모 건축물 지원 방안(건축지원센터)

① '건축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소규모 사업자를 등록 · 관리하고 건축주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건축업계와 연결 역할 수행

② 건축지원센터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그 외에 신뢰성 있는 기관에 설립

- 건축업자와 건축주에게 소정의 수수료 징수

③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신뢰 및 준공 하자보증 등 새로운 시장 형성으로 일자리 창출 기대

④ 안전 및 경관 향상 등 기대

-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등과 협의하여 구체적인 시행방안 검토
- 공공성이 강조된 법적 개입의 정당성을 위해 타 기관이 추진한 다양한 연구 및 사업 현황 논의

다) 전국순회 건축 · 도시정책포럼 및 2016년도 시 · 도 공무원 워크숍 등 행사계획에 관한 논의

제6차 합동연석회의(2016. 07. 21.)

제6차 합동연석회의에서는 제5차 연석회의 · 분과회의 결과 및 향후 추진 계획이 보고되었고, 안건으로 상정된 UIA조직위원회의 UIA 2017 서울 세계건축대회 추진 현황,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의 경부고속도로 서울구간 입체화 추진 계획,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홍보 동영상, 미래건축포럼 추진(안), 주요 행사 계획 및 분과회의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고 조치 계획을 논의하였다.

제7차 합동연석회의(2016. 09. 08.)

제7차 합동연석회의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 선도사업 추진 보고,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미래건축포럼 추진 현황, 하반기 주요 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향후계획을 논의하였다. 그중에서 미래건축포럼은 건축산업의 미래 이슈를 공유하고 대응 전략 등을 논의하기 위해 추진하기로 한 포럼이며 제4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 주최하기로 하였다.

제8차 합동연석회의(2017. 01. 12.)



▲ 제8차 합동연석회의(2017. 01. 12.)

제8차 합동연석회의에서는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2017년에 추진할 주요사업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추진 필요성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가) 다세대 · 다가구 주택의 주차공간 확대

나) 소규모 주택의 주거비용 지원 확대

다) 소규모 건축물의 하자보증제도 도입 방안 마련

라) 따뜻한 주거환경 조성

마)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 공간 지원

바) 축소 도시화 시대에 대응한 건축물관리방안 마련

사) 공원 등 공공공간 활성화 방안 마련

아) 기획단이 제시한 의견

① 단독주택 거주자들도 아파트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피하우스 등 관련 제도 활성화 필요

② 철도변 녹지공간에 지역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시설을 설치하는 등 자투리 공간의 사회적 효용 가치 증대를 위한 정책 제안 필요

제9차 합동연석회의(2017. 02. 09.)

제9차 합동연석회의에서는 2017년도 정책연구를 위한 과제 선정 등을 주요 의제로 논의하였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 · 기획단에서 연구 과제 10건에 대한 발주 타당성 검토자료가 제출되었으며 이를 근거로 합동연석회의에서 연구용역의 필요성, 타 기관 수행 가능성, 선행연구 여부, 연구결과 활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2건의 과제와 1건의 예비과제를 선정하였다.

가) 과제 1 : 도시 공공공간 이용 활성화를 위한 민간역량 활용방안

나) 과제 2 : 소규모 건축물 하자보증제도 개선 및 주택성능인증제도 방안 마련

다) 예비과제 : 지방 중소도시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개보수 방안 모색

〈표 4〉 2017년도 정책연구과제(안)

연번	과제명	발주사유	검토결과
1	**도시 공공공간 이용 활성화를 위한 민간역량 활용방안**	상반기 미래건축포럼 주제(예정)로서 포럼 개최가 용이하고, 민생 관련 주요 이슈에 해당	▸ 도시공원 등 공공공간은 예산 부족, 전문성 부재 등의 이유로 시민이 요구하는 다양한 체험 활동 및 콘텐츠를 제공하지 못하는 실정임 ▸ 이로 인해 공공공간 이용률과 만족도가 낮아지고 있는 가운데 민간자본과 아이디어를 활용한 공공공간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됨 ▸ 도시공원의 공공성과 민간자본의 사익성을 균형 잡힌 시각에서 연구 필요 (참고) 일본에서는 도시공원을 공익단체에서 관리하면서 커피전문점 등을 유치하여 주민의 도시공원 이용이 늘어나는 사례도 있음
	〈선행연구〉	• 송병록(2010), 민간자본 유치 활성화를 통한 안정적 해안권 개발사업 추진방안 연구, 국토교통부 • 손동필(2016), 민영공원 제도 신설에 따른 수익적 시설 기준 마련 연구, 국토교통부	
2	**소규모 건축물의 하자보증제도 개선 및 주택성능 인증제도 방안 마련**	소규모 건축물의 활성화 및 안심 집짓기의 실질적인 수행방안 마련 차원 후속 연구 추진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16년 정책과제인 '소규모 주택 건축 활성화를 위한 안심 집짓기 정책 방안'의 연구 결과 제시된 방안들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소규모 주택의 하자보증 제도 개선 및 주택성능인증제도 도입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및 실행 방안에 관한 연구는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소규모 주택의 하자 보증이 어려운 이유는 건설 및 보증 주체의 규모 문제가 있으므로, 실행력 있는 연구 결과 도출을 위해서는 조사 · 분석 등의 기존 연구 방법보다는 별도의 보증 대행 기관이나 보험 증권 문제에 대한 이해 관계자들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한 대안 도출이 가능한 연구기관 선정이 필요하다고 봄
	〈선행연구〉	• 박상남(2015), 소규모 건축물 리뉴얼 활성화 방안 연구, 국토교통부 • 김은희(2016), 소규모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여혜진(2016), 건축물 사용설명서 도입에 관한 정책 방향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국가건축정책위원회 요청) • 성은영(2016), 소규모 주택 건축 활성화를 위한 안심 집짓기 정책 방안, 건축도시공간연구소(국가건축정책위원회 요청)	

연번	과제명	발주사유	검토결과
3	**지방 중소도시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개보수 방안 모색**	지방 소재 30년 경과 연립, 다세대 등 소규모 공동주택의 실태 예비조사를 토대로 소규모 공동주택 처리 방안 제안	▸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은 아파트에 비하여 거주자 규모가 적어 입주자협의회 및 공동 규약의 제재 범위에 해당하지 않고, 단독주택에 비해서는 거주자 규모가 많아서 주민협의를 통한 건물의 외부 관리가 어려운 것이 현실임 ▸ 이러한 특성 및 입지적 제약으로 개발 압력이 작아 주택이 노후할수록 가치하락으로 저소득층이 거주하여 주거지 관리가 더욱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으므로 이에 대한 현황 실태조사와 개보수 지원 방안 마련에 대한 연구가 매우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실태조사도 안 된 상황에서 연구를 추진하면 실행력 있는 연구가 되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선행할 수 있는 연구를 한 이후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선행연구〉	• 윤영선(2011),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국토교통부 • 염철호(2014), 노후 대규모 공동주택의 단지재생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4	**학교 건축물 안전 개선방안**	2016년 경주지역 지진 후 속조치로 내진설계가 되지 않은 학교 건축물 안전 개선방안 제시가 시급	▸ 제시한 연구 취지를 고려할 때 내진보강 우선 연구대상으로서 학교건축물 선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 따라서 동 사안에 대해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차원에서 연구를 요청할 필요성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실행 내용에 대한 연구는 소관 부처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선행연구〉	• 이호진(2009), 학교시설 개축 및 내진화 판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연구, 교육부 • 김은희(2015), 건축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감리제도 개선방향 기초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5	**학교시설 개선을 통한 방과후 (초등 학생) 학교 설치 및 운영방안**	학교시설을 활용하여 초등생 대상 방과후 학교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보육환경 개선을 통해 저출산 해법 모색 (건축과 보육 환경의 결합 방법)	▸ 현재 방과후 학습에 대한 사항은 교육부에서 주관하여 추진하고 있음 ▸ 연구의 내용이 방과후 학교라는 것은 보육환경의 하드웨어 측면보다는 프로그램 운영상의 소프트웨어 측면에서의 환경조성이 클 것으로 생각되어 건축 분야에서는 추진에 여러 제약요소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오히려 교육부 소관 기관에서 주관하되, 물리적 시설 측면에서의 협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선행연구〉	• 서영숙(2006), 방과후 활동 운영시스템 개선방안, 기획재정부	
6	**유휴 공공건물의 활용방안**	농촌과 도시에 존재하는 유휴 공공건물의 재활용방안 강구	▸ 유휴 공공건물의 활용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지역 단위의 공공시설 수급 현황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나 그 방법론이 정립되어 있지 않음 ▸ 현재 과제대로 연구용역이 수행된다면 개별 사례 중심의 수박 겉핥기식 연구가 될 우려가 높고 현장에 적용할 만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기 곤란할 것으로 보이므로 필요하다면 실태조사를 위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연번	과제명	발주사유	검토결과
6	〈선행연구〉	• 우주희(2009), 소외지역 유휴시설 활용 문화공간조성 실태분석 및 발전방안, 문화체육관광부 • 김은희(2015), 공공건축물 활용성 제고를 위한 리모델링 정책 지원 및 제도개선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성은영(2016), 지역 맞춤형 공공건축 복합화 실행 모델 개발을 위한 실태조사 및 정책 개선 방향,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이종민(2016), 유휴공간의 전략적 활용 체계 구축 방안, 건축도시공간연구소	
7	**도시 빈집 활용 방안**	농촌 빈집에 이어 최근에 도시에서 빈집 증가.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최근 빈집과 관련되어 법령 제정, 이와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공공기관에서도 기획 ·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다만, 현 시점에서 빈집에 대한 실태조사에 초점을 두고 공간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시점에서 실태조사 결과에 토대를 둔 실효성 있는 활용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됨 ▸ 이미 여러 공공기관에서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특별법 제정도 추진하고 있으므로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 독자적으로 연구 추진하는 것은 부처간 협업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봄
	〈선행연구〉	• 임유경(2015),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을 위한 실태조사 방법론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성은영(2016), 지역특성을 고려한 스마트 축소(shrinking-smart) 도시재생 전략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8	**한옥의 에너지 성능기준 설정**	한옥은 일반건축물을 대상으로 적용하는 에너지성능을 맞출 수 없으므로 한옥에 대한 독자적인 에너지 성능기준 마련	▸ 한옥의 에너지성능기준 설정에 대해서는 그간 여러 차례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던 문제점임 ▸ 현대 건축물과 동일한 기준에서 에너지성능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건축문화적 측면에서 오히려 한옥의 보급 확산을 저해하는 요소로도 작용하는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문제해결은 매우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가용예산이 한정적인 현 시점에서 동 연구 과제를 우선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지는 생각해 볼 사항임
	〈선행연구〉	• 김수암(2010), 한옥 환경성 평가 및 한옥건축 활성화 추진방안 연구, 국토교통부	
9	**평창올림픽 경기장의 사후 활용방안**	평창올림픽이 2018년 개최되는데 이후 이들 경기장을 활용하는 방안을 사전에 강구 필요	▸ 현 상황을 고려할 때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의 연구는 사회적 논란에 휩싸일 우려가 있음 ▸ 또한 동 과제에 대한 연구를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선행연구〉	• 이동원(2013), 동계올림픽경기장 사후활용 계획 수립, 강원도 • 고동환(2014), 남동체육관 수익사업 등 사후활용 연구용역,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 우지원(2014),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계획 변경방안 마련 연구, 해양수산부 • 김태동(2016), 평창동계올림픽 슬라이딩센터 전략적 사후관리 및 이행계획 수립용역, 강원도	

연번	과제명	발주사유	검토결과
10	**고령화(1인가구) 증가에 따른 지역 주거환경 대응 방안 (공간설계 중심으로)**	초고령화 사회 진입 및 1인 가구 증가 추세에 따라 주거환경 변화 대응 필요. 이에 따라 미래 다양한 주거유형 수요 대비 새로운 주거환경 대응방안 모색	▸ 고령사회,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주거환경 대응연구는 국토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연구원을 비롯하여 학계에서도 선행연구가 많음 ▸ 필요하다면 선행연구와 차별성을 가진 정책방향을 설정한 이후에 연구범위와 정책대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선정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됨
	〈선행연구〉	• 박신영(2004), 고령사회에 대비한 주거환경 개선 방안, 보건복지부 • 박신영(2006), 고령사회 주거지원 종합대책, 보건복지부 • 박신영(2006), 고령자 주거지원 중장기 계획 및 고령자 주거지원법안 마련을 위한 연구, 국토교통부 • 이재훈(2007), 미래 주거환경비전 연구, 국토교통부 • 이재훈(2008), 미래주거환경 전략 추진을 위한 지표조사 연구, 국토교통부 • 배성우(2014), 노인주거복지시설 프로그램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보건복지부 • 김승근(2013), 고령자 공동이용시설 사례조사 및 모델 연구, 농림축산식품부 • 백경현(2015), 부모와 함께 살기 편리한 주거시설 공급 활성화 방안 설문조사, 교육부	

아울러 9차 회의에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법률안(2017. 01. 24. 민홍철 대표 발의)을 논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소규모 건축물의 품질향상을 위해 건축주 직접 시공 대상 건축물의 범위 조정이 필요하다는 법률 개정 방향은 타당하나, 이해 관계자의 의견이 다양하므로 충분한 논의 및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제시함



▲ 롯데월드타워 현장 방문(2017. 03. 09.)

제10차 합동연석회의(2017. 03. 09.)

제10차 합동연석회의에서는 최근 개장된 잠실 롯데월드타워를 방문하였다. 현장에서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 12명과 기획단은 초고층 건물의 구조, 피난시설을 둘러보고 현장 설명을 청취하였다.

제11차 합동연석회의(2017. 04. 13.)

제11차 합동연석회의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대림아크로빌파크타워 108동 1층 비즈니스룸에서 개최하고, 회의 시작 전 단지 현장을 방문하여 스카이라운지, 주민운동시설, 커뮤니티센터, 어린이집, 아파트 내부 등을 견학한 후 다음 사항을 논의하였다.

가)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 2017년도에 발주할 연구 과제에 대한 우선 순위와 연구 방향을 제시하고, 소규모 건축물과 관련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건축업계 의견도 논의함

나) 건축진흥원 설립 진행사항 관련

① 건축진흥원 설립이 새 정부 정책에 반영되려면 부처 간 의견을 조정하여야 하고 전략적인 의견전달 및 인식제고가 필요함

② 건축진흥원 설립을 통해 소규모 건축물(다세대 · 다가구)과 관련된 취약한 건축서비스산업 분야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③ 인프라 중심의 도시재생뿐 아니라 '건축재생'에 대한 검토도 필요함

다) 감리제도 개선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① 최근 감리제도 개선이 시공단계에 설계자의 현장참여 및 피드백을 차단하여 설계 수준을 저하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어 우려됨

② 시공 과정에 대한 공공 감시를 강화하는 것은 좋으나, 설계자의 현장참여도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및 검토가 필요함

제12차 합동연석회의(2017. 06. 08.)

제12차 합동연석회의에서는 2017년 신규 추진 용역 2건의 착수 보고 및 '전국순회 건축 · 도시 정책 포럼' 계획 보고를 안건으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가) '도시 공공공간 이용 활성화 연구' 착수 보고(건축도시공간연구소 김용국 박사)

① 새 정부 어젠다인 '저층 주거지 도시재생'을 위해 공공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중점을 두고 연구 진행 필요

② 노후 상업지구 및 주거지 재생과 공공공간을 결합하는 방안 검토
③ 일본 사례의 성공 요인과 과거 우리의 실패 요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기업은 헌신이 아닌 이윤이라는 동기부여 메커니즘 등 경제적 가치를 명확히 제시할 필요
④ 장단기 과제를 도출한 후 선택과 집중을 통해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사례 발굴, 제도 개선 건의 등 검토 필요

나) '소규모 주택 건축 품질관리 연구' 착수 보고(건축도시공간연구소 성은영 박사)
① 소규모 주택(다세대 주택이나 저층 주거지(주택))의 개념 명확화 필요(60㎡ 이하 주택으로 오해의 소지 있음)
②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와 같은 공공사업자가 다세대, 다가구 주택 등을 건설할 때 적용할 수 있는 기준 제시 필요(용역 제목도 변경)
③ 과거 주택하자보험 제도 도입 추진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추진한 유사 연구사례도 참고 필요
④ 소규모 주택 개선이 도시재생의 실천적이고 가시적인 수단인 점을 부각
⑤ 소규모 주택 품질 향상이 주택 가격상승 요인으로 작용하여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지가 소멸될 우려도 있으므로 비용 상승 최소화 방안도 검토가 필요

▶ 제13차 합동연석회의(2017. 10. 13.)

제13차 합동연석회의에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계획과 고층 건축물 화재안전대책 추진 현황을 안건으로 논의하였다.

가)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① 도시재생사업이 성공하려면 공공인프라뿐만 아니라 필지단위 건축재생이 중요
② 사업 완료 후에도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주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예산 지원 필요
③ 정부에서 행정기관의 외곽 이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여 기존 구시가지 재생사업과 연계한 환경 조성 필요
④ 추진 가능한 실효성 있는 사업단지 확보가 중요하며, 재생사업 표준화(매뉴얼화)와 성과관리 방법에 대해서도 검토 필요

나) 고층 건축물 화재안전대책

① 고층 건축물 화재안전대책 내용이 「건축물관리법」에 포함되는 내용이므로 법안 제정 필요성(법 제정 동력으로 활용)도 함께 홍보 필요

② 건축물 내·외장재를 개선하여 습식공법이 건설공사 산업화에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도록 검토 필요

③ 화재 피해는 대부분 야간의 주거공간에서 일어나므로 16층 이상 주거시설의 화재안전대책도 검토 필요



▲ 제13차 합동연석회의(2017. 10. 13.)

제14차 합동연석회의(2017. 11. 09.)

제14차 합동연석회의에서는 '광화문광장 조성 기본계획 등' 주요 안건이 논의되었다.

가) '광화문광장 조성 기본계획' 보고(서울연구원 임희지 박사) 논의 결과

①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의견 청취가 국가기관 전체와 협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향후 부처간 협의 필요

② 교통은 수단이 되어야 하며 시민을 위한 사업임을 강조할 필요가 있음

③ 역사적 측면을 고려할 때 광화문광장 개선사업이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강조하고 사회, 환경, 경제 등 다차원적인 가치를 고려한 계획 필요

④ 본 사업은 1차 연도 사업으로 시행하고 추후 영역 확장이 필요

나) '거주자 우선주차장' 공유사업보고(모두컴퍼니 대표 김동현) 논의 결과

① 주차장 공유사업은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

② 주차장 공유사업은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수익모델 창출이 어려운 실정임

③ 야간 학교 운동장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안전 문제 및 시간제한으로 인해 실행이 어려운 실정임. 향후 사업 진행과정에서 긴밀한 협조관계가 요구됨

다) 기획단 행사계획 및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주요 업무 추진계획 논의 결과

① '녹색건축대전' 수상작 중 위원들이 방문을 원하는 건축물 답사를 진행하는 것을 제안함

② '내집 사용설명서'는 법제화가 이뤄져야 범용화할 수 있음

③ '학교시설의 내진보강 개선방안' 공청회가 향후 추진할 건축물 안전 정책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④ 국가건축정책위원회 2018 주요 업무 계획은 제5기 위원회에서 제시함이 바람직하나, 제4기 위원회에서 제5기 위원회의 업무를 잇는 브리지 역할 수행이 필요함



▲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현장 방문(2017. 12. 14.)

제15차 합동연석회의(2017. 12. 14.)

제15차 합동연석회의에서는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현장을 방문하였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 11명과 기획단 직원들은 2018년 1월 개항을 앞둔 제2여객터미널에 대한 현황과 추가 활주로 확장 추진을 위한 제3단계 시공계획을 포함한 장래 계획까지 보고를 받았다.

제16차 합동연석회의(2018. 01. 11.)

제16차 합동연석회의에서는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주로 소형 건축물에 피해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여 건축물의 안전대책을 논의하고 제4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임기 만료에 따른 이임식도 가졌다.

국토교통부를 포함한 유관단체(산림청, 포항시청, 국립산림과학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외부 전문가로 초청된 명지대학교 박인석 교수 등 다수가 참여한 가운데 '지진에 안전한 목조건축물 관련 보고 및 토론'이 있었다.

가) 지진발생 피해가 있는 포항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협의하여 한 필지에 4~5층 규모의 목조 주택 건축을 시범사업으로 추진 필요

나) 지진에 대한 안전이 최우선이므로 주택 등 소규모 건축물의 콘크리트 구조체를 공업화된 목재로 우선 대체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전체적인 공업화 추진 필요

다) 현재 목재 생산력은 풍부하지 않지만 국민생활을 최상위로 보면 단계별로 자재의 국산화 추진 필요

라) 자재의 집성목(CLT), 접합부, 설계기준 등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개발 필요

위와 같이 제4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총 16차례의 합동연석회의에서 다양한 주제로 심도 있는 토론을 하였고, 정책에도 반영되는 성과가 있었다.

앞으로도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는 다양한 건축정책 방향에 대하여 관계 부처 및 전문가와 함께 폭넓은 논의를 거쳐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제4기 위원회의 합동연석회의를 마무리하였다.

제 3 절
분과회의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건축기본법」제13조 제4항 및「건축기본법 시행령」제10조에 의거 소관사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위원장 및 위원은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도록 되어 있다. 제4기 위원회에서는 각 분과(정책조정분과, 국토환경디자인분과, 건축문화진흥분과)의 위원장을 각각 지정하고 분과 간 원활한 의견소통과 정책의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국가건축정책위원회 운영세칙」제7조 제5항에 의거 위촉위원 1명이 2개 분과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였다.

1. 정책조정분과회의

「건축기본법 시행령」제10조의 규정에서 정한 정책조정분과회의의 심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건축정책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중앙행정기관 간 건축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기획 · 설계 등에 대한 심의 · 조정
4) 건축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5)「건축기본법」제26조 제2항에 따른 한국건축규정 내용의 개선 · 보완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다른 분과위원회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 하는 사항 등

제4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는 총 10회의 정책조정분과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정책조정분과회의에서 논의한 안건은 〈표 5〉와 같다.

〈표 5〉 제4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정책조정분과회의

회차	일시	장소	주요 내용(안건 등)
제1차	2016. 02. 24.	서울(종로) 국가건축정책위원회 회의실	▸ 정책조정분과 과제 추진 방향 ▸ 건축정책기본계획, 학교시설 복합화 방안
제2차	2016. 03. 18.	서울(종로) 국가건축정책위원회 회의실	▸ 주민과 함께하는 학교 만들기 자문단 운영 계획 ▸ 국가 공공건축물 수급관리 기본계획 도입 방안
제3차	2016. 05. 27.	서울(종로) 국가건축정책위원회 회의실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 ▸ 건축물 사용설명서 연구 방안
제4차	2016. 06. 16.	서울(종로) 국가건축정책위원회 회의실	▸ 제로에너지빌딩 활성화 실증단지 구축방안 ▸ 소규모 건축물 시장 활성화
제5차	2016. 07. 15.	서울(종로) 국가건축정책위원회 회의실	▸ 정책조정분과 어젠다 및 활동 계획 ▸ 건축물 사용설명서 도입 방안
제6차	2016. 10. 28.	서울(종로) 국가건축정책위원회 회의실	▸ 현장 방문(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신촌 도시재생 사업지역)
제7차	2016. 12. 16.	서울(종로) 국가건축정책위원회 회의실	▸ 학교 등 공공건축물 안전성 개선 방안 ▸ 공공건축물 효율적 관리 방안
제8차	2017. 03. 17.	서울(종로) 국가건축정책위원회 회의실	▸ 학교 등 공공건축물 안전성 개선 방안 ▸ 소규모 주택 건축 품질관리 방안 용역
제9차	2017. 06. 16.	서울(종로) 국가건축정책위원회 회의실	▸ 아파트 Farm 조성 방안 ▸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주요 내용 및 향후계획
제10차	2017. 09. 15.	서울(종로) 국가건축정책위원회 회의실	▸ 「건축물 관리법」 제정 추진 현황 ▸ 내 집 사용설명서 제작 용역

▶ 제1차 정책조정분과회의(2016. 02. 24.)

위원들의 추천이 있어 윤혁경 위원을 정책조정분과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정례회의는 매월 세 번째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최하기로 하였다.

'건축정책 기본계획' 및 '미래정책개발을 위한 건축 분야 통계개선방안 연구' 보고에 대해 진행 방향을 논의하고 자문위원으로 김현아 위원을 추천했다. '학교시설 복합화(효과적 활용 방안) 활성화' 및

'실내건축 전문가 제도 도입 및 양성화 방안' 보고에 대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정책방향을 논의하였다.

향후에는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관련 부처, 광역자치단체, 연구기관, 관련 단체 등의 정책 추진현황을 보고 받고 정책제언 등 대응방안을 논의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제2차 정책조정분과회의(2016. 03. 18.)

4월까지 정책조정분과에서 다룰 어젠다를 선정하고 5~6월에는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주민과 함께하는 학교 만들기 자문단' 운영계획 보고에 대해 위원 중 1명이 자문단 활동에 참여하고 쉽게 이해시킬 수 있는 홍보 리플릿 제작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가 공공건축물 수급관리 기본계획 도입방안 연구 용역' 보고에 대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이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과 협력하고 효과 분석과 구체적인 방안 마련 등을 위한 후속 연구 추진 검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실내건축 제도화 · 자격 등을 통해 국민이 받는 혜택에 대한 논의 필요성, 국민행복과 직결되어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건설산업기본법」 개선 검토 필요성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제3차 정책조정분과회의(2016. 05. 27.)

건축 5단체장 간담회를 재개하고 건설단체 등과도 교류를 추진하기로 하고, 규제 투명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한국건축규정(e-KBC)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전문가 의견 수렴을 위해 '주민과 함께하는 학교 만들기 자문단' 심포지엄 개최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국가 공공건축물 수급관리 기본계획 도입 방안',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 '건축물 사용설명서 연구' 보고에 대해 과제별 현황 파악 및 향후 추진 방향 등을 논의하였다.

제4차 정책조정분과회의(2016. 06. 16.)

명지대학교 이명주 교수가 발제한 '제로에너지빌딩 활성화 실증단지 구축 및 관련제도 개선안'에 대해서는 유지 관리가 중요하므로 이와 관련한 기반 구축과 비용 문제 해결 등이 필요하고, 설득 자료가 준비되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건축물 사용설명서'는 2017년까지 법제화 방안 마련을 최종 목표로 추진하고, 국토교통부의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보고에 대해서는 설계뿐만 아니라 엔지니어링, 인테리어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주민과 함께하는 학교 만들기'는 2016년 안에 시범사업 1개소라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제5차 정책조정분과회의(2016. 07. 15.)

제4차 회의 결과 및 추진 계획이 보고되었고, 안건으로 상정된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이용자 편의를 위한 건축물 사용설명서 도입 추진, 미래정책 환경 대응을 위한 건축 분야 통계 개선 방안, 정책조정분과 어젠다 및 활동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고 추진 방향과 향후계획을 논의하였다.

제6차 정책조정분과회의(2016. 10. 28.)

신촌 도시재생시범사업 및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현장을 방문하여 지역의 도시재생 추진 상황을 둘러보고, 전문가와 주민이 참여하여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와 정책 소통을 하였다.



▲ 신촌 · 연세로 현장 방문(2016. 10. 28.)

제7차 정책조정분과회의(2016. 12. 16.)

국토교통부의 제로에너지 건축 활성화 추진 계획,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건축물 사용설명서 도입 추진 연구 결과, 공공건축물의 효율적 관리방안 향후계획,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 추진현황,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한국건축규정(e-KBC) 추진 현황,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기획단의 학교 등 공공건축물 안전성 개선 방안에 대해 보고를 받고 정책방향과 향후계획을 논의하였다.

제8차 정책조정분과회의(2017. 03. 17.)

그동안 정책조정분과에서 다룬 과제는 남은 기간 동안 구체화하고 발전시키기로 하였다. '주민과

함께하는 학교 만들기 자문단 활동'에 대해서는 부모 반발 및 어린이 안전문제 등을 염려하는 교육청 입장, 예산 확보 어려움 등으로 사업화에는 한계가 있어 자문단 활동을 종료키로 결정했다.

'학교 등 공공건축물 안전성 개선 방안'은 집중적인 운영을 위해 최창식 위원을 중심으로 T/F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하였다.

'소규모 주택 건축 품질관리 방안' 용역은 신속히 추진하고, '건축물 사용설명서 도입'은 대한건축사협회에서 샘플 개발을 추진한 후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제9차 정책조정분과회의(2017. 06. 16.)

국토교통부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주요 내용 보고에 대하여 소규모 주택은 아파트보다 건축비가 더 많이 든다는 인식을 갖고 개발밀도를 더 높이는 등 대안을 마련하여 고품질의 주택이 지어질 수 있도록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고, 사업활성화를 위해서는 인센티브 부여방안도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아파트 Farm 조성 방안'은 권장하는 차원이 적절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협조하여 시범사업으로 추진이 필요하며, 대한건축사협회의 '건축물 사용설명서 도입' 연구 방안 보고에 대하여는 정보공개 범위 및 유지관리방법 등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였다.

'학교 등 공공건축물 안전성 개선 T/F'를 구성해 7월부터 회의 개최 등 본격 활동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제10차 정책조정분과회의(2017. 09. 15.)

국토교통부의 '「건축물 관리법」 제정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향후 제도가 잘 설계될 수 있도록 법 적용범위의 재검토, 유지관리산업 육성에 대한 내용 포함의 필요성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대한건축사협회가 추진한 '내 집 사용설명서 제작 용역'은 마무리 단계이므로, 국토교통부 보고 후 최종 마무리된 용역 결과를 위원회에 공유하도록 제시하였다.

'학교 안전성 개선 T/F'에서 도출한 내용을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하고, 공청회 개최 후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관련 부처에 정책제언을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2. 국토환경디자인분과회의

「건축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서 정한 국토환경디자인분과회의의 심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디자인 향상에 관한 사항
2) 「건축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3) 「건축기본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에 따른 민간전문가 추천에 관한 사항
4) 지속 가능한 경관조성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등

제4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는 총13회의 국토환경디자인분과회의를 개최하였으며, 논의한 안건은 〈표 6〉과 같다.

〈표 6〉 제4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국토환경디자인분과회의

회차	일시	장소	주요 내용(안건 등)
제1차	2016. 03. 02.	서울(종로) 국가건축정책위원회 회의실	▸ 분과 중점 이슈 등 제안과제 논의 ▸ 분과 운영계획 전반
제2차	2016. 03. 16.	서울(종로) 국가건축정책위원회 회의실	▸ 유시티(U-city) 및 스마트시티(Smart City) 사업 논의 ▸ 통일 대비 국토계획 전략 및 방향 관련 논의
제3차	2016. 05. 25.	서울(종로) 국가건축정책위원회 회의실	▸ 해외도시개발지원센터 주요 업무보고 ▸ 통일준비위원회 및 국방부 업무지원 관련 현장방문 추진
제4차	2016. 06. 15.	서울(종로) 국가건축정책위원회 회의실	▸ 국방부 군 주거정책 업무보고 및 논의 ▸ 스마트시티 관련 연구용역 추진
제5차	2016. 07. 21.	서울(종로) 국가건축정책위원회 회의실	▸ 건축산업 해외진출 활성화 TF 결과 보고 및 논의 ▸ 스마트시티 관련 연구용역 추진 보고
제6차	2016. 09. 21.	서울(종로) 국가건축정책위원회 회의실	▸ 세계선도형 스마트시티 구축사업 진행상황 보고 ▸ 한국토지주택공사 군 주거 지원사업 추진현황 보고

회차	일시	장소	주요 내용(안건 등)
제7차	2016. 10. 19.	서울(종로) 국가건축정책위원회 회의실	▸ 스마트시티 관련 연구용역 진행상황 보고 및 논의 ▸ 광역버스 환승센터 관련 보고
제8차	2017. 01. 18.	서울(종로) 국가건축정책위원회 회의실	▸ 국방부 군 주거정책 종합발전계획(안) 보고 및 논의 ▸ K-water 스마트 물순환 도시(송산 GC 중심) 보고
제9차	2017. 03. 15.	서울(종로) 국가건축정책위원회 회의실	▸ 스마트시티 국내외 동향과 세계 선도형 스마트시티 방향 보고 및 논의 ▸ 분과 중점 추진과제 제안 및 논의
제10차	2017. 06. 14.	서울(종로) 국가건축정책위원회 회의실	▸ 도시 생산장소 '혁신공간' 만들기
제11차	2017. 08. 16.	서울(종로) 국가건축정책위원회 회의실	▸ 제4차 산업혁명과 메이커
제12차	2017. 10. 25.	서울(종로) 국가건축정책위원회 회의실	▸ 장수명주택의 실용화와 정책방향
제13차	2017. 12. 27.	서울(종로) 국가건축정책위원회 회의실	▸ 건축사 설명의무 ▸ 모바일 공사 감리 어플 '아키엠' 소개

▶ 제1차 국토환경디자인분과회의(2016. 03. 02.)

위원들의 추천이 있어 김도년 위원을 국토환경디자인분과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건축정책 기본 계획' 및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경관정책 기본계획' 보고에 대해 정책별 기본정책 수립은 정책추진의 성과이나, 추진전략 집행에 있어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정책성과를 도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각 기관에서 추진하는 미래건축 정책과 관련하여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통합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를 융 · 통합하여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제2차 국토환경디자인분과회의(2016. 03. 16.)

토지주택연구원(LHI) 조영태 연구위원이 발제한 '유시티(U-city) 고도화를 위한 핵심 기반기술 개발 연구' 추진상황 보고에 대해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부처별 스마트시티 정책 논의의 장을 마련하

여 창의적인 방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담론을 주도할 필요가 있고, 국토교통부와 미래창조과학부 등 각 부처에서 추진 중인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에 대해 보고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도시 · 건축 분야 안건 발굴을 위해서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통일준비위원회의 교류 필요성 등 통일 대비 국토계획 전략 및 방향에 관해 논의하였다.

제3차 국토환경디자인분과회의(2016. 05. 25.)

한국토지주택공사 해외도시개발지원센터 정운섭 부장으로부터 '해외도시개발지원센터 주요 업무' 보고를 받은 후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기획재정부, 외교부, 수출입은행 등 해외진출 지원기관 간 논의의 장을 마련할 것과 향후 통일준비위원회 업무지원을 위해 5월 30일부터 31일까지 DMZ 세계평화생태공원 후보지를 방문하고, 국방부 업무지원을 위해 낙후 군 관사를 6월 1일에 방문하기로 하였다.



▲ 제3차 국토환경디자인분과회의(2016. 05. 25.)

제4차 국토환경디자인분과회의(2016. 06. 15.)

국방부의 '군 주거정책 업무보고'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군 주거지원 사업 보고'에 대해 군 관사 방문(2016. 06. 01.) 이후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하며 향후 국토환경디자인분과에서 주관할 것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관련 부처 설득을 위해서 먼저 군 관사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가이드라인을 수립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국토환경디자인분과에서 주관하여 기획재정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관련 기관 대책회의를 마련하는 등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후 '스마트시티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책방안 연구' 추진계획의 내용 및 예산을 점검했다.

마지막으로 군 주거정책 지원을 위해 화천과 파주의 낙후된 군부대 관사를 방문(2016. 06. 01.)하고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후보지인 파주, 철원, 고성 지역을 방문(2016. 05. 30. ~ 05. 31.)하는 등 국방부와 통일준비위원회 지원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향후 국토환경디자인분과에서 추진할 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제5차 국토환경디자인분과회의(2016. 07. 21.)

서울대학교 권영상 교수가 발제한 '건축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 T/F 결과보고'에 대해 관련 업계의 해외 진출을 활성화하려면 경제, 금융, 법률, F/S 등 사업 전반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 PM 조직을 구성하는 등 포괄적이고 체계화된 지원시스템이 필요하며, ODA에 대한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 정부부처의 전략적 접근 및 국가 차원의 지속적 논의가 필요하고, 향후 국내 관련 업계 진출을 도울 수 있는 장기적인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제6차 국토환경디자인분과회의(2016. 09. 21.)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조대연 스마트시티 국제협력단장이 발제한 '세계선도형 스마트시티 구축사업 보고'에 대해 비록 국가과학기술심의위원회가 컨트롤타워로서 보고를 받았더라도 '공간'과 관련해서는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주택기획처 이언영 부장이 '군 주거 지원사업 추진현황'을 보고한 후 기획재정부의 국유재산 세부지침 수립이 완료되면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니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및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 등을 요청하였다.



▲ 제6차 국토환경디자인분과회의(2016. 09. 21.)

마지막으로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광역버스 환승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불편사항 개선점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정규상 위원이 제안하였다.

제7차 국토환경디자인분과회의(2016. 10. 19.)

국토연구원 이재용 스마트 · 녹색도시연구센터장의 '스마트시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중간보고에 대해 스마트시티 산업지도 및 연구결과에 정책적 메시지와 조정 · 컨트롤을 하는 조직에 대한 언급이 필요하며, 이와 관련한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역할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후 정규상 위원이 발제한 '광역버스 환승센터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 보행자와 환승자 모두에게 편의 제공을 하도록 시범 개선사례를 만들고 별도의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것 등을 제안하였다.

제8차 국토환경디자인분과회의(2017. 01. 18.)

국방부 홍순정 주거정책팀장이 보고한 '군 주거정책 종합발전계획(안)'에 대해 재정지원에 대한 공감과 리스크 관리, 수익이 낮은 지역과 높은 지역을 통합하여 패키지화된 시범사업 개발 필요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였고 군인공제회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간 협력 및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국방부 간 협력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후 'K-water 물 순환도시'에 대한 한국수자원공사 K-water 융합연구원 물순환연구소 이상진 책임연구원의 발제에 대해 물순환 개념이 성공하려면 도시계획단계부터 선행적 검토와 도시를 만드는 기관 간 협력적 관계가 필요하다는 등의 내용을 논의했다.

제9차 국토환경디자인분과회의(2017. 03. 15.)

LG CNS 미래신사업부 유인상 팀장이 발제한 '스마트시티 국내외 동향과 세계선도형 스마트시티 방향'에 대해 도시가 아닌 사람을 위한 '스마트 라이프'로 생활중심의 접근이 스마트시티의

지향점이며, 여러 부처와 기관이 관련된 정책인 만큼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매개 역할 또는 분야 간 통합과 상승효과를 일으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제2차 건축정책기본계획'에 대한 관련 정부부처 진행상황이나 향후 과제에 대하여 국토환경디자인 측면에서 점검이 필요하고 해안 공공건축물 또는 건축경관의 건축적 접근에 대하여 분과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였다.

제10차 국토환경디자인분과회의(2017. 06. 14.)

서울주택도시공사 정낙현 부장이 발제한 '도시 생산장소 혁신공간 만들기'에 대해 정부의 일자리 창출정책과 연계하여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산업공간 확보 사업을 실시하여 확산모델을 개발한 후 민간 참여를 유도해야 하고 법률, 세무, 재무 등 자문을 통해 인큐베이팅 시스템 지원이 병행되어야 하며, 창업학교 출신 재원들의 선순환구조를 만들고 해외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유연한 공간활용 및 생산공간 확보를 위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추후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규제완화 및 법 · 제도 개선 등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세부적으로 정리하여 보고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제11차 국토환경디자인분과회의(2017. 08. 16.)

한국과학창의재단 김윤정 본부장이 발제한 '4차 산업혁명과 메이커'에 대해 도시재생적 측면에서의 지원방안 검토가 필요하고 유사사업의 실패원인 분석, 한국형 모델 경험을 가진 인력 구성, 메이커 네트워크 활성화, 민간과 정부 운영시설의 격차 해소, 거점형 스페이스 구축 등으로 성공사례를 구축하여 메이커 스페이스의 중요성과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며, 향후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주재로 도시재생과 메이커 스페이스에 대해 관련 부처 및 기관회의를 개최할 것을 제안하였다.

제12차 국토환경디자인분과회의(2017. 10. 25.)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박지영 수석연구원의 '장수명 주택의 실용화와 정책방향'의 보고에 대해 장수명주택의 상품화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먼저 층간소음, 용적률, 공사비 등 과거 제기

되었던 문제점을 해결해야 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모델을 제시하여 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시행 후 정리와 제도적 보완을 거쳐 부처, 공기업, 건설산업계 담론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 제13차 국토환경디자인분과회의(2017. 12. 27.)

'건축사 설명의무' 안건 보고에 대해 건축사 설명의무는 책임과 보상, 배상, 징벌과 연계해 추진해야 현실적 적용이 가능하고, 일본의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불합리한 설계비용 책정, 면허대여 등 소규모 주택건설 시장의 문제점을 양성화하고 '내 집 사용설명서' 제도를 병행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감리 애플리케이션 상용화를 위해서는 감리협회나 건축사협회를 통해 공공으로 사용하되, 감리 또는 건축 분야에 한정하지 말고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다.

3. 건축문화진흥분과회의

「건축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서 정한 건축문화진흥분과회의의 심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기초 건축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 운영에 관한 사항
3) 전문 건축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 운영에 관한 사항
4) 건축교육정책에 관한 사항
5) 건축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6) 우수 설계기법의 연구 지원 및 첨단기술의 개발 지원 사항 등

제4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는 총 11회의 건축문화진흥분과회의를 개최하였으며, 분과회의 등에서 논의한 주요 안건은 〈표 7〉과 같다.

〈표 7〉 제4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건축문화진흥분과회의

회차	일시	장소	주요 내용(안건 등)
제1차	2016. 02. 24.	서울(종로) 국가건축정책위원회 회의실	▸ 분과 중점 이슈 등 제안과제 논의 ▸ 분과 운영계획 전반
제2차	2016. 03. 16.	서울(종로) 국가건축정책위원회 회의실	▸ 건축교육제도 등 제안과제 세부 논의 ▸ 국립도시건축박물관 건립 및 연구 용역사업 보고
제3차	2016. 04. 20.	서울(종로) 국가건축정책위원회 회의실	▸ 한옥정책 관련 보고 및 논의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주요 행사 추진상황 보고 및 제안과제 논의
제4차	2016. 05. 18.	서울(종로) 국가건축정책위원회 회의실	▸ 건축학 · 건축공학 제도 관련 중점 추진 과제 선정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건축문화진흥 제안과제 논의
제5차	2016. 06. 15.	서울(종로) 국가건축정책위원회 회의실	▸ 건축학 · 건축공학 제도 관련 연구용역 추진 ▸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방송프로그램 기획 논의
제6차	2016. 07. 20.	서울(종로) 국가건축정책위원회 회의실	▸ 건축문화 진흥 방안 관련 제안과제 논의 ▸ 어린이 건축창의교실 사업 보고 및 참여 결정
제7차	2016. 10. 27.	서울(종로) 국가건축정책위원회 회의실	▸ 건축학 · 건축공학 교육제도 개선 연구 진행상황 보고 및 논의 ▸ 미래건축 아이디어 공모전 등 과제 제안
제8차	2017. 02. 22.	서울(종로) 국가건축정책위원회 회의실	▸ 국립박물관단지 조성사업 추진 경과 및 계획 보고 ▸ 분과 중점 추진과제 제안 및 논의
제9차	2017. 06. 14.	서울(종로) 국가건축정책위원회 회의실	▸ 서울형 자율주택정비사업 추진 경과 및 계획 보고 ▸ 행정중심복합도시 단독주택 특화계획
제10차	2017. 09. 20.	서울(종로) 국가건축정책위원회 회의실	▸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밀집지역 대상 도시재생 ▸ 정책 콘퍼런스 주제 논의
제11차	2017. 10. 18.	서울(종로) 국가건축정책위원회 회의실	▸ 미래형 주거단지 사례 연구

제1차 건축문화진흥분과회의(2016. 02. 24.)

위원들의 추천에 따라 김정곤 위원을 분과위원장으로 선임하고 '건축정책 기본계획' 및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 현황에 대해 보고를 받은 후 차기회의에서 '도시건축박물관 콘텐츠 개발 및 전시기획

연구'에 대해 관련 기관의 중간보고를 받기로 하였다.

아울러 건축정책 관련 부처 간 중복사업을 조정하고 유휴 공공기관 건물 재활용, 건축교육 및 자격증제도 점검, 한옥정책 기반구축, 준공 이후 친환경 건축에 대한 관리운영 제도화, 미래건축 등의 의제를 제안하였다.

제2차 건축문화진흥분과회의(2016. 03. 16.)

공공기관 유휴시설 활용방안 검토, 건축교육 관련 인증제도 및 자격증제도 보완 검토, 한옥정책 등 향후 분과위 추진과제 선정을 위한 제안과제에 대해 세부논의를 진행한 후 '세종시 국립박물관단지 조성사업 및 국립도시건축박물관 건립사업' 보고를 받고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 심경미 부연구위원이 브리핑한 '도시건축박물관 콘텐츠 개발 및 전시기획 연구' 추진상황에 대해 해외 박물관 사례 조사 자료 등을 공유하여 박물관 비전과 미션, 운영조직 등에 관해 논의하고 지역과 장소 중심에서 사람이 주가 되는 콘텐츠가 필요하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향후 한옥정책과 관련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등 유관기관 업무보고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제3차 건축문화진흥분과회의(2016. 04. 20.)

한옥정책과 한옥 R&D 사업, 한옥 공동주택사업에 대해 각각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이강민 국가한옥센터장과 명지대학교 한옥기술개발연구단 김왕직 단장,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개발단 이의영 단장이 보고한 후 문화진흥 차원에서 외교, 관광 등과 접목하여 한옥에 접근해야 하며 주택도시기금 등을 활용한 한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후 전국순회 건축 · 도시 정책포럼, 시 · 도 공무원 워크숍 등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주요 행사 추진상황을 보고받은 후, 차기 회의에서 '한옥원 건립' 및 '건축교육 개선' 제안과제에 대한 자문단 구성과 연구용역 추진 여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건축문화 진흥방안 등의 의제를 논의하기로 하였다.

제4차 건축문화진흥분과회의(2016. 05. 18.)

'건축학 · 건축공학 인증에 관한 제도개선(가칭)' 연구추진 과제 관련해서는 현 제도에 대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건축문화 진흥 제안과제인 '작지만 큰 집' 콘셉트 방송 프로그램 기획 추진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건축물과 우수한 건축가 소개 기획 등 공공성을 띤 방송사와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자문하였다.



▲ 제4차 건축문화진흥분과회의(2016. 05. 18.)

아울러 차기 합동연석회의에서 제3기 위원회에서 논의한 '2016 건축의 날 운영 개선(안)'과 관련한 논의와 문화마을사업 및 생활문화시설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다.

제5차 건축문화진흥분과회의(2016. 06. 15.)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심경미 부연구위원이 보고한 '도시건축박물관 콘텐츠 개발 및 전시기획 연구' 추진 현황에 대해 운영주체의 방향 및 설정에 따라 콘텐츠 개발 및 박물관 운영방안이 결정될 소지가 크므로 조속히 운영주체를 결정해야 하고 이와 관련한 외국 사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자문하였다. '건축학 · 건축공학 제도개선을 위한 기초연구'와 관련해서는 용역과 별개로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 관련 단체와 공개토론회 개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제6차 건축문화진흥분과회의(2016. 07. 20.)

대한건축사협회의 '2016 어린이 건축창의교실사업' 보고를 받은 후 국토교통부가 참여하지 않고 사업 규모가 축소되는 등 사업 여건에 변화가 있었으나 전국단위로 참여대상을 모집하는 등 행사의 의의를 감안하여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사업에 참여하기로 결정하였다. 다만 도심 내 대규모 신축

건물 홍보가 아닌 문화, 사회, 역사적 배경을 포함한 도시공간과 소규모 건축물 경험 등 균형 잡힌 프로그램으로 보완할 것을 자문하였다.

이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건축문화 진흥 방안으로 '작지만 큰 집' 콘셉트 방송 프로그램 기획과 우수사례 공모 등 공공이 추진하는 작은 규모의 건축물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향후 분과회의에서는 용산공원 조성방안 등 건축문화와 관련된 시사성 있는 사안에 대해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차원에서의 대응방안과 도시재생과 관련한 정책분과와의 공동답사 등 타 분과와의 정책적 연계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 제7차 건축문화진흥분과회의(2016. 10. 27.)

'건축학 · 건축공학 교육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연구' 진행상황을 대한건축학회 김용승 부회장으로부터 보고받고 연구용역이 당초 목적과 다르게 건축학 시각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현 건축학 · 건축공학 교육제도에 대해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해 보자는 당초 취지를 살려 연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도심 가로형 생활주택 활성화 방안', '50년 후 건축 아이디어 공모전' 등 향후 다룰 의제를 제안하였다.

▶ 제8차 건축문화진흥분과회의(2017. 02. 22.)

'국립박물관단지 조성사업 추진 경과 및 계획'에 대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문화박물관센터 김교년 학예연구관의 보고에 대해 추진과정에 박물관 운영 경험이 있는 주체가 참여하여 설계 과정에서 반영할 필요가 있고, 조직 및 예산과 함께 콘텐츠에 대한 고민 후 건립해야 하며, 대규모 박물관 조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별도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자문하였다.

'건축학 · 건축공학 교육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연구' 결과와 관련해서는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공론화를 위한 후속조치 방안을 모색하고 건축문화에 대한 관심 제고 및 인식 공유를 위해 국토교통부

및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부처와 간담회를 추진하고 자재를 표준화하여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표준평면 도입을 검토할 것 등을 자문하였다.

제9차 건축문화진흥분과회의(2017. 06. 14.)

'서울형 자율주택정비사업 추진 경과 및 계획'에 대한 서울주택도시공사 재생기획부 조준배 처장의 발제에 대해 필지별 유사기법 적용 및 구(區) 단위 낙후지역 개선계획과 연계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할 것과 사업공모 시 주민동의에 관한 사항, 3층 이상 노후건물에 대한 계획 보완, 주차장 문제와 밀도를 높이는 데 장애가 되는 제도 등 개선할 부분을 논의하였다.



▲ 제9차 건축문화진흥분과회의(2017. 06. 14.)

이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행정중심복합도시 단독주택 특화계획'에 대해 블록별 특화 실시 및 사업추진과정을 지방자치단체 등과 공유하고 표준디자인을 제시하는 등 사업자를 지원하고 건축규제 완화 및 제도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자문하였다.

제10차 건축문화진흥분과회의(2017. 09. 20.)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밀집지역 대상 도시재생' 관련 한국도시연구소 임미숙 박사의 발제에 대해 무엇보다도 주거환경 개선, 공동주택 개보수 지원 등 정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다세대주택의 환경 개선 대책이 시급하며,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새 사업모델을 개발하여 주민들 간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고 실제 살고 있는 임차인이 도시재생기금의 수혜자가 되도록 '젠트리피케이션, 주차문제' 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제11차 건축문화진흥분과회의(2017. 10. 18.)

서울주택도시공사 도시연구원 김진성 책임연구원이 발제한 '미래형 주거단지 사례연구'에 대해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여 최소한의 규제만 적용한 미래형 주거단지 통합개발 전략수립 및 기후변화에 따른 정부의 에너지정책 보완, 대규모 공동주택 시장 축소와 소규모 주택시장 확대 추세에 맞춰 아파트 수준의 공동시설을 포함한 공동주택 모델 제시 및 고령자와 청년 등을 위한 맞춤형 주거단지 공급 확대 등을 논의하였다.

또한 사회주택의 개념 및 정의에 대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여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사회주택 공급사업 활성화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자문하였다.

CHAPTER 3



제3장 위원회 활동

정책 분야

제1절 ▶ 미래건축포럼
제2절 ▶ 도시 공공공간 이용 활성화
제3절 ▶ 소규모 주택 건축 품질관리
제4절 ▶ 학교 내진 안전성 개선
제5절 ▶ 군(軍) 주거정책 발전방안 수립 지원
제6절 ▶ 건축물 사용설명서 제도 도입
제7절 ▶ 아파트 Farm 조성

행사 분야

제1절 ▶ 전국순회포럼
제2절 ▶ 시 · 도 건축 및 도시업무 담당 공무원 워크숍
제3절 ▶ 대한민국 녹색건축대전
제4절 ▶ 2016 어린이 건축창의교실
제5절 ▶ UIA 2017 서울 세계건축대회 전시 홍보

정책 분야

제 1 절
미래건축포럼

1. 추진 배경

신축 수요가 감소하고 기존 건축물이 노후화되면서 건축물 관리와 도시재생 부문에 대한 정책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소득수준이 향상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확대되면서 건축물의 품질과 성능 기준의 고도화가 시급하게 요구되는 등 미래 사회의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건축 분야의 정책개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전개되는 기술발전과 생활양식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여 가까운 미래에 새로운 건축의 모습을 제시하고, 우리나라 최대 강점인 정보통신기술이 적극적으로 도입되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임을 감안하여,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는 건축 분야의 미래 이슈를 공유하고 대응 전략 등을 논의하고자 '미래건축포럼'을 발족하기로 하였다.

초기에는 별도의 포럼위원을 구성하지 않고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주최하고 건축 · 미래 전문가,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참여하는 공개행사로 운영하는 등 기존 심포지엄식 토론 방식을 지양하고, 사람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간단한 발제와 전문가들의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2. 추진 경과

미래건축포럼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사전기획 회의를 2회(2016. 04. 05., 2016. 04. 21.)에 거쳐 실시하는 등 개최준비에 만전을 기하였다.

포럼주제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상황에 맞게 결정하였으며, 포럼은 총 4회 개최하였다.

제1차 포럼(2016. 09. 27.)은 '미래자동차와 건축과 도시'라는 주제로, 제2차 포럼(2016. 10. 26.)

은 '국민이 행복한 건축, 미래의 다세대 주택'이라는 주제로, 제3차 포럼(2016. 12. 14.)은 '에너지 생태계 변화와 미래건축'이라는 주제로, 제4차 포럼(2017. 09. 14.)은 '도시재생과 공공공간'이라는 주제로 각각 개최하였으며, 각 포럼에는 건축 · 미래전문가, 일반인, 학생 등 다수의 관계자가 함께 참여하였다.

3. 주요 내용

가. 제1차 미래건축포럼

일시	2016. 09. 27.(화) 14:00~16:30
장소	페럼타워 3층 페럼홀(서울 중구 소재)
참석	건축 · 미래전문가, 일반인, 학생 등 150여 명
주관	대한건축학회
주제	미래자동차와 건축과 도시 – 발제 : 황승호 현대자동차그룹 부사장
토론	• **(좌장) 김도년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 • 정영균 희림건축 대표 • 김지엽 아주대학교 교수 • 김성아 성균관대학교 교수 • 이재용 국토연구원 스마트녹색도시연구센터장

미래건축포럼의 첫 번째 장은 일반 시민이 참여하여 우리가 사는 생활공간의 미래를 상상하고 자유롭게 논의하기 위해 '미래자동차와 건축과 도시'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동수단 등 다른 분야의 변화가 건축과 도시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였다.

제해성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건축은 과거산업이 아니라 새로운 기술과 변화가 적용되는 플랫폼으로서 미래를 예측하고 선도적인 대응이 필요한 분야라는 인식을 국민에게 널리 확산시키는 뜻 깊은 자리'라고 밝혔다.

황승호 현대자동차그룹 부사장은 '미래의 혁신적인 모빌리티 기술의 발달은 주로 도로교통 시스템과 주차공간에 크게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면서, 도로용량 극대화, 보행도로 등 사람을 위한 공간

확대, 쇼핑몰 등 건물 내 다양한 충전 인프라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새롭게 시작되는 제1차 미래건축포럼에서는 기존 심포지엄 형태의 포럼 형식에서 벗어나 건축 · 도시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자동차 분야의 전문가가 발제하고, 패널로 참석한 건축 · 도시 · IT 분야 전문가들이 자동차 분야의 변화가 건축과 도시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 제1차 미래건축포럼(2016. 09. 27.)

나. 제2차 미래건축포럼

일시	2016. 10. 26.(수) 14:00~16:30
장소	국립고궁박물관 별관 강당(경복궁 서남측 소재)
참석	건축 · 미래전문가, 일반인, 학생 등 200여 명
주관	대한건축학회
주제	국민이 행복한 건축, 미래의 다세대 주택 – 발제 1 : 서용식 수목건축 대표 – 발제 2 : 김동건 한샘 이사
토론	• **(좌장) 하미경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 •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 • 김명득 LG하우시스 부사장 • 박광재 한국복지대학교 교수 • 석정훈 서울시건축사회 회장 • 성은영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부연구위원

제2차 포럼에서는 우리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는 삶의 터전인 주거 공간의 변화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민이 행복한 건축, 미래의 다세대 주택'이라는 주제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서민 주거용 건축물인 다세대주택의 생활환경 개선과 미래 가능성을 집중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제해성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우리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는 서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기술개발과 산업체계화가 필요하다'며, '이번 포럼에서 다세대주택에서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새로운 주거 모델로서 다세대주택이 보편화될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명했다.

첫 번째 발제에서는 '아파트 중심의 패러다임은 끝났음'을 강조하면서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소유에서 공유로' 가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 발표하였고, 뒤이은 발제자는 다세대주택의 미래 주거건축 방향성에 대해서 '에너지 · 자원소비 절감 건축, 재사용 가능 건축 등 지속가능성과 품질을 확보하면서도 시공비와 운영비를 절반 이하로 감축하는 비용절감 및 고품질을 확보하고 이에 책임지는 품질보증'을 강조하면서, 새로운 다세대주택을 위하여는 '표준화 · 모듈화, 건식화 · 조립식화, 공업화 · 산업화'의 필요성을 설명하였다.





▲ 제2차 미래건축포럼(2016. 10. 26.)

다. 제3차 미래건축포럼

일시	2016. 12. 14.(수) 14:00~16:30
장소	용산 전쟁기념관 1층 이병형홀
참석	건축 · 미래전문가, 일반인, 학생 등 200여 명
주관	대한건축학회
주제	에너지 생태계 변화와 미래건축 – 발제 1 : 배성환 한국전력 본부장 – 발제 2 : 임인희 LG화학 부장
토론	• **(좌장) 김도년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 • 함일한 인코어드 테크놀로지스 상무 • 이명주 명지대학교 교수 • 신지응 EAN 테크놀로지 대표 • 최용의 삼우건축 상무 • 이병호 한국감정원 소장

제3차 포럼에서는 에너지저장장치 활용 등 에너지 생태계 변화의 흐름과 그로 인해 건축산업과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생활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토론이 있었다.

이와 관련해서 '모든 사물이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미래에는 전기에너지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으므로 스스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저장하는 건축물의 가치가 높이 평가받을 것이며, 최근 에너지 생태계 변화를 어떻게 건축물과 결합하느냐에 따라 우리 건축산업이 미래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우선 첫 번째 발제자는 '건물 에너지 관리가 미래건축산업의 핵심임을 강조하면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계측(정보수집) → 실시간 모니터링 → 최적화 분석 → 에너지절약을 위한 최적화 제어 등 건축 운영에서 단계별 에너지 최적화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현재 한국전력에서는 해외 네트워크 강화, 운영사업 효율화, 기술전수 및 인력양성을 하고 있으며, 향후 에너지신산업 수출을 확대하고 전력산업 전 분야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밝혔다.

두 번째 발제자는 글로벌 전원 믹스의 탈탄소화와 신재생 에너지의 경제성 확보가 가속화하고 있으므로 분산발전, 참여형 에너지 시대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그 일환으로 신재생 에너지 증가로





▲ 제3차 미래건축포럼(2016. 12. 14.)

전력시스템 안정화 및 이용 효율 향상을 위한 방안인 ESS(에너지저장장치, Energy Storage System, 전력저장 → ESS를 활용한 전력공급 → 필요 발전설비용량 감소)의 필요성을 설명하였다.

라. 제4차 미래건축포럼

일시	2017. 09. 14.(목) 14:00~17:00
장소	페럼타워 3층 페럼홀(서울 중구 소재)
참석	건축 · 미래전문가, 일반인, 학생 등 150여 명
주관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주제	도시재생과 공공공간 – 발제 1 : 이상민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연구위원 – 발제 2 : 서유림 공동체코디네이터 – 발제 3 : 김상신 시흥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센터장 – 발제 4 : 한승욱 부산발전연구원 연구위원
토론	• **(좌장) 구자훈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 • 이정형 중앙대학교 교수 • 조경진 서울대학교 교수 • 조준배 서울주택도시공사 처장 • 김남균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기획단 과장

제4차 포럼은 도시 재생 활성화를 위해 일상생활 공간 속 공공공간을 발굴 · 활용하는 다양한 방식을 모색하고, 공감대 형성을 도모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제해성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노후 저층 주거지의 도시기능 회복을 위해서는 주차장 등과 같은 필수 공공공간이 주민생활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앞으로 활발하게 진행될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추진과정에서 이러한 점을 유념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총 4명이 발표하였으며, 가장 먼저 도시재생에서 공공공간의 재발견이라는 주제로 공공공간의 의미를 되짚는 총론적인 발제를 하였고, 두 번째 발제자는 창신숭인 도시재생지원사례를 설명하고, '공공공간은 일거리 창출과 지역활동의 거점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지역에 존재하던 다양한 공간을 활용하여 주민과 함께 공간을 만들어간다'고 하면서 '운영 · 관리주체에 관한 사항, 행정과의 소유 · 운영관계, 지역 네트워크 지속 등 지속 가능성 확보가 가장 큰 한계점'이라고 지적하였다.

세 번째 발제자는 '국공유 자산은 관리주체인 행정의 소유가 아니라 시민이 함께 소유하고 운영 · 관리하는 공유자산이라는 인식변화가 필요하고, 정부에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관계법 및 제도정비 등 후속조치가 있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마지막 발제자는 지역자산화를 통한 공공공간의 활성화 방안이라는 소주제를 통하여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플랫폼 확대를 통한 지역가치 상승, 주민공동체 역량 강화 및 이용실태 등 시설정보 파악을 위해 지역자산 DB 구축이 필요'함을 설명하였다.





▲ 제4차 미래건축포럼(2017. 09. 14.)

4. 성과 및 의의

미래건축포럼은 일반 시민이 참여하여 우리가 사는 생활공간의 미래를 상상하고 자유롭게 논의하는 장으로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 야심차게 추진하였다.

1차 포럼에서는 '미래자동차와 건축과 도시'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동수단 등 다른 분야의 변화가 건축과 도시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였고, 2차 포럼에서는 '국민이 행복한 건축, 미래의 다세대 주택'이라는 주제로 우리나라의 서민 주거용 건축물인 다세대주택의 생활환경 개선과 미래 가능성을 집중 논의하였다.

3차 포럼에서는 '에너지 생태계 변화와 미래건축'이라는 주제로 에너지 저장장치 활용 등 에너지 생태계 변화의 흐름과 그로 인해 건축산업과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생활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토론이 있었고, 4차 포럼에서는 '도시재생과 공공공간'이라는 주제로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일상생활 공간 속 공공공간을 발굴 · 활용하는 다양한 방식을 모색하고, 공감대 형성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이 기존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시행한 미래건축포럼을 발판으로 삼아 앞으로도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는 보다 참신한 주제를 갖고 토론을 하는 등 국민에게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 시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정책 분야

제 2 절

도시 공공공간 이용 활성화

1. 추진 배경

도시에서 좋은 공공공간을 형성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여러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 또한 공공공간은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며, 특히 주거환경의 질에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영국이나 미국 등 해외 여러 국가들은 이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국내에서도 공공공간의 양적인 확보와 함께 질적 수준 향상에 대한 요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노후화된 도시, 특히 주거지에서는 인구수 대비 공공공간 면적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높은 이용도에 비해 유지관리가 어려워 공공공간의 질적 수준도 열악한 실정이다.

또한, 새로운 도시정책 패러다임으로 도시재생이 부각되면서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인프라의 확보와 개선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있어 본격 추진되는 도시재생 뉴딜정책에서도 도시의 다양한 공공공간은 생활인프라로서 지역의 생활환경 개선은 물론이고 지역주민의 커뮤니티 형성 및 역량 강화에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

도시재생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공공공간을 쾌적하게 조성·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게 되었다.

2. 추진 경과

2017년 2월 제9차 합동연석회의의 검토 결과 도시공원 등 공공공간은 예산 부족, 전문성 부재 등의 이유로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정책연구과제로 선정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위원회에서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 연구과제를 의뢰하여 '도시 공공공간 이용 활성화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으며 2017년 6월 연구에 착수하여 2017년 11월까지 수행하였다. 주요 일정으로는 현황 분석을 위하여 문헌조사, 면담조사, 현장조사를 실시하였고, 국내 및 국외 사례조사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며, 2017년 9월에 열린 미래건축포럼에서 공공공간 활용 사례 공유와 공공공간 이용활성화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연구 보고서가 위원회에 제출되었다.

3. 주요 내용

1) 공공공간 활용 특성 및 문제점

도시재생 선도지역에서 공공공간 활용 특성은 동 사업 관련 사업 수와 예산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지역 재생의 중심이 되는 공공공간의 유형은 크게 기초생활 인프라, 공동이용시설, 지역경제시설로 구분될 수 있으며 도시재생에서 활용되는 대부분의 공공공간은 노후 주거지역의 생활환경 정비, 지역공동체 역량 강화, 지역정체성 회복,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거점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점은 지역적 특성 및 여건에 대한 충분한 고려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공공공간 조성이 필요하지만 물리적 공간조성에만 치중하여 지역 커뮤니티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고 운영 주체를 고려하지 않는 공간 조성으로 공공공간의 지속 가능성이 부족한 어려움이 있다.

2) 공공공간의 이용 활성화 사례분석 및 시사점

① 국내사례

- 서울시의 산새마을 외 5개소를 조사하였다. 그중 기초생활 인프라 이용 활성화 사례인 서울 은평구 산새마을 주거재생사업은 보행가로, 쌈지공원, 마을마당, 공영주차장, 공동텃밭을 설치하였으며 주민 간 합의를 거쳐 텃밭을 조성하고 무료급식 등 지역사회 나눔을 실천하였다.



▲ 산새마을 골목 정비 전



▲ 산새마을 골목 정비 후



▲ 산새마을 마을마당 정비후

- 경북 영주시 삼각지 녹색거리 조성 사업은 영동선 철길 아래를 관통하는 연결도로가 개설됨에 따라 철길로 막혀 같은 동이면서도 왕래가 없던 양쪽 마을(삼각지 마을과 휴천3동) 주민들의 연결성을 확보하였다.
- 공동이용시설 이용 활성화 사례인 산새마을 산새둥지는 마을회관 등의 주민공동시설이 없어 임시 마을회관에서 모이던 주민들이 마을회관 설립을 희망하여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산새둥지를 조성하였으며 주민공동체 운영회에서 운영하고 있다.

- 국내 사례에서 본 시사점은 지역주민의 수요를 반영한 생활밀착형 공간을 우선적으로 조성하여야 하고, 역량 있는 중간지원 조직을 중심으로 민 · 관 파트너십 구축, 주민주도형 도시재생사업으로 전환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통합적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단계적으로 지역 재생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이다.

② 국외사례

- 공공공간의 대상 및 입지 측면의 사례로 일본 사가시의 왁자지껄 컨테이너 외 3개소, 미국 필라델피아 역전 주차공간 개선 외 3개소, 영국 런던 박스파크 외 2개소를 살펴본 결과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중심시가지, 역세권, 주거지역 내 공공공간을 우선적으로 개선하고, 주로 공지, 공원, 가로공간, 주차공간을 활용하며,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적 성격의 공간의 활성화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함이 필요하다.
- 공공공간 이용 활성화 방법에서는 처음부터 시설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실험을 토대로 효과성을 검증한 이후 영구적인 시설사업으로 확대 추진하고, 물리적 시설사업뿐 아니라 이벤트 성격의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활용방안을 적용하며, 임시적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 공공공간 이용 활성화의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지의 측면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단독으로 추진하기보다는 민간 전문가나 기업의 기획력을 토대로 초기단계부터 관련 주체들이 협력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기획단계에서 건축, 도시, 조경 관련 전문가뿐 아니라 디렉터, 큐레이터, 파티시에 등 다양한 지역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지속적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 구성 및 운영 체계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3) 공공공간 이용 활성화 사업 유형 제안

① 생활밀착형 공공공간 활성화 사업

- 주거지 내 버려진 유휴공간이나 쓰레기 무단투기 등으로 미관이 훼손되고 악취 등으로 주거공간 환경을 떨어뜨리는 곳에 공동텃밭 조성, 꽃밭상자 조성, 한평공원 조성 등 생활 인프라 개선으로 주민간 소통이나 유대관계 형성

② 공공공간을 이용한 커뮤니티 거점 형성 사업

- 현재 사용하지 않는 소규모 공장건축물이나 공공건축물(동사무소, 마을회관, 노인정 등) 내 사용하지 않는 공간에 마을카페, 공부방(독서실), 마을쉼터, 마을부엌 등을 운영하여 마을 거점 형성으로 공동체의 유대감을 형성하고 운영관리에 대한 주민역량 강화를 위해 경영 관련 교육 프로그램 운영

③ 공공공간을 활용한 마을경제 활성화 사업

- 지역의 전통시장이나 골목 상권 또는 지역 상권 쇠퇴와 인구 유출로 발생한 빈 점포 등에 지역주민, 상인 등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주체의 발굴 및 역량 강화, 이해관계가 상이한 주체들 간에 공감대 형성 및 공동의 사업목표를 도출하여 지역 상권(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화전략을 마련하고 상품개발, 주민교육 등 구체적인 사업 추진

4) 공공공간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향

① 현황의 문제점 및 한계

- 해당 주민이 운영관리 주체가 되어 운영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수익 창출에 한계가 있어서 기본적인 재료비 정도만 충당 가능한 수준이고 공간사용료, 공공요금 등의 소요비용을 충당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 마을 재생이나 지역활성화 초기 단계의 사업들이 대부분이므로 주민의 역량이 아직 강화되기 전에 추진되어 자생적 주민조직이 부재한 상태이므로 자생적 주민조직이 형성될 때까지 사업의 지속성 확보가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다.

② 개선방향

- 주거공간의 운영목적이 커뮤니티 거점 및 공동체 형성이므로 당장의 수익창출보다는 최소한의 운영 비용 마련을 목적으로 주민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 도시 재생 초기단계에 마을 공동체가 실제 공공공간을 운영하면서 역량을 강화하고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초 학습사업으로서 사업 추진의 용이성과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4. 성과 및 의의

공공공간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획이나 추진 과정에서 주민 수요나 현실 여건, 주민 특성 및 역량 등을 고려해야 하며, 운영관리 과정에서는 공공공간의 공공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므로 이런 방안이 제안된 것에 성과와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지역에서 도시재생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공공공간을 다양하게 조성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생활밀착형 공공공간 활성화 사업을 시행하여 주민 간 소통이나 유대관계 형성을 유도한다.

둘째, 공공공간을 이용한 커뮤니티 거점 형성 사업을 시행하여 지역커뮤니티 활성화 및 주민의 역량을 강화한다.

셋째, 공공공간을 활용한 마을경제 활성화 사업을 시행하여 특화전략을 마련하고, 물리적 환경개선, 상품개발, 프로그램 진행 등 구체적인 마을 경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

공공공간 이용 활성화 측면에서 지역 주민이 공간의 유지관리 주체로서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공공시설에 대한 지정관리자 제도 도입, 마을공동체 기본법 관련 제도 개선, 공공공간 이용 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추진)을 제안한 것도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성과이다.

정책 분야

제 3 절
소규모 주택 건축 품질관리

1. 추진 배경

그동안 우리나라 주택 시장은 도시화와 이에 따른 주택의 대량 공급에 치중하여 부동산 투자의 대상으로서 공동주택(아파트)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지난 30여 년간 공동주택의 주택성능은 크게 향상되었으며, 하자보증제도가 시행되는 등 제도화한 공급 시스템을 마련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공동주택을 구입할 수 있게 되었으며,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수준으로 사후 유지관리도 가능해졌다.

그러나 실제 서민이 다수 거주하는 소규모 주택은 주택공급 정책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주거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실정에 이르렀다. 특히, 임대 목적으로 건설된 다세대 · 다가구 주택은 수익성만 고려한 투자방식 때문에 주거환경과 품질은 고려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현재도 주택의 건축 및 성능을 담보할 수 있는 각종 제도가 존재하고 있으나, 이는 적용대상이 공동주택에 국한하여 활용에 한계가 있다. 건설이행보증 및 품질보증은 건설업자로 등록된 시공사에 한하여 협회에서 보증을 대행하고 있어, 주로 무등록시공자가 시공하는 소규모 주택은 활용이 곤란하고,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주택성능등급표시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그 외 주택은 주택품질을 평가 · 확인하는 수단이 없다.

따라서 소규모 주택의 주거환경 개선 및 품질 제고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주택성능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우선, 소규모 주택의 품질을 담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로서 성능평가 제도 및 하자보증 제도의 도입 방안을 검토 · 마련하고자 하였다.

2. 추진 경과

2017년 1월 제8차 합동연석회의에서 제도 도입 필요성을 제안해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제9차 합동연석회의(2017. 02. 09.)에서 2017년도 정책연구용역 안건(10건)에 포함돼 과제 발주 수요조사를 하였다.

제11차 합동연석회의(2017. 04. 13.)에서 10건의 과제 중 2건의 정책연구용역 과제와 1건의 예비 과제를 선정하였다. 소규모 주택 품질 관리 연구를 위해 정책연구용역 과제인 '소규모 건축물 하자보증제도 개선 및 주택성능인정제도 방안 마련' 건을 채택하였다.

본 정책연구용역 수행은 그간의 선행연구(소규모 주택 안심 집짓기 정책 방안 연구, 소규모 주택사업 다양화를 위한 제도 유연화 방안 연구)를 수행한 업체로서 연구내용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주택정비 등 유사 분야에 걸쳐 다수의 연구를 수행한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점을 고려하여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 의뢰하여 연구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3. 주요 내용

가. 착수보고회(2017. 06. 08.)

2017년 5월 16일 건축도시공간연구소와 계약하고 제12차 합동연석회의(2017. 06. 08.)에서 '소규모 주택 건축 품질 관리연구' 용역에 대한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나온 의견은 다음과 같다.

- 소규모 주택의 개념에 대해서는 혼동의 여지가 있으므로, 다세대 주택에 한정하여 논의하거나 '저층 주거지(주택)' 등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저층 주거지 도시재생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와 같은 공공사업자가 다세대 · 다가구 주택 등을 건설할 경우 적용할 수 있는 기준 제시가 필요하고, 이를 감안하여 용역 제목을 구체적으로 수정 검토 필요
- 과거 국토교통부에서 주택하자보험 제도 도입 용역을 추진한 바 있고,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유사 연구를 추진한 바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연구할 필요성이 있음

나. 중간보고회(2017. 09. 27.)

중간보고회에서 논의된 의견은 다음과 같다.

- 소규모 주택 건축 품질관리 연구 용역이 정책보고서의 형태로 만들어진 것 같아 바람직하며 소규모 주택 품질 관리제도 법률제정 추진 필요
- 앞으로 발생할 위험요인을 발굴할 필요가 있으며, 법률 제정 시 쉽게 적용하기 위해 모든 조항을 해당 법조문에 넣어야 할지 몇 개 법안에 우선적으로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할지 검토가 필요
- 현재 단독주택을 자산으로 보지 않고 있는데 소규모 주택 품질관리 제도를 도입하면 보증 · 보험 대상으로서 적용 가능한지 사전자문의 검토가 필요하고 주택품질뿐만 아니라 일자리창출 효과 측면으로 보아서 관련 산업과도 연계 필요
- 소규모 주택의 시장성이 없어서 보험제도가 만들어지지 않았으며 본 연구를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 주는 것 자체에 의미가 있음
- 소규모 주택의 품질관리 제도를 도입하되 법 조문은 10개 조항 정도로 하고 이해관계자를 최소화
- 다세대 주택은 기초적인 하자보수 시행만 되고 단독 · 다가구 주택은 하자보증제도가 전무한 상태이므로 소규모 주택의 성능개선보다는 최소한의 품질확보를 위한 하자보증제도 시행이 우선적으로 필요
- 본 연구에서 소규모 주택의 품질관리 제도의 법률(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시는 과업기간 등을 고려할 때 어려운 사항이며 추후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



▲ 중간보고회(2017. 09. 27.)

다. 최종보고회(2017. 11. 01.)

소규모 주택 성능평가 및 하자보증 법제화를 위한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2017년 10월 31일 '소규모 주택의 체계적 품질관리'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 및 연구원, 공공·민간 건설사 등 50여 명이 참석하여 논의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현재의 기준 및 규제도 상당히 많고 수준이 높기 때문에 이를 통해 소규모 주택의 품질 개선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향후 토론 결과를 적용하는 방향에 대한 의견 제시
- 특히, 제도개선과 시장변화를 함께 도모해야 한다는 의견 제시

사실 초기 연구의 목적은 규제 강화로 소규모 주택의 품질을 개선하기보다는 우수한 품질을 인정해 주고 품질개선을 유도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소규모 주택의 체계적 품질관리 정책토론회의 성과가 있었으며,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 연구에 도움이 되는 자리였다. 논의 사항을 보완하여 최종 연구 보고서에 반영하였다.

보고서 주요 내용

- 미래 소규모 주택 시장 수요와 이에 따른 발전 방향을 고려한 중장기적 정책방향 제시 필요
- 소규모 주택 품질관리 및 하자보수 관련 법률 신규 제정 시 법률체계상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이나 「건축법」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기존 법률 체계를 수정·보완하여 해결 가능한 정책대안도 함께 제시 필요
- 현행의 설계나 시공 단계를 그대로 유지한 채 품질을 개선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생산과정에 대한 개선방안 논의 필요
- 소규모 주택의 가장 큰 문제는 직영공사 및 무자격자 시공에 대한 문제이므로 최소한의 등록 시공업자가 공사를 할 수 있는 여건 마련 필요
- 허가권자가 지정 감리하는 제도는 단독주택이 제외되어 있으므로 단독주택도 포함하여 시공관리가 가능하도록 감리제도 보완 필요





▲ 최종보고회(2017. 11. 01.)

4. 성과 및 의의

그동안 주택시장은 공동주택 중심의 양적 공급에만 치중하는 건설 중심의 정책을 추구해 왔다. 이번 '소규모 주택 건축 품질관리연구' 용역을 통하여 실제 서민들 다수가 거주하는 소규모 주택에 대한 성능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인식하였으며, 중장기적인 방향에 대한 정책방향과 법률 · 제도상으로 보완할 내용에 대한 정책 대안도 제시되었다.

본 연구에서 소규모 주택의 품질관리 제도의 법률(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시는 과업기간 등을 고려할 때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추후 지속적인 연구의 필요성 등 다양한 의견과 연구를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 주는 것 자체로 의의가 있다.

정책 분야

제 4 절
학교 내진 안전성 개선

1. 추진 배경

최근 들어 국내 지진발생 빈도와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특히 2016년 9월 경주 지진과 2017년 11월 포항 지진 이후 교육시설 내진보강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배정되었으나, 내진 성능이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보강공법과 보강설계안이 적용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필요하였다.

이에 따라,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는 관련 부처 · 학술단체 · 기술자단체에서 활동하는 전문가와 함께 T/F팀을 구성하여 의무교육 대상인 초 · 중학교 중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은 기존 건축물을 대상으로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합리적 내진성능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 포항 지진 현장 방문

T/F 위원 명단

분 류	소 속	성 명	직 위	비 고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윤혁경	정책조정분과 위원장	
		최창식	정책조정분과 위원	T/F팀장
정부	교육부	윤석훈	교육시설과장	
	행정안전부	박광순	지진방재정책과장	
	국토교통부	남영우	건축정책과장	
	서울특별시교육청	최영식	교육시설안전과장	
	교육시설재난공제회	김상식	인하대학교 명예교수	
		이병호	안전관리부/공제사업부 부장	
유관단체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윤병익	부회장, 아이맥구조 대표	
		김대호	부회장, 한울구조 대표	
	한국콘크리트학회	정성훈	내진설계위원장, 인하대학교 교수	
		윤현도	기획위원장, 충남대학교 교수	
		이강석	전남대학교 교수	
	한국지진공학회	김태진	창민우구조 대표	
		유은종	한양대학교 교수	간사
	대한건축학회	박홍근	기준센터장, 서울대학교 교수	
		김형준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대한건축사협회	석정훈	부회장, 태건축설계사무소 대표	

2. 추진 경과

학교 내진 안전성 개선 T/F에서는 총 6회의 회의와 1회의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논의한 안건은 〈표 8〉과 같다.

〈표 8〉 **학교 내진 안전성 T/F 회의**

회차	일시	장소	주요 내용(안건 등)
제1차	2017. 07 .11.	서울(종로) 국가건축정책위원회 회의실	▸ 학교내진 안전성 T/F 운영 일정 논의 ▸ 구체적인 의제 설정
제2차	2017. 07. 25.	서울(종로) 국가건축정책위원회 회의실	▸ 학교내진 보강 현황 및 문제점 논의 ▸ 내진보강 관련 기준 및 개선방안 논의
제3차	2017. 08. 08.	서울(종로) 국가건축정책위원회 회의실	▸ 일반공법 적용의 확대 방안 논의 ▸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보강 관련 기준 토의
제4차	2017. 08. 29.	서울(종로) 국가건축정책위원회 회의실	▸ 내진보강 공법선정위원회 운영실태 논의 ▸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보강 관련 기준 정비방안 토의
제5차	2017. 09. 12.	서울(종로) 국가건축정책위원회 회의실	▸ 공법선정위원회 운영 개선방안 도출 ▸ 표준업무 지침 및 법적 근거 마련 논의
제6차	2017. 09. 26.	서울(종로) 국가건축정책위원회 회의실	▸ 내진보강 기술기준 법령체계 정비 논의 ▸ 공청회 개최 계획 토의
공청회	2017. 11. 20.	서울(강남) 한국과학기술회관 회의실	▸ 주제 발표 및 참석자 의견 청취 – 학교 내진보강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 – 학교시설의 내진보강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3. 주요 내용

가. T/F 자문단 활동

제1차 회의(2017. 07. 11.)에서는 위원들의 추천에 따라 최창식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한양대학교 교수)을 T/F팀장으로 선임하고 학교 내진 안전성 개선 T/F의 운영 방안을 논의하였다. 학교 건축물

내진 안전성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학교 내진보강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부처별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조정이 필요한 과제 등을 함께 검토하며, 9월 말까지 2주 간격으로 T/F 자문단 회의를 실시해 학교 건축물 내진 안전성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제2차 회의(2017. 07. 25.)에서는 T/F팀에서 다룰 구체적인 과제 내용들이 제안되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교육부의 교육시설 내진보강 현황, 서울시 교육청의 학교건축물 보수 · 보강 실태, 교육시설재난공제회의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 보완 및 내진보강 매뉴얼 개발 현황, 국토교통부의 학교시설 내진보강 관련 공공기관 역할 등에 대해 보고받은 후 학교내진보강사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내진보강 관련 기준 정비 및 제도개선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 T/F 자문단 제2차 회의(2017. 07. 25.)

제3차 회의(2017. 08. 08.)에서는 국토교통부의 내진성능 평가기준의 일원화 방안과 서울시 교육청의 2017 내진보강사업 추진체계 현황을 보고받은 후, 관련 부처의 내진성능 평가기준 일원화 방안과 공법선정 시 전문가 참여 방안, 일반공법 적용의 확대 방안 등에 대해 세부적으로 논의하였다.

제4차 회의(2017. 08. 29.)에서는 교육시설재난공제회의 학교시설 내진보강 공법선정위원회 구성 · 운영실태, 학교시설 내진보강사업 교육 · 훈련과정, 한국지진공학회의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보강공사의 적용기준 발표내용을 검토하고, 내진보강 공법선정위원회 운영 개선 방안과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보강 관련 기준의 정비 방안을 논의하였다.

제5차 회의(2017. 09. 12.)에서는 그동안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내진보강 공법선정위원회 운영 개선, 일반 공법 확대적용 방안, 내진보강 여부 및 우선순위 판단 기준 수립, 대피시설 지정, 표준 업무 지침 및 관련 법적 근거 마련, 관련 기관별 업무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제6차 회의(2017. 09. 26.)에서는 국토교통부의 내진보강공법 검증위원회 운영, 내진보강 기준 개

선, 비구조요소 내진설계기준 개선 방안 등 발표내용을 논의하고, 내진보강 기술기준 통합 방안과 법령체계 정비의 필요성을 도출하였다. 학교시설의 내진보강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공감대 형성을 도모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 T/F 자문단 공청회(2017. 11. 20.)

공청회(2017. 11. 20.)에서는 학교 내진보강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학교시설의 내진보강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지진 · 건축 · 구조 분야 전문가, 일반인, 공무원 등 참석자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T/F팀 개선방안과 공청회 논의내용을 취합 정리해 최종보고서를 작성한 후 관련 부처에 정책 제언을 하기로 하였다.

나. 문제점

교육부에서는 2010년부터 시작된 학교 내진보강사업이 공법적용의 공정성과 타당성에 대한 문제로 잠시 주춤하다가, 경주 지진 이후 기존의 보강사업 절차를 보완하여 연 2,5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내진보강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내진보강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충분히 파악하고, 관계 부처와 학계, 업계의 구조 전문가 등이 충실한 논의를 거쳐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내진 보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시점으로 판단된다.

현행 내진보강사업의 단계별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 내진보강사업계획
  - 일률적인 내진보강절차 적용으로 비효율적인 보강계획 우려
  - 설계와 공사를 1년 안에 완료하도록 하여 보강설계 최적화 기간 부족으로 설계 부실 및 예산 낭비 우려

- 대상건물의 성능과 관계없이 임시주거시설로 지정되어 과도한 내진설계가능성이 높아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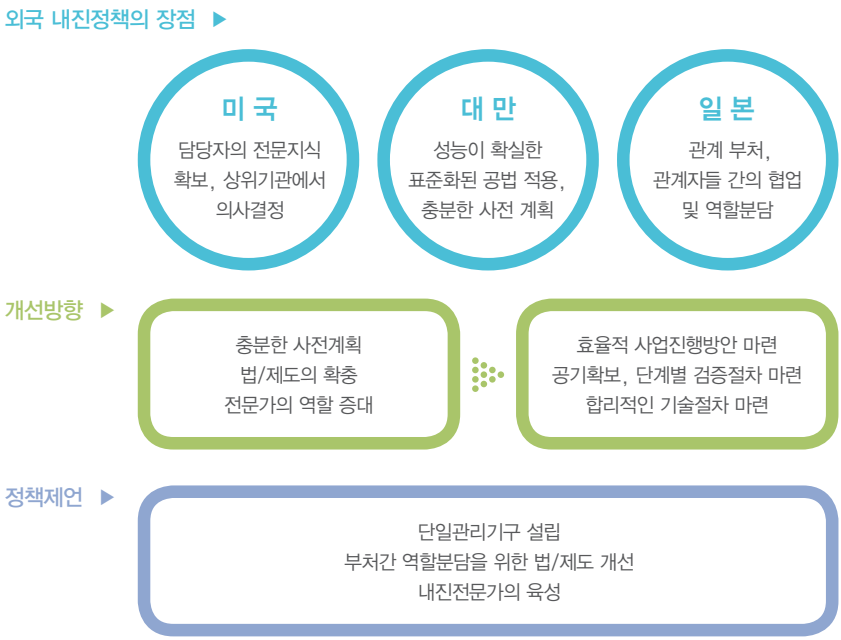
- 내진성능 평가
  - 다양한 내진성능 평가기준의 혼용으로 일관된 내진보강설계가 어렵고 불필요한 작업수행으로 시간과 노력이 낭비될 수 있음
  - 통합발주 시 내진성능평가용역의 합리적인 대가 적용의 어려움
  - 특수공법 적용 시 책임구조기술자가 명확하지 않음
  - 외주형태로 내진성능 평가수행 시 내진성능 평가의 책임구조기술자가 불분명
- 내진보강 설계(공법선정)
  - 공법선정 시 공법선정위원회의 전문성이 결여됨
  - 특수공법 적용 시 내진성능 향상의 검증절차가 없음
  - 학교 특성을 감안한 연구가 미약함
- 보강공사 및 유지관리
  - 보강공사 시 구조적 변동성을 고려한 감독 절차가 없음
  - 공법별 보강공사비의 표준단가가 없어 공사비의 적정성 판단이 어려움
  - 공법에 따른 유지관리방안과 예산이 계획되어 있지 않음

다. 개선방안

이에 따른 구체적인 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자료조사 및 사례연구 우선 수행
- 적절한 간략평가법 개발
- 통일된 성능평가절차 마련
- Peer Review(간이평가 제도)를 통한 평가/설계결과의 검증
- 단계별 분리발주를 통한 전문성 강화
- 일반공법 적용의 확대를 위한 공기확보 방안 마련
- 품질확보를 위한 현장기술감리 제도화
- 유지관리시스템 구축
- 내진평가/보강설계 수행자의 교육강화
- 임시주거시설 지정의 합리화

내진보강사업의 장기적인 개선방향은 성공적인 내진정책을 가지고 있는 외국(미국, 대만, 일본)의 사례에서 도출할 수 있다.



4. 성과 및 의의

학교 내진 안전성 개선 T/F 자문단을 운영하여 적절한 간략평가법 개발 및 통일된 성능평가절차 마련, 피어 리뷰(Peer Review)를 통한 평가 · 설계 결과의 검증, 단계별 분리발주로 전문성 강화, 일반공법 적용의 확대를 위한 공기확보 방안 마련, 품질 확보를 위한 현장기술감리 제도화, 유지관리 시스템 구축, 임시주거시설 지정 합리화 등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특히, T/F 자문단에서 국토교통부 · 교육부 · 교육청 간 학교시설 안전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토록 함으로써 내진보강을 위한 관련 기준 통합, 표준 업무 지침 마련 등의 성과를 이루었다.

2016년 9월 경주 지진 이후 진행되고 있는 학교시설 내진보강사업이 합리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정책 제언을 하여 학생들이 지진에 불안해하지 않으며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미래의 지속 가능한 국가 건축정책의 선도적 역할을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정책 분야

제 5 절
군(軍) 주거정책 발전방안 수립 지원

1. 추진 배경

총 15만 호에 달하는 군 주거시설의 약 8.4%가 30년 이상 노후화되어 군인 및 군인 가족의 생활 불편이 심각한 상황에서 간부 중심 부대개편에 따라 주거지원 예산이 확대될 예정이므로 국방부에서는 국유재산 사용 · 처분 등 정책적 수단을 검토하는 한편, 재정부담을 최소화한 군 주거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협조 · 지원을 요청하였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통일준비위원회와 DMZ 세계평화생태공원 T/F회의(2016. 04. 28.)에서 국가 차원에서 관심가져야 할 건축정책의 하나로 낙후 군 주거시설 개선사업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2. 추진 경과

- 2016. 02. 05.~19. [국방부 · 한국토지주택공사] 실무회의 개최(2회)
- 2016. 03. 09. [국토교통부 · 국방부 · 한국토지주택공사] 합동회의 개최
- 2016. 03. 10. [국토교통부 ·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주택 사업추진 점검회의 개최
- 2016. 05. 03. [국가건축정책위원회 ·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군 주거사업 현황보고
- 2016. 05. 11. [국가건축정책위원회 · 국방부] 국방부 군 주거정책 종합발전계획 수립방향 보고
- 2016. 06. 01. [국가건축정책위원회 · 국방부] 낙후 군 관사 방문
- 2016. 06. 07. [기획재정부 · 국방부 · 한국토지주택공사] 합동회의 개최
- 2016. 06. 15. [국가건축정책위원회 · 국방부 · 한국토지주택공사] 제4차 국토환경디자인분과회의 개최
- 2016. 09. 01. [금천구청 · 국방부 · 한국토지주택공사] 합동회의 개최

- 2017. 01. 18. [국가건축정책위원회 · 국방부] 제8차 국토환경디자인분과회의 개최
- 2017. 03. [국방부] 군 주거정책 종합발전계획(안) 수립
- 2017. 06. 16. [국가건축정책위원회 ·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군 주거지원 사업계획(안) 회의 개최

3. 주요 내용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군 주거사업 현황보고(2016. 05. 03.)와 국방부의 '군 주거정책 종합발전계획' 수립방향 보고(2016. 05. 11.)에 대해 군 시설 개선사업은 국민행복과 통일에 대비한 시의적절한 사업으로, 군 주거실태 파악 이후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 칼럼 게재 및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협의를 추진하여 지원하였다.

노후화한 관사 유지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2016년 6월 1일에 위원장을 포함한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 7명과 국방부 8명 등 총 15명이 강원도 화천군 ○○리와 경기도 파주시 ○○리를 방문하여 군 주거시설의 노후화를 현장점검하고 주택 유지관리에 있어 전문기관의 부재로 주거공간이 열악하고 군 관사 인근에 문화 및 편의시설이 부족하여 생활불편을 초래하며 잦은 인사이동, 예산 부족, 관사 관리 전담조직의 부재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후 제4차 국토환경디자인분과회의(2016. 06. 15.)에서 낙후한 군 관사 방문결과를 공유하고 국방부의 군 주거정책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군 주거지원 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국유지 개발에 대한 기획재정부 및 국민적 공감을 얻으려면 먼저 군 관사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가이드라인을 수립해야 하고 군 관사만이 갖는 특수성과 군인가족의 생존권에 대한 전문가적 처방이 담긴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며, 향후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관련 기관 회의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외에도 국방부 연구과제 추진 자문단에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 3명(박신영, 이인근, 하미경)이 참여하고 제해성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과 하미경 위원이 각각 한국경제신문과 서울경제신문에 열악한 군 관사 관련 기고를 하는 등 다방면의 지원을 실시하였다.

제8차 국토환경디자인분과회의(2017. 01. 18.)에서는 재정지원에 대한 공감 및 리스크 관리와 수익이 낮은 지역과 높은 지역을 통합한 패키지형 시범사업 추진, 군인공제회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와의 협력,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지원방안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軍 숙소를 통해 본 한국의 '호국 · 보훈'

낡고 열악한 軍 숙소 여전히 많아 '인프라 구축' 차원 개선책 마련 국방부 주거대책도 손질 필요



제해성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

지난 2월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고 나서 국가적인 수준에서 관심 가져야 할 건축 정책을 고민하던 필자는 문득 군인이 살고 있는 군 숙소를 떠올리게 됐다.

예전에 국방부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확인했던 열악한 군 숙소 여건이 얼마나 개선됐는지 궁금해 국방부에 연락해 봤다. 민간투자사업(BTL)을 통해 상당 부분 개선됐지만 여전히 낡고 좁은 관사와 독신자 숙소가 전국에 수천 가구 남아 있고 막대한 재원을 투입해도 낡은 시설물은 점점 늘어가는 구조라는 것이 국방부 설명이었다.

직접 현장을 확인하고 싶어 우리 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전방 지역 군 숙소를 둘러보고 왔다. 멀리서 봐도 딱 군 관사인 걸 알았다. 콘크리트가 부식돼 바닥으로 부스러져 내릴 것 같은 벽체, 방안 가득한 곰팡이, 아귀가 맞지 않아 끽끽거리는 창틀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과연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

갓난아기를 둘러업은 채 곰팡이 때문에 심해지는 아기의 천식을 걱정하는 새댁의 젖은 눈시울 앞에서 가슴이 먹먹해진다. 과연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경제 규모 세계 11위 국가가 맞는지 의심스러웠다. 국가의 위상은 곧 군인의 위상이라고 하는데 한국 군인의 명예는 과연 어느 위치에 있단 말인가?

직업 군인 십수만 명, 가족까지 수십만 명이 관사와 독신자 숙소에 살고 있다. 이 정도 숫자라면 전체 국민 중에서 의미 있는 비율을 차지하며, 국가가 관심을 기울일 만한 규모다. 더구나 국가의 명령만 있으면 세계 각국으로 즉각 이동해야 하는 군인과 그 가족들의 삶이 걸린 문제다. 군인 가족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하는 국가는 군인에게 나라와 국민을 위해 목숨을 바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우리는 과연 '우리 모두의 의무'인 호국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한다.

나라와 국민만 탓할 게 아니라 국방부의 주거 정책에도 대대적인 손질이 필요할 것이다. 정부 예산을 투입해 직접 건립 · 관리하는 것이 군 숙소 운영 방식이다. 하지만 국방부는 주거시설 건립에도 관리에도 전문성을 갖고 있는 조직이 아니다. 민간이 됐든,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같은 공기업이 됐든 주거시설 건립에 대한 노하우를 갖춘 집단에 위임해야 한다. 덧붙여 정부가 정책적으로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과 군 숙소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만하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군 주거 여건 개선사업을 국가의 주요한 건축 정책의 하나라고 판단하고 비중 있게 다뤄 나갈 계획이다. 필요하다면 관계 기관들의 의견도 청취하고 정책을 조율해 나가려고 한다. 다행히 국방부가 올초 '주거정책팀'을 신설했고 올해 안에 '군 주거 정책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하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다.

군인과 그 가족의 주거 여건을 국가가 제공하는 것은 특정 계층에 대한 복지 혜택의 일환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국방 서비스를 군인들로부터 제공받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국가 인프라를 구축하는 과정으로 인식해야 한다.

방산 비리나 연이은 사건 · 사고로 인해 우리 군이 질타를 받는다 하더라도 멸사봉공의 정신으로 헌신하고 있는 대다수 군인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호국이요 보훈이다.

– 2016. 07. 04. 한국경제신문

[발언대] 열악한 군(軍) 가족 주거환경 돌아볼 때다



하미경
연세대 실내건축학과 교수

최근 전방의 군 간부들의 주거시설을 돌아볼 기회가 있었다. 우리 주변에서 보통 찾아보기 어려운 허술하고 황폐하기까지 한 군인아파트, 그리고 그곳에 거주하는 부인들과 자녀들을 만나고 돌아오는 내내 가슴이 먹먹했다. 우리의 무관심 속에 방치되고 있는, 아니 우리 사회의 편견 속에서 부적절한 처우를 받는 국민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대한민국에서 군인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군인은 적으로부터 국가를 지키고 위협을 억제하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며 이를 위해 '자발적 위험'을 감수하는 직업이다. 우리를 대신해 위험을 무릅쓰는 군인에게 국가가 적절한 대우를 해주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한때 선망의 대상이기도 했던 직업군인의 주거환경은 상당히 열악하다. 업무 특성상 잦은 이동으로 인한 주거 불안정, 노화 불량주거에 의한 불편함, 격오지 근무로 인한 자녀교육 · 문화적 소외감 등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진다.

군 가정이 겪는 열악한 주거문제는 우리 사회의 군과 그 가족에 대한 관심도를 반영한다. 현재 상황은 군인의 자부심과 사기를 꺾고 타국과 비교할 때 결국 우리의 국가적 자존심까지 상하게 하는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다음의 차원에서 접근하고 시급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

첫째, 군인가족에 대한 사회적 소외는 국민적 차원에서 해결하고 지원해야 할 문제다. 왜냐하면 이는 '국가수호'라는 업무 특성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주거불안정성을 안고 살아가는 군인가족을 지원하는 것을 사회적 배려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회적 시선의 변화를 정책적 변화로 이끌어 실질적 도움을 줘야 한다. 아직까지 우리사회에서는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일하는 군인, 소방관, 경찰 등에게 마음으로만 감사하게 만드는 불합리한 제도들이 많이 있다. 이들에 대한 감사와 배려가 실제로 주요 정책과 제도에 담겨질 필요가 있다. 특히 잦은 이동, 격오지 근무 등을 감내 해야 하는 군인의 가족을 위한 정책은 절실하다.

셋째, 군인 가정의 안정을 국가가 돌보고 책임지는 것은 복지 차원을 넘어 국방력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최첨단 무기를 개발하고 도입하는 것은 국방력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하지만 이를 운용하고 유지하는 것은 사람, 즉 군인이기 때문이다. 남북 대결뿐 아니라 국가간 국경분쟁이나 국방력 경쟁까지 치열한 현시대에 군인이 자부심을 갖고 국가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것은 우리 모두의 의무다.

독일에서는 군인을 '제복 입은 시민(Citizens in Uniform)'으로 표현한다. 직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우리 가까이에서 함께 생활하는 동료로서 군인을 바라보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도 이제는 군인을 우리 삶과 무관한 특수한 사람들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해야 하는 국가수호를 맡은 이웃 · 국민으로 인식하고 이해해야 한다. 군인가족의 주거환경을 국방시설의 문제로 치부하고 주거정책에서 외면할 것이 아니라 국민복지의 연장선상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 2016. 08. 12. 서울경제신문

화천군 군관사 현장 방문






파주시 군관사 현장 방문





4. 성과 및 의의

국방부와 노후화된 군 장병 숙소시설 현장을 방문하여 군 가족들의 생활불편 사항을 청취하고 실태를 파악하여 신문에 칼럼을 게재하는 등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노력과 함께 관계 부처에 시설개선을 위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의 '국토환경디자인분과위원회'가 '국방부 연구용역자문단'에 권역별 맞춤형 주거지원, 관사관리 운영 전문성 제고, 주거지원금 제도 신설 등 국방부의 '군 주거정책 종합발전계획(안)'이 보다 내실 있게 수립될 수 있도록 참여하였다.

정책 분야

제 6 절
건축물 사용설명서 제도 도입

1. 추진 배경

우리나라는 소비자 권익보호 및 시장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제조물의 중요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건축물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건축물 중 절반 이상이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건축물이고 신축시장의 침체에 따라 기존 건축물의 유지관리 및 리모델링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기존 건축물 거래시장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현행 건축물 정보제공 매뉴얼은 공공의 관리목적으로 다중이용건축물과 대규모 공동주택 및 집합건축물 등에 한정되어 있다. 유지관리 점검 의무대상에서 제외되는 단독주택,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지 않은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단지, 소형 상업시설 등 중소규모 건축물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정보제공 내용도 건축물의 법적 기준 유지, 안전점검 및 성능관리, 공동생활 규약 등에 국한되어 실제 필요한 유지보수 행위에 대한 정보가 취약하다.

이에 따라, 건축물 유지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중 ·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정보관리 및 제공 체계를 도입해 건축물 소유자, 이용자 및 관리자 등 소비자의 권익보호, 부동산 거래 공정성 제고, 유지관리 수요 대응 및 건축생산 표준화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게 되었다.

2. 추진 경과

2016년 5월 제3차 정책조정분과회의에서 제도 도입 필요성을 제안해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추진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가 있었다.

이에 따라, '건축물 사용설명서 도입에 관한 정책 방향 연구' 과제 수행을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 의뢰하여 2016년 7월 연구에 착수, 2017년 2월 최종 연구 보고서가 위원회에 제출되었다.

연구 결과 제도 도입이 필요하고, 추가적으로 적용 대상 건축물 선정, 실제 활용방안 마련, 제도 도입시 실효성 검토, 사용설명서 작성 주체인 건축관계자(설계자 · 감리자 · 시공자) 의견 수렴, 건축물 사용설명서 작성자의 업무 부담 경감 등을 포함한 '표준 매뉴얼'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또한 건축물 사용설명서 작성주체가 될 대한건축사협회와 협의해 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지속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대한건축사협회에서도 체계적인 제도 도입을 위해 자체적으로 '내 집 사용설명서 제작' 연구 용역을 수행 중이다.

3. 주요 내용

가) 연구과제 도입

제3차 정책조정분과회의(2016. 05. 27.)와 제4차 정책조정분과회의(2016. 06. 16.)에서 건축물 사용설명서 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하여 논의를 시작하였으며, 이에 대한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국내외 건축물 정보 관련 제도 및 전달체계를 비교하여 우리나라 여건에서 건축물 사용설명서 도입 필요성 및 지향점 검토 등 제도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추진방향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 의뢰하여 연구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나) 연구과제 추진

2016년 6월 14일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 연구 의뢰하여 2016년 7월 11일부터 '건축물 사용설명서 도입에 관한 정책 방향' 연구에 착수하였으며, 이후 정책조정분과회의 착수보고(2016. 07. 17.), 착수연구 심의회(2016. 08. 24.), 전문가 자문회의(2016. 09. 22. / 09. 28. / 11. 03.), 건축물 유지관리제도 관련 전문가 자문(2016. 09. 30.),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정책 관계자 협의(2016. 11. 03.), 최종 연구 심의회(2016. 11. 07.),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정책조정분과회의 최종 보고(2016. 12. 16.) 과정을 거쳐 연구보고서가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 제출(2017. 02. 10.)되었다.

연구 결과 건축물 사용설명서 제도 도입 필요성을 확인하였으며, 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 추진 방향으로 사회적 공론화 추진, 건축물 사용설명서 제공 대상 건축물의 유형 및 정보 제공 주체 정립, 건축물 사용설명서 표준매뉴얼 제작, 법제화, 시범사업 추진 등을 제시하였다.

대한건축사협회에서도 자체적으로 연구용역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여 2017년 5월 24일 유하우스건축사사무소에서 '내 집 사용설명서 제작'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정책조정분과회의에 추진 경과 보고(2017. 06. 16. / 09. 15.), 자문회의(2017. 06. 19. / 07. 03. / 08. 16.), 세미나 개최(2017. 07. 19.), 설명서 제작내용 보고회(2017. 09. 13.), 공청회 개최(2017. 11. 21.)를 통하여 홍보 및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윤혁경 정책조정분과위원장이 공청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대한건축사협회의 연구 용역에 대해 가장 논란이 된 사용설명서 작성주체 정립, 작성 대가 기준 및 대가의 지급이 실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제시된 의견을 보완한 후, 국토교통부와 법제화 및 시스템 구축방안을 협의하고 2018년도에 용역 결과물을 완성할 계획이다.

공청회 일정

시간	행사내용		
14:00~14:20	개회사 및 축사, 내빈 소개		
14:20~15:10	주제 발표	(10분)	기조연설 : 내 집 사용설명서, 왜 필요한가?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정책조정분과위원장 윤혁경)
		(20분)	제1 주제 : 중소규모 건축물 사용설명서의 필요성 및 운영방향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부연구위원 여혜진)
		(20분)	제2 주제 : '내 집 사용설명서' 제작 용역 결과 및 제도개선 방안 (유하우스건축사사무소 대표 정승이)
15:10~15:25	Coffee Break (15분)		
15:25~17:00	토론 및 질의응답	(95분)	좌 장 : 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부 명예교수 최찬환 토론자 : 대한건축사협회 법제위원회 위원장 김영훈 아키준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박준승 한국건설신문 기자 이오주은 주거복지연구원 원장 박근석 사단법인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강정화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부연구위원 여혜진 유하우스건축사사무소 대표 정승이
17:00	폐회		

공청회 사진



▲ 개회사 – 제해성 위원장



▲ 기조연설 – 윤혁경 정책조정분과위원장



▲ 주제발표 – 유하우스건축사사무소 정승이 대표



▲ 토론

4. 성과 및 의의

선진국과 같은 건축물 정보 및 유지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리모델링 수요 급증에 대응한 건축서비스산업 및 건설산업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건축물의 이용자 및 관리자의 건축물 유지관리 관점에서 볼 때 실제 필요한 건축물의 정보가 매우 취약한 상태에서 건축물에 대한 국민 권익 보호 및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정책 분야

제 7 절

아파트 Farm 조성

1. 추진 배경

지금까지 아파트는 주변과의 어울림보다는 자기 본연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거주하는 세대가 대다수인 관계로 이웃과의 소통 부재, 배타주의 만연 등의 문제가 야기되어 왔다.

이에 삭막해진 아파트 단지에 채소 등 소규모 먹거리 재배시설을 설치 · 운영하여 주민 간 자연스러운 만남을 유도하고 공동체 생활의 소중함을 느끼게 함은 물론 노인 소일거리 제공, 음식 찌꺼기를 거름으로 재활용하는 등 긍정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아파트 Farm 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2. 추진 경과

2017년 6월 제9차 정책조정분과회의에서 '아파트 Farm 조성사업' 추진방안을 논의한 결과,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관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성과 분석 후 제도 도입 여부를 검토하기로 하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련 기관과 함께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3차례의 회의와 협의 과정을 거쳐 '대전광역시 월평동 ○○임대아파트'를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2017년 10월 '아파트 Farm 시범사업'을 착수하여, 2017년 11월 말 완공 및 개소식 행사를 갖고 '아파트 Farm 시범사업'을 운영 중에 있다.

3. 주요 내용

1) 사업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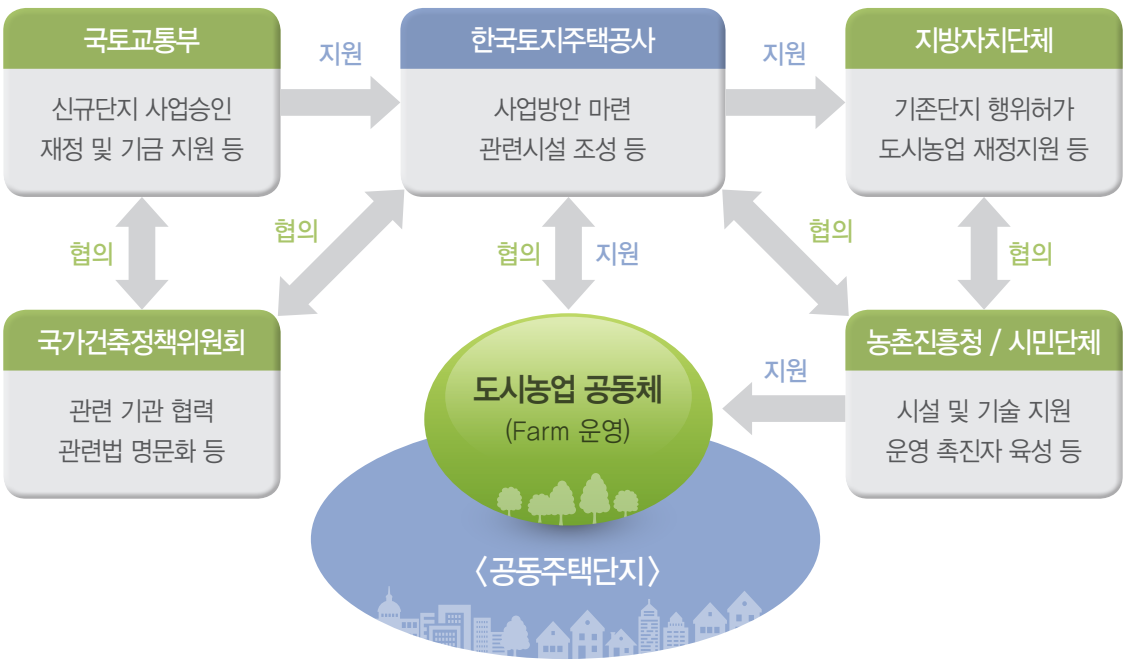
가. 아파트 공동체문화 개선

- 채소 등 소규모 먹거리 공동재배를 통한 이웃 주민 간 소통강화

나. 도시농업 활성화

- 텃밭, 음식물 퇴비화 장치, 관수설비 등 설치
- 유휴 공간 활용을 통하여 유기농 식량 자급자족문화 확산
- 단지 내에 농촌체험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 정서함양 및 노인 소일거리 제공

2) 사업주체별 역할(안)



3) 향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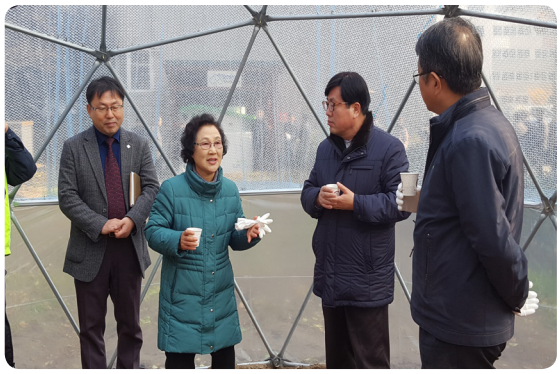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추진 중인 시범사업은 2018년도 상반기에 성과분석을 통하여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전체 영구임대 아파트 단지 중에서 사업가능 단지를 선정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 아파트 Farm 개소식





▲ 개소식



▲ 주민과의 대화



▲ 라이브 팜



▲ 나눔텃밭



▲ 음식물 퇴비화 장치

4. 성과 및 의의

'아파트 Farm 시범사업'은 단절된 아파트 단지 내 주민들의 협력체계 강화를 통하여 실질적인 소통을 유도함으로써 행복을 체감할 수 있는 사람 중심의 정책이다.

시범사업을 통하여 국가정책사업 중 하나인 도시농업활성화에 기여하고, 왕래가 없던 아파트 단지 내 주민 간 협업체계 및 소통 강화, 노인 소일거리 제공 등의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 의의를 둘 수 있다.

행사 분야

제 1 절
전국순회포럼

1. 추진 배경

최근 건축 · 도시정책의 방향은 공공성이 강조된 공유공간, 지속발전 가능한 도시재생, 우수한 건축자산의 활용방법 등을 어떻게 찾고 어떤 방법으로 접목하느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정책들이 획일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지역적 특성을 부각할 수 있을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착안하여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는 주입식 · 일방적 토론보다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기획하고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여, 찾아가는 포럼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지역전문가를 발제와 토론에 참여시킴으로써 실제 그 지역의 문제점에 대해 같이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찾아 제시함으로써 지역발전에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였다.

2. 추진 경과

제4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2016년 2월 1일 출범한 이후 2018년 1월 31일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 총 7회에 거쳐 전국순회 건축 · 도시정책 포럼을 추진하였다.

광역지방자치단체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통하여 개최지를 선정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4개 광역지방자치단체(광주광역시 6월 23일, 인천광역시 10월 12일, 부산광역시 10월 21일, 제주특별자치도 11월 11일), 2017년도에는 3개 광역지방자치단체(경기도 7월 5일, 전라남도 9월 21일, 울산광역시 11월 3일)

에서 지역별 특성에 맞는 주제를 가지고 관련 전문가와 함께 발제 및 토론회를 가졌으며, 포럼에는 민 · 관 · 산 · 학 · 연 등 많은 관계자가 참여하였다.

상반기에는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획 및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개최장소와 주제선정 및 토론참여자(발제, 패널) 등을 확정해야 했기 때문에 포럼은 주로 하반기에 개최되었다.

3. 주요 내용

2016년도

가. 제1회 호남권 포럼

일시	2016. 06. 23.(목) 14:00~17:00
장소	5 · 18 기념문화센터(대동홀)
참석	건축사, 민 · 관 · 산 · 학 · 연 관계자 등 250여 명
주관	광주광역시
주제	공유도시, 공유건축과 주거문화 – 발제 1 : 김재철 광주광역시 참여혁신단장 – 발제 2 : 류영국 지오시티(주) 대표 – 발제 3 : **박신영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
토론	• (좌장) 유우상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 **구자훈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 • 문정민 조선대학교 디자인학부 교수 • 염대봉 조선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 유창균 목포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 박홍근 (주)포유건축사사무소 대표





▲ 2016년도 제1회 호남권 포럼(2016. 06. 23.)

제4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2016년도 전국순회 건축 · 도시정책포럼은 호남권에서 먼저 개최하였다.

'공유도시, 공유건축과 주거문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3명의 관련 전문가가 발표하였다.

우선, 첫 번째 발제자는 '현대 사회의 각종 문제해결을 위해 각종 자원의 공유가 필요하고, 시민의 참여와 공감 · 실천이 필요함'을 강조하였고, 두 번째 발제자는 '공유주택은 공동체 문화 복원과 1인 청년 가구를 위한 대안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마지막 발제자는 '광주형 공동체주택으로 기존 마을 보존, 마을단위 저층형 주거단지 모델, 여러 계층이 어우러진 친환경 주거공간을 제시' 하였다.

이에 좌장은 '공유주택이 단순한 건축자재의 공유뿐인 주택이 되지 않으려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의 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나. 제2회 수도권 포럼

일시	2016. 10. 12.(수) 14:00~17:00
장소	인천광역시청 대회의실(본관 2층)
참석	건축사, 민 · 관 · 산 · 학 · 연 관계자 등 300여 명
주관	인천광역시
주제	행복한 시민을 위한 원도심 정주환경 재창조 – 발제 1 : **구자훈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 – 발제 2 : 김기문 인천광역시 주거환경정책과 과장
토론	• (좌장) 장동민 청운대학교 교수 • **윤혁경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 • 황순우 인천광역시 도시재생특보(바인건축사사무소 대표) • 최영호 인천광역시 남구청 건축과장 • 손동필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연구위원 • 김순국 풍성한마을 마을공동체 대표

인천광역시와 함께한 두 번째 포럼에서는 '행복한 시민을 위한 원도심 정주환경 재창조'라는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였다.

첫 번째 발제자는 '원도심 재생 성공 핵심은 청년'이라며 '쇠퇴한 지역의 미래는 청년 창업 기반과 일자리 확보가 좌우하며, 도시재생은 미래를 내다보고 청년을 도시정책의 기준으로 함'을 강조하였고, 두 번째 발제자는 '인천광역시의 원도심 정주환경 개선사업현황을 소개하면서, 2009년 이후 도시형 생활주택이 도시에 끼치는 영향을 볼 때 원도심 주거정책 시행 전 시뮬레이션 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정책연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토론 진행을 맡은 좌장은 '살기 좋은 정주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인식의 변화가 결정적인 요소로 판단하며 주민 참여를 위한 교육과 학습의 기회 제공 등 도시재생의 근본적 변화가 필수적임'을 강조하였다.

이에 토론자로 나선 윤혁경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은 '인구변화 없는 신도시개발은 기성 시가지의 침체를 유발한다'고 하면서, '서울시의 경우 매년 5만 명씩 도시를 이탈, 특히 30~40대의 이탈에





▲ 2016년도 제2회 수도권 포럼(2016. 10. 12.)

대한 대응책을 강구중에 있으며, 이와는 별개로 급격히 증가하는 1~2인 가구를 대비한 주거환경 공간과 행태에 대한 고민을 주문' 하였다.

다. 제3회 동남권 포럼

일시	2016. 10. 21.(금) 14:00~17:00
장소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5층)
참석	건축사, 민 · 관 · 산 · 학 · 연 관계자 등 250여 명
주관	부산광역시
주제	특별건축구역을 통한 도시공공성 확보 – 발제 1 : 김태만 한국해양대학교 교수 – 발제 2 : **윤혁경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
토론	• (좌장) 김민수 경성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 **김정곤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 • 김형균 부산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오광석 한국해양대학교 해양공간건축학과 교수 • 이영재 부산항만공사 건설기획부장





▲ 2016년도 제3회 동남권 포럼(2016. 10. 21.)

세 번째 포럼은 부산광역시에서 개최되었다.

'특별건축구역을 통한 도시공공성 확보'라는 주제로 2명의 전문가가 발제를 하였다.

우선, 첫 번째 발제자는 '북항재개발 라운드테이블 사례를 중심으로 특별건축구역의 공공성 확보 방안'에 대한 발표를 하였고, 두 번째 발제자는 '공동주택 단지 사례중심의 특별건축구역의 공공성 확보방안'에 대하여 발표를 하였으며, 좌장은 특별건축구역의 공공성 부여에 대한 개념설명과 경제적 가치에 대하여 이해를 높이기 위한 부연설명을 하였다.

토론에서는 '개발사업자가 생각하는 공공성과 시민이 생각하는 공공성의 수준이 다르지만, 공통 키워드는 지역시민이 참여하고 편리한 공간을 위한 공공성, 문화적 콘텐츠로 소프트웨어 창출을 위한 공공성, 역사적 자산 보존을 위한 공공성이 있으며, 현 공공성 확보정책은 시민의 편리성에 초점이 있으나, 역사적 자산에 대한 공공성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개발방식도 행정기관에서 마스터플랜하에 승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를 통한 공공성 추진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등 여러 토론자들이 심도 있는 토론의 장을 만들었다.

라. 제4회 강제권 포럼

일시	2016. 11. 11.(금) 14:00~17:00
장소	벤처마루 10층 회의실
참석	건축사, 민 · 관 · 산 · 학 · 연 관계자 등 170여 명
주관	제주특별자치도
주제	도시재생과 제주건축의 미래 – 기조발표 : 이승택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장 – 발제 1 : **구자훈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 – 발제 2 : 이용규 제주대학교 교수
토론	• (좌장) 신석하 제주국제대학교 교수 • **김정곤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 • **정규상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 • 양 건 가우건축사사무소 대표 • 양수현 제주한라대학교 교수 • 이성용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위원 • 김설주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2016년도의 마지막 전국순회 건축 · 도시정책포럼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개최되었다.

'도시재생과 제주건축의 미래'라는 주제로 열린 포럼에서 이승택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의 기조발표로 시작되었다.

이승택 센터장은 '사회, 문화, 경제, 교육 등 다방면에 걸쳐 중심지였던 원도심이 이제는 하나의 생활권의 중심으로 격하되어 중심지의 기능이 대부분 상실되었으나, 이 지역은 많은 문화 자산과 입지 조건으로 인해 잠재력을 가진 지역으로 여러 가지 문화 자산을 점으로 생각하고, 점의 확산뿐만 아니라 선으로 연결하고 선이 모이면 면이 되듯이 면으로 도시를 관리함으로써 이 지역을 균형 있는 지역으로 하려고 하고 있음'을 밝혔다. 또한, '문화관광도시뿐만이 아니라 역사경관도시를 만들고 결국은 매력 있는 도시가 되어서 유동인구를 많이 유입하는 전략과 함께 지역주민들이 함께 잘살 수 있도록 하는 주거환경개선과 지속 가능한 경제를 만들어서 살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여 정주인구를 늘리려는 두 가지 전략을 가지고 진행해야 함'을 설명하였다.





▲ 2016년도 제4회 강제권 포럼(2016. 11. 11.)

뒤이어 발표한 구자훈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은 '구석구석 찾아다니면서 제주 본래의 것만을 보고 경험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문화와 예술을 체험하고 또 거기에 다양한 음식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야 하며, 원도심에서 그것을 체험하고 그런 공간을 느끼고 그 곳에서 차도 마시고 즐길 수 있는 제주도의 특성에 따른 지역특화 전략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용규 제주대학교 교수는 '도시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은 도시만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 도시재생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점과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동일성과 모두에게 귀속감이 있는 것, 모두의 것이라고 인식이 공유될 수 있는 개별성의 관점에서 다른 지역에 없는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자랑할 수 있고 우리에게 뛰어난 것이야말로 도시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고 하면서, '올레에 주목'하기를 강조하였다.

아울러 토론자로 나선 구자훈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은 '중심시가지로 집중하겠다는 그런 정책 및 공간계획적 도시기본계획은 같이 가야 하고, 공공의 새로운 시설을 원도심으로 유치하는 개념으로 가야 하며, 처음부터 민간에까지 지원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원도심 지역 안에 재개발, 재건축에서 대규모로 아파트를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맞게 적절한 규모로 짓는다면 민간개발이어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자금을 지원해 주자'는 의견이 있었다.

뒤이어 토론자로 나선 정규상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은 '재생이라는 것 자체에 하드웨어적인 부분도 있지만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시스템화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과 함께 '간판이 제주다웠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제주도 컬러가 없다는 것 이런 부분도 심의에서 조정을 해주어야 될 부분이지만 어떻게 보면 그런 요소 하나하나가 모여서 완성도가 높아지는 것이지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2017년도

가. 제1회 수도권 포럼

일시	2017. 07. 05.(수) 14:00~18:00
장소	경기도 문화의전당 컨벤션센터
참석	건축사, 민 · 관 · 산 · 학 · 연 관계자 등 200여 명
주관	경기도
주제	건축자산 제도와 관련 주체의 역할 – 발제 1 : 건축자산 제도의 추진방향과 관련 주체의 역할 (이규철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부연구위원) – 발제 2 : 경기도 건축자산의 가치와 효과적 활용방안 (남지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토론	• **(좌장) 남해경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 • **박태원 광운대학교 교수** • 윤인석 성균관대학교 교수 • 장옥연 온공간연구소(주) 소장 • 서범석 경기도 건축문화팀장

2017년도 전국순회 건축 · 도시정책포럼은 수도권을 시작으로 총 3차례 개최되었다.

경기도에서 시작된 포럼에서는 '건축자산 제도와 관련 주체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2명의 전문가가 발표를 하였다.





▲ 2017년도 제1회 수도권 포럼(2017. 07. 05.)

첫 번째 발제자는 '건축자산 제도의 추진방향과 관련주체의 역할'이라는 소주제로 '건축자산의 개념과 정책 추진 배경, 건축자산 제도의 현황, 제1차 건축자산 진흥 (국가)기본계획, 지방자치단체 건축자산 제도 시행현황, 건축자산 관련 주체의 역할 등'에 대해 발표를 하였으며, 두 번째 발제자는 '경기도 건축자산의 가치와 효과적 활용방안'이라는 소주제로 '경기도 건축자산의 특징, 건축자산의 주요 가치기준, 건축자산 특성에 맞는 활용방안, 도시재생 등 연계사업 제안 등'에 대한 발표를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토론에서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건축자산 유형을 더욱 구체화하여 구분할 필요성이 있고, 보존과 활용 대상에 대한 판단기준도 구별하여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이 있었다.

나. 제2회 호남권 포럼

일시	2017. 09. 21.(목) 14:00~17:30
장소	동신대학교 중앙도서관 동강홀
참석	건축사, 민 · 관 · 산 · 학 · 연 관계자 등 200여 명
주관	전라남도
주제	고령화사회, 에너지복지를 위한 저에너지 건축 활성화 – 발제 1 : 건축물 중심의 에너지 · 기후변화 정책동향 및 시사점 – 전라남도를 중심으로 (이은석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부연구위원) – 발제 2 : 고령사회의 저에너지 건축을 통한 복지확대 방안 (손승광 동신대학교 교수)
토론	• (좌장) 박경립 강원대학교 교수 • **김도년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 • **박신영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 • 박선희 전북대학교 교수 • 김흥식 호남대학교 교수 • 김승진 한국시설안전공단 전문위원

두 번째 포럼은 전라남도에서 정체성이 가미된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기본방향 제시로 녹색건축물 시장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 건축시장 활력방안을 도모하기 위하여 '고령화사회, 에너지복지를 위한 저에너지 건축 활성화'라는 주제로 개최하였다.

첫 번째 발제자는 '건축물 중심의 에너지 기후변화 정책동향 및 시사점'이라는 소주제로 '녹색건축물을 통한 고령 인구의 취약한 거주환경개선, 빈집, 노후 건축물 정비를 통한 쾌적하고 안전한 녹색건축물 조성사업 추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을 위한 녹색건축물 기준 및 제도정비, 전문인력 및 산업 육성을 통한 지속 가능한 녹색건축물 조성과 일자리 창출'에 대한 발표를 하였으며, 두 번째 발제자는 '고령사회의 저에너지건축을 통한 복지확대 방안'이라는 소주제로 '농어촌 마을의 환경정비 지원정책에 주택외벽, 창호, 천장의 단열지원, 마을 공동회관 신재생 에너지 지원확대, 농어촌의 축





▲ 2017년도 제2회 호남권 포럼(2017. 09. 21.)

사 축양장 등 생산시설의 신재생 에너지 활용잠재력이 크므로 소유자 혹은 지역이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식 지원, 복지 시설의 신재생에너지 시설지원사업 추진과 농지 및 간척지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에너지 산업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유연성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이에 토론자로 나선 김도년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은 '에너지를 쓰고 있는 서울과 자연을 잘 보존하고 있는 전라남도의 문제에 대해 탄소 배출문제를 연계하여 부담을 주고 있는 도시가 상당 부분 기여해야 한다는 뜻으로, 세계적으로 보면 중국과 같은 나라와 자연을 잘 지키고 있는 나라의 상호 관계가 좋은 사례로 될 것임과 실전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강조하였으며, 박신영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은 '친환경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역할 범위 선정이 필요함과 고령화된 노인의 주택은 난방문제로 인한 곰팡이와 결로 발생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하므로, 도시재생 사업 등 국가가 재정을 지원하는 사업을 통하여 마을 단위 취약한 지역의 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일정규모를 주택 에너지 복지비용으로 전환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었으면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다. 제3회 동남권 포럼

일시	2017. 11. 03.(금) 14:00~17:30
장소	울산광역시 의사당 대회의실
참석	건축사, 민 · 관 · 산 · 학 · 연 관계자 등 200여 명
주관	울산광역시
주제	스마트시티, 스마트건축 – 발제 1 : 정부의 스마트시티 추진방향 (이재용 국토연구원 스마트녹색도시연구센터장) – 발제 2 : 국내 스마트시티 실증단지 조성사업 소개 (조영태 한국토지주택공사 연구원 스마트도시연구센터장) – 발제 3 : 스마트시티, 스마트건축 – 울산광역시를 중심으로 (김상락 울산발전연구원 전문위원)
토론	• (좌장) 박흥석 울산대학교 교수 • **홍원화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 • 남광우 경성대학교 교수 • 반영운 충북대학교 교수

세 번째 포럼은 울산광역시에서 승격 20주년을 맞이하여 '울산 스마트시티 구축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2016. 10. ~ 2017. 05.)'을 마무리하면서 2017년도 마지막으로 개최하였다.

이는 울산광역시의 도시 현안 해결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시티 구축 마스터플랜' 수립 내용 중에서 스마트건축 분야 중심으로 활발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울산광역시의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다.

주제발표는 3명의 전문가가 실시하였으며, 첫 번째 발제자는 '정부의 스마트시티 정책 추진방향'이라는 소주제로 '「스마트도시법」 개정안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준비과제, 스마트시티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해 발표하였고, 두 번째 발제자는 '국내 스마트시티 실증단지 조성사업'을 소개하면서, '해외와 국내의 스마트시티 구축의 차별성은 무엇인가'와 '국내 스마트시티 실증단지 조성 사례의 문제점'에 대해 발표하였으며, 마지막 발제자는 '스마트시티, 스마트건축 – 울





▲ 2017년도 제3회 동남권 포럼(2017. 11. 03.)

산광역시를 중심으로'라는 소주제로 '울산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한 현재 여건, 울산형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해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는 분야, 건축과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한 스마트건축 정책, 스마트시티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 지속가능한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위한 민관 협력 파트너십 방안' 등에 대한 발표를 하였다.

이와 관련해서 토론자로 나선 홍원화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은 '목표를 정하고 삶을 맞춰야 하는 것인지, 삶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맞춰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 항상 고민이 필요하고, 공급자 위주의 정책인 U시티는 사용자에게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이 없으며, 공급자와 사용자의 역할관계가 정립되어야 문제를 풀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4. 성과 및 의의

건설신기술 개발 및 건축문화에 대한 국민의 패러다임 전환 등 급변하는 건축 · 도시정책기조에 발맞춰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국민이 안전한 건축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치는 등 권역별로 폭넓은 의견과 지식의 환류를 통해 바람직한 건축 · 도시정책 진흥 방향을 모색하였다.

호남권 포럼에서는 공동체문화 복원과 1인 청년가구를 위한 대안 등을 위하여 공유주택의 필요성과 마을단위 저층형 주거단지 모델 및 여러 계층이 어우러진 친환경 주거공간을 제시하였으며, '국가가 재정지원 하는 사업을 통하여 마을 단위 취약한 지역의 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일정규모를 주택 에너지 복지비용으로 전환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었으면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수도권 포럼에서는 '쇠퇴한 지역의 미래는 청년 창업 기반과 일자리 확보가 좌우하며, 도시재생은 미래를 내다보고 청년을 도시정책의 기준으로 하는 원도심 재생 성공의 핵심은 청년'임과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건축자산 유형을 더욱 구체화하여 구분할 필요성이 있고, 보존과 활용 대상에 대한 판단기준도 구별하여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이 있었다.

동남권 포럼에서는 '특별건축구역을 통한 도시공공성 확보'라는 주제로 '현 공공성 확보정책은 시민의 편리성에 초점이 있으나, 역사적 자산의 공공성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개발방식도 행정기관에서 마스터플랜하에 승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를 통한 공공성 추진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을 역설하였고, 강제권 포럼에서는 '도시재생과 제주건축의 미래'라는 주제로 '문화관광도시뿐 아니라 역사경관도시를 만들고 유동인구를 많이 유입하는 전략과 함께 지역주민들이 함께 잘살 수 있도록 하는 주거환경개선과 지속 가능한 경제를 만들어서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게 됨으로써 정주인구를 늘리는 두 가지 전략을 가지고 추진해야 함'을 제시하였다.

그간 포럼에서 다룬 토론내용과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소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협의하여 건축 · 도시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통보하였다.

동 포럼을 통하여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건축 · 도시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 우수한 제도를 발굴 · 제안하여 미래에 지속 가능한 국가건축정책의 선도적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에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행사 분야

제 2 절

시 · 도 건축 및 도시업무 담당 공무원 워크숍

1. 추진 배경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다양한 건축 · 도시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각 지방에서 우수한 건축 · 도시정책을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해마다 '시 · 도 건축 및 도시업무 담당 공무원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다.

2. 추진 경과

워크숍 계획에 대해 국가건축정책위원회 합동연석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계획안을 확정하였다.

워크숍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전국 광역시 · 도에서 모두가 참석할 수 있도록 협조 공문을 시행한 결과 전국 17개 광역시 · 도가 참석하였다.

2016년에는 충남 천안 테딘패밀리리조트에서, 2017년에는 경북 문경 STX리조트에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또한, 내실 있는 워크숍을 위하여 각 시도별 우수시책 공유를 위한 사례 발표를 하고, 우수자에게는 시상하는 자리도 함께 마련하였다.

3. 주요 내용

가. 2016년 워크숍

일시	2016. 06. 02(목) ~ 06. 03(금) 1박2일
장소	충남 천안 테딘패밀리리조트
참석	137명(시 · 도 112,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 10, 기획단 15)
정책소개	최근 건축법령 개정현황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국가건축정책위원회 활동 상황 및 주요 정책 안내 – 국가건축정책기획단
특강	Ⅰ. 한국 건축규정의 이해와 활용(이용자 중심의 e-KBC) – 박선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원 Ⅱ. 스마트 도시와 건축(국민을 위한 상품과 미래 성장 동력) – 김도년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 Ⅲ. 자율주행, 미래교통 및 도시건축 – 최기주 아주대학교 교통공학과 교수 Ⅳ. K-LOOP(미래의 물류 네트워크 제안) – 김양한 KAIST 기계공학과 교수 Ⅴ. 한반도 통일대비 북한건축의 이해 – 차상욱 (주)이프건축사 대표
행사소개	(서울시) UIA 2017 서울 세계건축대회 – 장학진 UIA팀장
지방자치단체 특수시책	(서울시) 녹색건축 조성계획 – 공경배 주무관 (인천 남구청) 공가활용사업 – 정재호 건축관리담당 (대전 서구청)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 이흥주 공동주택지원담당 (울산 북구청) VISION 3S 건축행정서비스 – 박성관 건축주택과장 (경기)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 향상을 위한 품질검수제도 운영 – 김용천 건축문화팀장 (경기 부천시) 시민과 함께하는 친환경 건축 옥상텃밭 – 남궁종 건축허가팀장 (전북 군산시) 부유식 건축물 허가기준 마련 – 이광태 건축행정과장 (경북 의성군) 의성군 농촌빈집정비사업 – 이영헌 주무관 (경남)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재능기부단 운영 – 김석춘 친환경건축담당

개회 후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에서 '최근 건축법령 개정현황'을, 국가건축정책기획단에서 '국가건축정책위원회 활동과 주요 정책'을 소개하였다.

이어진 특강시간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선우 연구원이 '한국건축규정의 이해와 활용(이용자 중심의 e-KBC)'에 대하여 강의하였고,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김도년 위원이 '스마트 도시와 건축(국민을 위한 상품과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하여 강의하였으며, 아주대학교 교통시스템공학과 최기주 교수가 '자율주행, 미래교통 및 도시건축'을 주제로 강의하였다.

1일차 마지막 강의로 'K-LOOP(미래의 물류 네트워크 제안)'에 관하여 KAIST 기계공학과 김양한 교수의 특강으로 1일차 일정을 마무리하였다.

2일차에는 행사소개 및 자치단체 특수시책발표가 있었으며 주요 발표내용과 발표자는 다음과 같다.

발표에 앞서 서울시 장학진 UIA팀장이 'UIA 2017 서울 세계건축대회' 소개와 홍보를 하였다.

이후, 지방자치단체 특수시책으로 서울시의 공경배 주무관이 '녹색건축 조성계획 및 정책홍보', 인천 남구청 정재호 건축관리담당이 '공가활용사업 도심 내 공가를 활용하여 미관 향상 및 안전 도모방안', 대전 서구청 이흥주 공동주택지원담당이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치배경 및 운영', 울산 북구청 박성관 건축주택과장이 '건축 인 · 허가업무 처리 시 민원인에게 신속 · 정확 · 간편한 최적의 건축행정 서비스 제공', 경기도 김용천 건축문화팀장이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 향상을 위한 품질검수제도 운영'을 주제로 공동주택(30세대 이상), 도시형 생활주택(50세대 이상), 주상복합건축물(주택 300세대 이상), 리모델링(30세대 이상 증가 시)을 대상으로 시행한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검수제도의 운영방법, 추진실적, 2016년 계획 등을 안내하였다.

이어서 경기도 부천시 남궁총 건축허가팀장이 '시민과 함께하는 친환경 건축 옥상텃밭'을 주제로 신축 다세대 주택 옥상에 입주민을 위한 친환경 건축 옥상텃밭을 조성하여 도시환경 개선으로 도시의 열섬화 완화 및 이웃과 함께 나눔 실천 유도방안을, 전북 군산시 이광태 건축행정과장은 '부유식 건축물 허가기준 마련'을 주제로 수면 위에 건축하는 부유식 건축의 법적용 어려움 해소(민 · 관 · 학의 협력에 의한 자발적, 선도적 지방 규제완화 : 전국 최초 부유식 건축물 허가기준 마련) 사례를 발표하였다.



▲ 특강[K-LOOP(미래의 물류 네트워크 제안)]



▲ 특수시책 발표(부유식 건축물 허가기준 마련)



▲ 특수시책 발표(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재능기부단 운영)



▲ 특강(자율주행, 미래교통 및 도시건축)



▲ 수상 기관 기념촬영



▲ 워크숍 참석자 기념촬영(2016. 06. 03.)

다음으로 경북 의성군 이영헌 주무관이 '의성군 농촌빈집정비사업' 과정에서 농촌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군에서 직접 정비(철거) 시행(76동/770백만 원)한 사례를, 마지막으로 경상남도 김석춘 친환경건축담당이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재능기부단 운영'을 주제로 전문성이 부족한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안전관리(위험요소 · 하자 · 유지관리)에 대한 전문가 무료 멘토링 시책 발표를 하였다.

발표내용에 대해서는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들이 공정하게 심사했으며 그 결과 최우수상은 전북 군산, 우수상은 서울, 인천 남구, 대전서구, 장려상은 경남, 울산 북구, 경기, 경북 의성, 경기 부천이 각각 차지했다. 참여자 격려 차원에서 전체 참여기관에 대해 기관 표창을 하였다.

2일차는 (주)이프건축사 차상욱 대표로부터 '한반도 통일대비 북한건축의 이해'라는 주제의 특강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단체 특수시책 발표결과에 대한 시상과 위원장의 강평으로 1박 2일간의 워크숍을 마무리하였다.

나. 2017년 워크숍

일시	2017. 05. 30(화) ~ 05. 31(수) 1박2일
장소	경북 문경 STX리조트
참석	121명(시 · 도 97,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 7, 기획단 13, 국토교통부 4)
정책소개	국가건축정책위원회 활동 및 주요 정책 – 국가건축정책기획단 건축제도의 변화와 추진방향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녹색건축 정책현황 및 미래방향 –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특강	Ⅰ. 민간참여를 통한 도시 공공공간 이용 활성화 – 이상민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연구위원 Ⅱ. 스마트시티 국내 · 외 동향과 세계선도형 스마트시티 방향 – 유인상 LG CNS 팀장 Ⅲ. 4차 산업혁명과 전기 · 건축 생태계의 변화 – 배성환 한전 전력연구원 원장
행사소개	(서울) UIA 2017 서울 세계건축대회 – 한영근 대회협력위원장
지방자치단체 특수시책	(서울)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계획 – 박중섭 건축관리팀장 (부산) 규제개혁 우수사례 – 최용호 주무관 (인천) IFEZ 경관 건축위원회 3차원 시뮬레이션 운영 – 공상철 주무관 (경기 고양시) 감리자 및 현장조사 업무대행자 지정 프로그램 구축 운영 – 정석영 주무관 (충남) 천안 · 아산 복합문화 정보센터 조성사업 – 백상엽 주무관 (제주) 동아시아 해양실크로드에 건축을 싣다 – 오창훈 주무관 (세종) 세종시와 군부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손잡다 – 임일택 주무관

개회 후 위원장의 인사말에 이어 '국가건축정책위원회 활동 및 주요 정책' 안내는 국가건축정책기획단에서, '건축제도의 변화와 추진방향 소개'는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에서, '녹색건축 정책현황 및 미래방향 소개'는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에서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서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이상민 연구위원이 '민간참여를 통한 도시 공공공간 이용 활성화'에 대하여, LG CNS 유인상 팀장이 '스마트시티 국내 · 외 동향과 세계선도형 스마트시티 방향'에 대한 특강으로 1일차 일정을 마무리하였다.

2일차에는 UIA 행사소개와 지방자치단체 특수시책 발표가 있었으며 주요 발표내용과 발표자는 다음과 같다.

먼저 서울시 한영근 UIA 조직위원회 대외협력위원장이 UIA 2017 서울 세계건축대회를 소개하고 홍보하였다. 지방자치단체 특수시책으로는 서울시 박중섭 건축관리팀장이 '제2롯데월드를 중심으로 한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계획'을, 부산시 최용호 주무관이 '규제개혁 우수사례로 건축 인 · 허가시 장애인 편의시설 협의 개선방안'을, 인천시 공상철 주무관이 인천경제자유구역 지역에 대한 경관 · 건축위원회 개최 시 3차원 시뮬레이션을 통한 현황파악 후 신규건물 높이 및 표고, 지형경사도, 주변경관, 3차원 시뮬레이션, 항공-VR 보기 등으로 '경관 · 건축위원회 참석위원의 합리적 의사결정 유도 방안'을 각각 발표하였다.

경기도 고양시 정석영 주무관이 감리자 및 현장조사 업무대행자 지정 프로그램 구축 운영에 관하여 소규모 건축물 허가권자의 감리자 지정 및 현장조사 대행자 지정과 관련 건축행정 부조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선진 건축행정 구현' 사례를, 충청남도 백상엽 주무관이 '천안 · 아산 복합문화 정보센터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천안 · 아산 KTX 역사 주변 신도시 지역 천안 · 아산 상생협력센터, 도시통합 운영센터 및 도서관 조성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통합 운영모델구축과 천안 · 아산 시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교육 문화의 공간 확충을, 제주특별자치도 오창훈 주무관이 '동아시아 해양실크로드에 건축을 싣다'라는 제목으로 자연 · 역사 · 문화환경 도시인 제주의 국제건축포럼, 투어 및 전시를 통해 제주 건축 미래상 제안을, 세종특별자치시 임일택 주무관이 '세종시와 군부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손잡다'라는 제목으로 세종시와 군사보호구역내 협의 업무(건축인허가) 위탁 시행에 따른 갈등 해소 사례를 각각 발표하였다.

발표내용에 대해서는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들이 공정하게 심사했으며 그 결과 최우수상은 세종, 우수상은 인천, 경기 고양, 장려상은 부산, 제주, 충남, 서울이 각각 차지했다. 참여자 격려 차원에서 전체 참여기관에 대해 기관 표창을 하였다.



▲ 특강(스마트시티 국내 · 외 동향과 세계선도형 스마트시티 방향)



▲ 행사 소개(UIA 2017 서울 세계건축대회)



▲ 특수시책 발표(IFEZ경관 · 건축위원회 3차원 시뮬레이션 운영)



▲ 특강(4차 산업혁명과 전기 · 건축 생태계의 변화)



▲ 수상 기관 기념촬영



▲ 워크숍 참석자 기념촬영(2017. 05. 31.)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 배성환 원장이 '4차 산업혁명과 전기 · 건축 생태계의 변화'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특수시책 발표에 대한 시상과 함께 위원장의 강평으로 1박 2일간의 워크숍을 마무리하였다.

4. 성과 및 의의

시 · 도 건축 및 도시업무 담당 공무원 워크숍은 정책 공유는 물론 그 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 간 소통을 통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자리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특히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그 중심에서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 · 조정의 창구 역할을 하고 있음을 널리 알렸다.

이와 같은 전국 단위의 행사를 통해 중앙과 지방의 소통이 원활해짐으로써 정책 집행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이는 결과적으로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위상을 높이는 데도 일조하는 계기가 되었다.

행사 분야

제 3 절
대한민국 녹색건축대전

1. 추진 배경

국내의 모범적인 녹색건축 조성사례를 발굴하여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 시공자 · 건축주를 시상함으로써 녹색건축물의 조기정착을 유도하고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촉진 및 저변 확대를 위해 2012년부터 '대한민국 녹색건축대전'을 매년 추진해 왔다.

제4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도 우수한 녹색건축물 사례를 홍보하고 녹색건축 관련 정책성과를 공유하기 위하여 2016년 제6회, 2017년 제7회 두 번의 행사를 개최하였다.

2. 추진 경과

'대한민국 녹색건축대전'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 2016년과 2017년에도 각종 홍보활동을 펼쳤다. 주요 홍보활동으로는 국가건축정책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보도자료 배포, 서울 지하철(1~4호선) 역사 안내판에 포스터 게시, 주요 학회 · 협회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에 행사 홍보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녹색건축인증기관(전체 10개소)에서 인증서 발급 시 행사 안내문을 사전에 배포하도록 협의하였다.

접수한 작품을 심사하기 위해 관련 기관 추천을 받아 7인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모 작품에 대해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실사(2차례), 3차 최종 종합심사를 거쳐 총 10점의 수상작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수상작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녹색건축한마당' 행사와 연계해 시상을 하고 발표회 및 전시회를 개최하였다.

3. 주요 내용

'대한민국 녹색건축대전' 공모전은 에너지이용 효율을 고려한 패시브 디자인을 적용하고, 신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등 녹색건축을 적극 실현하여 준공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공모하였다.

수상작 선정은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서류 및 현장실사 과정을 거쳐 2016년과 2017년에 각 10개 작품(대상 1점, 최우수상 3점 및 우수상 6점)을 선정하였고, 대상은 2016년에는 경상남도 진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 사옥'이, 2017년에는 경기도 성남시 '삼양 디스커버리 센터'가 선정되었다.

시상식은 2016년에는 11월 17일에, 2017년에는 11월 15일에 코엑스 컨퍼런스룸 402호에서 열렸다. 대상(국가건축정책위원회위원장상)과 최우수상(국토교통부장관상)은 '녹색건축한마당' 공식행사에서 시상을 하고, 나머지 최우수상 2점과 우수상 6점은 본 행사에서 시상을 하였다. 시상식은 수상자 및 후원기관 시상자, 심사위원,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 및 기획단 직원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의 인사말, 심사위원장의 심사평, 수상작 시상 및 기념촬영을 하고 대상 및 최우수상 3점에 대한 사례 발표가 이루어졌다.

이 행사는 코엑스 전시홀에서 열린 '녹색건축한마당' 행사와 연계하여 진행되었으며, 우수 사례 홍보를 위하여 건축물 부착 명판 수여, 수상 작품집 발간, 수상작품 전시회 등도 실시하였다. 수상작 전시기간에는 건축가, 학생, 관련단체 등 약 1,000여 명이 관람하여 성황리에 행사가 마무리되었다.

2016년 심사위원

성명	소속 및 직위	추천기관
김정곤 (위원장)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최원미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	
백용규	서일대학교 교수	대한건축학회
이광호	한밭대학교 교수	
최남수	진화 건축사사무소 대표	대한건축사협회
조상규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연구위원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김유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16년 대한민국 녹색건축대전 수상작

구분		건물명	수상자
대상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사옥 (경남 진주)	(설계자) (주)무영종합건축사사무소 (시공자) 현대건설(주) (건축주) 한국토지주택공사
최우수상	국토교통부장관	대구은행 제2본점 (대구 북구)	(설계자) (주)정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시공자) 화성산업주식회사 (건축주) (주)대구은행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두동초등학교 (울산 울주)	(설계자) (주)엠피티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시공자) 학림종합건설주식회사 (건축주) 울산광역시교육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한국전력기술(주) 신사옥 (경북 김천)	(설계자) (주)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시공자) 대림산업(주) (건축주) 한국전력기술(주)
우수상	한국토지주택공사장	김천혁신도시 산학연유치지원센터 (경북 김천)	(설계자) (주)종합건축사사무소건원 (시공자) (주)건구건설 (건축주) 경상북도지사
	한국감정원장	중앙 블루아템(연립주택) (경남 창원)	(설계자) (주)가와종합건축사사무소 (시공자) 중앙건설(주) (건축주) 중앙건설(주)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장	경상북도 본청 및 의회청사 (경북 안동)	(설계자) (주)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주)동우이앤씨건축사사무소 (시공자) (주)대우건설 (건축주) 경상북도지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	한국서부발전(주) 본사사옥 (충남 태안)	(설계자) (주)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시공자) (주)대우건설 (건축주) 한국서부발전(주)
	건축도시공간연구소장	동해화력 사택 및 체육관 (강원 동해)	(설계자) (주)유선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시공자) (주)신일 (건축주) 한국동서발전(주)
	대한건축사협회장	노은3지구 동주민센터 (대전 유성)	(설계자) (주)신화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시공자) 주식회사 이안씨앤디 (건축주) 대전 유성구청장

2016년 수상작 심사평 및 사진



대상(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 –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사옥

- 패시브 건축기술과 신재생 에너지 기술 등 다양한 에너지 절약 기술을 도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에너지 관리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높은 수준의 녹색건축을 실현한 점이 우수함
- 건축 외피디자인 요소를 친환경 건축에 활용하여 에너지 절감 효과를 높이고 에너지 관리를 위하여 종합관리실에서 테크니컬하게 분석 및 모니터링하는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은 녹색건축 발전의 우수 사례로 파급 효과가 크다는 점이 돋보임



최우수상(국토교통부 장관) – 대구은행 제2본점(컬처플랫폼)

- 민간 업무용 건축물임에도 녹색건축 실현을 위하여 다양한 기술을 적용하고 건물 외부와 1층을 친환경적인 공간으로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열린 공간으로 개방하여 소통하려는 노력이 우수함
- 친환경 설계 프로세스 과정 및 녹색건축 사례를 공유하고 홍보하기 위해 책자를 출판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이 크게 돋보임



최우수상(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두동초등학교

- 예산 등 현실적인 제약이 있는 학교 건축물임에도 건축주인 교육청과 설계자가 녹색건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친환경적인 요소를 적극 도입함
- 특히, 미래세대가 교육받는 현장에서 녹색건축을 구현함으로써 녹색건축의 인식 고취에 기여하고 향후 많은 교육시설에서 친환경 기술 적용을 확산할 수 있는 모범사례로 파급 효과가 크다는 점이 돋보임



최우수상(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한국전력기술(주) 신사옥

- 태양광 발전과 우수 및 중수도 설비 등의 적극적인 적용으로 에너지 절감형 공공건축물을 구현하기 위한 노력이 우수함
- 다양한 친환경 녹색기술 도입과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적극 시도하였다는 점이 돋보임

2016년 행사 진행사진



▲ 제해성 위원장 축사



▲ 김경환 국토교통부 차관 환영사



▲ 전시회 개막



▲ 수상자 기념촬영

2017년 심사위원

성명	소속 및 직위	추천기관
최원미(위원장)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김정곤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	
이기완	(주)에코존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대한건축사협회
김창성	협성대학교 교수	한국건축가협회
박준석	한양대학교 교수	대한건축학회
정영선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조상규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연구위원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17년 대한민국 녹색건축대전 수상작

구분		건 물 명	수 상 자
대상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	삼양 디스커버리센터 (경기 성남)	(설계자) (주)정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주)니켄세케이(日本) (시공자) 대림산업(주) (건축주) (주)삼양바이오팜, (주)삼양사
최우수상	국토교통부장관	파주 문발동 3리터 하우스 (경기 파주)	(설계자) (주)건축사사무소티오피 (시공자) 차영희 (건축주) 차영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청라국제도서관 (인천 서구)	(설계자) (주)디자인그룹오즈건축사사무소 (시공자) 대양종합건설(주) (건축주) 한국토지주택공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파르나스타워 (서울 강남)	(설계자) (주)창조종합건축사사무소 (시공자) GS건설(주) (건축주) 파르나스호텔(주)

구분		건물명	수상자
우수상	한국토지주택공사장	인천 업사이클 에코센터 (인천 남구)	(설계자) (주)제드건축사사무소 (시공자) (주)도수건설 (건축주) 인천광역시 남구
	한국감정원장	래미안 안양 메가트리아 (경기 안양)	(설계자) (주)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시공자) 삼성물산(주) (건축주)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장	서울시립과학관 (서울 노원)	(설계자) (주)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시공자) 키움건설(주) (건축주) 서울특별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	명사청류 (강원 춘천)	(설계자) (주)휴다임건축사사무소 (시공자) (주)흥원건설 (건축주) 강원도
	건축도시공간연구소장	교보생명 부산사옥 리모델링 (부산 부산진구)	(설계자) (주)정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시공자) 삼성물산(주) (건축주) 교보생명보험(주)
	대한건축사협회장	현대해상 하이비전센터 (경기 광주)	(설계자) (주)정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시공자) 현대건설(주) (건축주) 현대해상 화재보험(주)

수상작 심사평 및 사진(2017년)



대상(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 – 삼양 디스커버리센터

- 민간기업과 건축가의 자발적인 녹색건축 실현 의지가 돋보인 건축물로서 향후 민간부문으로의 저변 확대와 파급에 기여할 수 있고 녹색건축을 배우려는 학생과 관심이 있는 건축주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본보기가 된다는 점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음
- 입면디자인과 중앙 아트리움을 중심으로 하는 심미적 · 조형적 완성도가 높고, 녹색건축 통합설계 매뉴얼을 만들어 프로젝트를 진행한 건축가의 노력이 인상적이며, 건축적 콘셉트와 친환경적 원리의 결합을 통한 디자인 프로세스가 돋보임



최우수상(국토교통부 장관) – 파주 문발동 3리터 하우스

- 단독주택임에도 건축주와 설계자의 녹색건축에 대한 인식과 구현 의지가 우수함. 기획단계에서부터 이를 반영하여 단독주택의 녹색건축을 선도적으로 구현한 모범사례로 단독주택의 녹색건축시장 파급 효과도 높을 것으로 평가됨
- 패시브디자인 접근과정이 아주 뛰어난 단독주택으로 설계와 환경조절 기법의 결합이 우수하며, 단독주택으로서 드물게 에너지효율등급 1++를 획득하였으며, 2012년도에 준공된 건축물이지만 현 시점에서 평가해도 녹색기술 반영 수준이 매우 높은 작품임



최우수상(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청라국제도서관

- 소규모 공공시설임에도 건축매스 및 입면디자인의 자유로운 조형적 표현과 에너지 절약을 위한 기능적 요구를 유기적으로 풀어낸 젊은 건축가의 노력이 돋보임
- 천창의 태양광 패널을 통해 내부의 빛 환경 조절 및 조형적 표현을 겸하도록 하여 건축디자인과 녹색기술이 조화롭게 잘 구현된 건축물로 평가됨



최우수상(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파르나스타워

- 도심지에서 건축물을 증축 및 리모델링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다양한 녹색건축 설계와 기술을 적극 도입하였으며, 패시브적 요소와 액티브적 요소의 결합이 뛰어나고 비오톱 조성 · 벽면녹화 · 우수 재활용 등 생태적 다양성 확보를 위한 노력도 크게 돋보임
- 외피의 에너지 손실을 줄이기 위한 루버의 효율적 사용과 태양광 패널의 외부입면 디자인 요소 활용 등 적극적인 기술 도입이 실제 에너지절약으로 이어진 녹색건축의 완성도가 높은 건축물로 향후 국내 업무용 건축물의 녹색건축화를 위한 좋은 작품임

2017년 행사 진행사진



▲ 전시회 개막



▲ 전시장 관람



▲ 제해성 위원장 축사



▲ 최원미 심사위원장 심사총평

4. 성과 및 의의

제4기 위원회에서 시행한 녹색건축대전은 이전에 비해 공공건축물뿐만 아니라 민간건축물의 참여가 크게 늘어나 녹색건축의 조기 정착과 확산 측면에서 매우 고무적이다.

또한 '녹색건축한마당' 행사를 국토교통부와 공동 주최하여 유공자 및 공모전 시상식, 토론회, 세미나, 전시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최하였으며, 수상작 결정과 함께 수상작품집을 제작하여 시상식 및 전시회장에서 배포하고 홈페이지에도 공개하여 녹색건축대전의 성과를 홍보 및 공유하였다.

앞으로도 본 행사를 통해 단독주택을 비롯해 모든 건축물에 걸쳐 녹색건축에 대한 관심과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행사 분야

제 4 절
2016 어린이 건축 창의교실

1. 추진 배경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는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이 건축을 통해 창의적 사고력을 증진하고 우리 건축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대한건축사협회, 인천광역시와 함께 '2016 어린이 건축 창의교실'을 개최하였다.

2. 추진 경과

2011년에 '제1회 어린이 건축 창의교실'을 개최한 이후 5회째를 맞은 '2016 어린이 건축 창의교실'은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인천광역시, 대한건축사협회가 주최하고 인천광역시건축사회가 주관하여 국토교통부, 교육부, 인천광역시 옹진군, 인천광역시교육청 등의 후원을 받아 개최하였다.

전국의 초등학생 4~6학년을 대상으로 사전 참가신청 접수(2016. 09. 01. ~21.)를 받아 서해 5도 어린이 48명을 포함 총 118명을 선정하였다.

3. 주요 내용

2016년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인천 글로벌 캠퍼스(인천 송도 소재)에서 초등 4~6학년 어린이 118명을 대상으로 공간디자인 3D 모델링, 건축물 아이디어 스케치, 입체표현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프로그램 내용

프로그램	내용
반갑다 건축	놀이와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3D 모델링으로 가상구현
모여라 도시	도시이야기 및 스케치를 아이디어 패널에 입체표현으로 도시완성
우수작품 시상	반갑다 건축, 모여라 도시 활동 작품 중 우수작품 선정 · 시상
건축 현장 답사	(10. 14.) 차이나타운 심야 답사 (10. 16.) 송도 등 인천지역 답사(근대건축전시관, 근대문학관, 인천아트플랫폼)

세부 행사내용

<table>
<tr><th>시간</th><th>사전 Day
10. 14.(금)</th><th>1일차
10. 15.(토)</th><th>2일차
10. 16.(일)</th></tr>
<tr><td>09:00 ~ 10:00</td><td rowspan="8">서해 5도 어린이
참가(48명)</td><td>발대식</td><td rowspan="3">건축 현장 답사
(근대건축전시관, 근대문학관,
인천아트플랫폼)</td></tr>
<tr><td>10:00 ~ 10:30</td><td rowspan="3">1차 워크숍 : 반갑다 건축
• 놀이와 건축 설명
• 마인드 맵
• 입체표현하기
• 3D 모델링하기</td></tr>
<tr><td>10:30 ~ 11:00</td></tr>
<tr><td>11:00 ~ 12:00</td></tr>
<tr><td>12:00 ~ 13:00</td><td>점심식사</td><td>점심식사</td></tr>
<tr><td>13:00 ~ 14:00</td><td rowspan="5">2차 워크숍 : 모여라 도시
• 송도신도시 안내 설명
• 도시테마 설정 및 디자인구역 선택
• 아이디어 스케치
• 입체표현하기
• ‘관계’ 디자인하기</td><td>해단식</td></tr>
<tr><td>14:00 ~ 15:00</td><td rowspan="5"></td></tr>
<tr><td>15:00 ~ 16:00</td></tr>
<tr><td>16:00 ~ 17:00</td><td rowspan="2">행사 준비
도서지역 어린이 맞이</td></tr>
<tr><td>17:00 ~ 18:00</td></tr>
<tr><td>18:00 ~ 19:00</td><td>저녁식사</td><td>저녁식사</td></tr>
<tr><td>19:00 ~ 20:00</td><td rowspan="2">건축 현장 답사
(차이나타운)</td><td rowspan="2">작품발표 및 시상
G-tower 홍보관 답사</td></tr>
<tr><td>20:00 ~ 21:30</td></tr>
<tr><td>21:30 ~ 22:00</td><td>세면 / 취침</td><td>세면 / 취침</td></tr>
</table>

수상자 명단

구분	수상명	수상팀	수상자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상	하모니상	7팀 (럭키루키)	강승모(은봉초6), 강예성(삼목초장봉분교장6), 김재성(백령초5), 남영후(해림초4), 박종현(백령초5), 백창준(한길초4), 안은서(북포초5), 이윤정(학산초4), 전하정(송원초4), 최진(백령초6), 홍서윤(연송초5)
국토교통부장관상	구성상	10팀 (베이맥스의 건축학교)	권다한(용현남초6), 김도윤(북포초6), 김미연(백령초6), 박건해(동춘초5), 방승태(서림초4), 이민국(동춘초5), 이채은(연송초5), 전서연(연송초5), 전준형(북포초6), 정시훈(은봉초6), 최성민(백령초5), 최지율(백령초5)
교육부장관상	이야기상	3팀 (신도시)	고동현(북포초5), 구유나(백령초6), 신규환(아름초5), 안은희(백령초6), 오승택(진주수정초4), 유솔(백령초6), 이규원(서현초5), 이연우(동산초5), 이우성(학산초4), 전예빈(북포초5), 최민서(새말초6), 김민(화교중산소학교4)
인천시장상	에너지상	1팀 (Friends)	곽민제(백령초5), 김은서(연송초5), 김한비(당산초6), 박나림(풍산초5), 박진서(백령초5), 배서현(연성초5), 심혁수(백령초6), 양태규(영일초4), 장민준(도화초5), 전계승(북포초6), 차순학(은봉초6), 최진우(백령초5)
	색채상	5팀 (5조오)	김건(부평동초4), 김민지(백령초5), 김윤서(북포초6), 박세아(북포초5), 방경현(금오초6), 이정민(황룡초5), 이태현(백령초5), 장영재(학산초6), 정결(북포초6), 한민욱(연양초4), 임모니카(백령초6), 홍지우(화교중산소학교4)
인천교육감상	콘텐츠상	8팀 (팔색조)	김민주(축현초4), 김지오(청량초5), 김진규(북포초6), 김태강(백령초5), 김혜진(백령초5), 박노아(중산초4), 박윤성(먼우금초5), 안채민(언북초4), 이신재(은봉초6), 천시온(백령초6), 최휘림(도화초5), 유예원(삼목초장봉분교장5)
옹진군수상	에코상	9팀 (건축학개론)	김도휘(길동초5), 김태윤(북포초6), 노예빈(백령초6), 류선우(응봉초5), 배서연(화교중산소학교4), 왕위청(화교중산소학교4), 이대한(동춘초5), 이서균(은봉초6), 이서진(삼목초장봉분교장5), 정우진(제천동명초5), 최규현(백령초6)
대한건축사협회장상	공간상	2팀 (건축쟁이)	강정현(백령초5), 경승현(백령초6), 구상우(백령초6), 김나율(청량초5), 김태이(연송초5), 김한설(당산초6), 심다빈(굴포초5), 장채현(문학초5), 전민형(북포초6), 최석준(원동초5), 최세진(은봉초6), 황민서(백령초6)
	아이디어상	4팀 (스페셜시티)	김예성(백령초5), 김지훈(삼목초장봉분교장5), 박용준(북포초6), 박혜윤(서림초4), 신재호(북포초5), 안예림(언북초5), 이순민(초림초5), 이유진(화창초4), 이지헌(박문초4), 이현영(은봉초6), 최예찬(백령초5), 홍원형(화교중산소학교4)
인천광역시 건축사회장상	조형상	6팀 (건축혁명)	권다슬(용현남초4), 김예슬(백령초6), 민성윤(마전초5), 박규준(응봉초5), 이보연(상인천초5), 이솔준(연성초5), 이종혁(태전초5), 이채민(당진초4), 정동휘(대정초6), 정상헌(북포초6), 조재경(백령초5), 황성현(북포초5)

2016 어린이 건축 창의교실









행사포스터



4. 성과 및 의의

본 행사는 건축에 관심 있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놀이를 접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편성 · 운영함으로써 창의적 사고와 문제 해결능력을 배양시키고, 장래에 건축문화를 창조해 나갈 훌륭한 건축인을 육성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즉, 어린이들이 일상적 삶 속에서 다양한 건축적 상상력과 창의력을 느끼고 표현하는 방법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인간이 환경과 반응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행복을 느끼며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 전체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넓혀 나가는 데 이해와 폭을 넓혀준 의미 있는 행사였다.

참가한 어린이 118명 전원이 교육을 수료하였으며, 운영 프로그램인 '반갑다 건축', '모여라 도시' 활동에서 만든 작품 중에서 심사를 통해 총 10팀을 선정하여 국가건축정책위원회위원장상, 국토교통부장관상, 교육부장관상 등을 수여하였다.

행사 분야

제 5 절

UIA 2017 서울 세계건축대회 전시 홍보

1. 추진 배경

'UIA 세계건축대회'는 국제건축연맹(UIA)이 주최하는 건축 분야의 세계 최고 권위 행사로, 1948년에 시작되어 5개 대륙을 순회하면서 3년에 한 번씩 열린다.

서울특별시에서 유치하여 개최되는 'UIA 2017 서울 세계건축대회'의 전시행사에 참여하여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주요 활동과 정책방향 등을 홍보하고자 하였다.

2. 추진 경과

2016년 7월 21일 개최된 제6차 합동연석회의에서 'UIA 2017 서울 세계건축대회' 추진사항을 보고받고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참여방안을 논의하였다. 전시행사 참여를 통해 우리의 건축을 세계에 알릴 수 있으므로 국가건축정책위원회도 참여 및 지원하기로 하였다.

2017년 7월부터 전시행사 참여를 위한 홍보부스 설치 방안에 대해 'UIA 2017 서울 세계건축대회 조직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홍보부스(전시패널, 홍보영상 등 포함)를 설치하였다.

홍보부스를 운영한 2017년 9월 4일부터 9월 7일까지 건축전문가, 공공기관, 학생 등 많은 사람들이 관람하였다.

3. 주요 내용

가) UIA 2017 서울 세계건축대회 현황

행사개요

대 회 명	UIA 2017 서울 세계건축대회
주 최	국제건축연맹(UIA), 한국건축단체연합(FIKA), 서울특별시
주 관	UIA 2017 서울 세계건축대회 조직위원회
후 원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국가건축정책위원회
행사기간	2017년 9월 3일(일) ~ 2017년 9월 10일(일)
참가규모	약 124개국 3만여 명(내국인 2.6만 명, 외국인 0.4만 명)
기대효과	세계 최고 권위의 건축문화 축제로서 국가이미지 제고 및 품격 향상, 각종 건축 관련 정보공유 및 국제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미래 한국건축 분야의 발전전략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

주요 프로그램

구 분		프로그램
공식행사	개회식	주제영상, 국내외 주요 인사 인사말, 기조강연
	폐회식	대회 결과보고, 서울선언, 차기 대회지 소개
	환영연	서울시립미술관 개최, UIA 2017 특별전시 사전오픈 행사
	시상식	UIA 선정 주요 분야별 시상식
학술	강연 및 발표	기조강연(Keynote Speech), 기조포럼(Keynote Forum), 스페셜세션(Special Session), UIA 세미나(UIA Seminar), 학생 및 젊은 건축인 포럼, UIA 골드메달 리스트 강연, 논문 및 디자인작품 발표 세션, 포스터 발표 세션
회의	UIA	UIA 이사회, UIA 총회
전시	UIA Plaza	UIA 회원국 및 지역별 홍보관 UIA 유관기관 진행 프로젝트 홍보 UIA 차기대회 도시 홍보 및 유치후보도시 홍보관
	건축 산업전 (Architecture Fair)	건축 관련 시스템, 건축자재, 건축사무소 등 한국 건축산업 전반의 기술력과 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기업체별 전시관 운영
	학생 및 젊은 건축인 파빌리온	학생 및 젊은 건축인 잼버리 학생 작품 파빌리온
투어	한국 건축 투어	한국 주요 건축 투어, 문화 투어 등 선택 관광(Optional Tour)

나) 홍보부스 설치 및 운영

UIA 2017 서울 세계건축대회장인 서울 코엑스 3층 C홀에 홍보부스를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홍보부스에는 전시패널을 설치하고 홍보 영상물을 제작해 상영하였다.

전시 패널 게시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기능, 역할, 구성 및 조직 등 일반현황
- 비전과 목표를 담은 정책방향
- 그간의 주요 성과 및 현장 활동 사항
  - 국가건축 기본방향 설정 및 국가차원의 건축디자인 기준 마련
  - 자랑스럽고 멋스러운 국가 대표거리 조성 및 국격 향상을 위한 신(新)한옥 플랜 수립
  - 주거문화 개혁을 위한 New Housing Movement 정책추진 등
  - 미래건축포럼, 녹색건축대전, 도시재생사업 등

2017년 9월 4일부터 9월 7일까지 홍보부스를 운영하면서 국가건축정책위원회 홍보를 위한 영상물(국문, 영문)을 모니터에 방영하여 관람객들의 관심을 모았다. 홍보기간에 약 700여 명이 부스를 방문하였고 그중 280명이 방명록에 등록하였다.

방명록 등록 현황

(단위 : 명)

계(명)	국 내					국 외
	소계	건축사 사무소	공공 기관	학교	기타(건설, ENG, 일반)	
280	209	107	30	29	43	71

UIA 2017 서울 세계건축대회 행사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과 직원 부스 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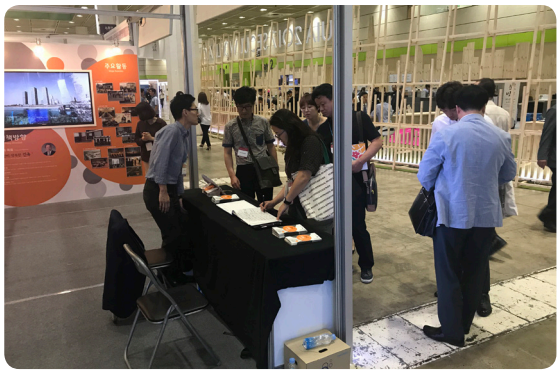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홍보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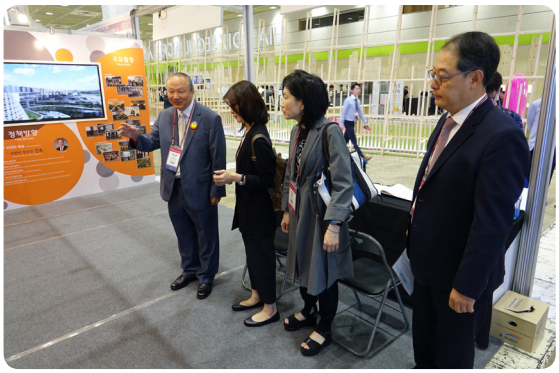
▲ 방명록 서명 – UIA 전임 회장 외



▲ 방명록 서명 – 건축사 외



▲ 방명록 서명 – 대학원생 외



▲ 패널 설명 청취

4. 성과 및 의의

세계 최고 권위의 건축문화 축제인 'UIA 2017 서울 세계건축대회' 전시행사 참여를 통해 홍보함으로써, 그동안 국가건축정책위원회라는 기관을 인식하지 못한 일반 관람객에게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주요 활동과 정책방향을 소개하고 존재를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차원 높은 건축정책 실현이라는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와 유사한 행사 참여를 통해 더욱 많은 홍보가 필요할 것이다.

국민이 행복한 건축

제4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활동보고서

APPENDIX



부록

1 제4기 위원회 위원 명단
2 위원회 활동 언론보도
3 위원회 연구과제 수행 실적
4 기획단 직원 명단

1. 제4기 위원회 위원 명단

위원장

성명	주요 경력
 제해성	• **現 아주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 건축도시공간연구소장 • 한국도시설계학회장 • 행정중심복합도시 총괄기획가

위촉위원(19명)

성명	주요 경력	성명	주요 경력
 구자훈	• **現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교수** • 서울시 도시계획위원 · 재정비위원 • 국토도시계획학회 · 도시설계학회 이사 •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 • 국무총리실 도시재생특별위원	 김관영	• **現 한국리츠협회 회장** • 제이알투자운용 대표이사 • 한양대 응용경제학부 교수 • 국토부 중앙부동산평가심의위원
 김도년	• **現 성균관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 녹색성장위원회 위원 • 한국도시설계학회 부회장 • 상암디지털미디어시티 총괄계획가	 김정곤	• **現 건국대학교 건축대학 교수** • 서울시 공공건축가 •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 교환교수 • 김태수 장학재단 심사위원
 남해경	• **現 전북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 한옥기술종합센터 센터장 • 전북 건축위원 · 도시계획위원	 박신영	• **現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 저출산고령화위원회 정책운영위원 • 한국주택학회 회장 • LH토지주택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은실	• **現 추계예술대 문화예술경영대학원 교수** • 지역발전위 · 도시재생특별위 위원 • 한국도시설계학회 문화도시위원장 •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위원	 윤혁경	• **現 ANU디자인그룹 건축사사무소 대표** • 서울시 도시경관담당관 • 서울시 공공건축가 • 대한건축사협회 부회장

성명	주요 경력
 이인근	• **現 LH토지주택연구원장** • 서울시 도시안전본부장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 서울시립대 초빙교수
 전병준	• **現 매일경제신문사 이사/논설실장** •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 매일경제 편집국장/뉴욕특파원 • 한국기자협회 매일경제지회장
 진양교	• **現 홍익대학교 건축도시대학원 교수** • (주)씨에이조경기술사사무소 대표 • 서울시립대 조경학과 교수 • 서울시 공공조경가
 최창식	• **現 한양대학교 건축공학부 교수** • 한양대학교 입학부처장 • 도쿄대 · 일리노이대 연구교수 • 국토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
 한동영	• **現 (주)한양 대표이사** • 대한건축학회 부회장 • 대림산업 전무
 김현아	• **現 20대 국회의원** ※제20대 국회의원 비례대표 당선으로 사임 • 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 • 국민경제자문회의위원 • 세제발전심의위원

성명	주요 경력
 이형석	• **現 법무법인 태평양 파트너변호사** • 사법연수원 강사 • 대한변협 건설분야 특별연수 강사 • 미국 뉴욕주 변호사
 정규상	• **現 협성대학교 시각디자인학과 교수** • 서울시 디자인위원회 심의위원 • 국토부 신도시 자문위원 • 한국 공공디자인학회 회장
 최원미	• **現 (주)도도디자인건축사사무소 소장** • 건국대 건축대학 겸임교수 • 한국내셔널트러스트 문화유산위원 • 매경 살기좋은아파트 심사위원
 하미경	• **現 연세대학교 실내건축학과 교수** • 한국여성건설인협회 회장 • 한국셀테드학회 부회장 • 한국환경공단 비상임이사
 홍원화	• **現 경북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본부 공학단장 • 양주신도시 총괄계획가(MP) • 한국공학교육인증원 인증평가단장

당연직위원(11명)

기획재정부 장관, 교육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환경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2. 위원회 활동 언론보도

국민이 안심하고 편안 하게 살 수 있도록 할 것… 제4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출범

박근혜 정부의 건축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제4기 대통령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이하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2016년 2월 1일 출범한다.

※ 1기(2008. 12. ~ 2010. 11.) / 2기(2011. 04. ~ 2013. 04.) / 3기(2013. 12 ~ 2015. 12.)

위원장으로는 아주대학교 제해성 교수가 지명되었으며, 위원은 관계 전문분야의 위촉직 민간위원 20명(위원장 포함)과 기획재정부장관 등 10개 부처의 당연직위원* 등 총 30명으로서 임기는 2년이다.(2016. 02. 01. ~ 2018. 01. 31.)

* 당연직위원: 기획재정부 · 교육부 · 행정자치부 · 문화체육관광부 · 농림축산식품부 · 산업통상자원부 · 보건복지부 · 환경부 · 국토교통부 · 해양수산부 장관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민간위원은 건축 · 도시 · 조경 · 디자인 등 전문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및 업계 인사들로 구성 · 운영하여 왔으나, 이번 제4기에서는 특히 언론 · 법조계, 경제 · 부동산 분야의 전문가들까지 위촉함으로써 보다 폭 넓은 관점에서 다양한 정책을 검토하고 활동할 수 있게 되었다.

제해성 위원장은 "국민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안심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건축과 공간 환경 정책을 만들어 나아가겠다."는 뜻을 밝히고, "아울러, 국민행복 · 경제 활성화 · 통일한국을 위하여 건축 분야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찾고 이를 실천하여 나가도록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창구 역할을 맡아 학계와 업계, 정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국민들 모두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건축기본법」 제13조에 따라 2008년 12월 설립되어, 여러 부처별로 분산된 건축 분야의 중요한 정책을 조정하고 심의하며, 콘퍼런스 · 포럼 ·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정부 · 지방자치단체 · 업계 등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

특히 2016년 2월부터는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건축물과 관련한 모든 규정을 통합한 「한국건축규정」의 개선 · 보완을 위한 심의를 담당하게 됨에 따라 국민 행복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역할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건축기본법」 2016. 02. 12. 개정 시행)

– 국토교통부 정책브리핑(2016. 01. 31.)

제해성 국가건축정책위원장 '국민이 행복한 건축정책 조율'

기존 건축정책에서 소외됐던 국민(사용자)을 정책 중심에 올려놓겠습니다. 자율주행자동차 등 신기술이 초래할 미래 변화에 대해 아이디어를 적극 모아서 정책 제언을 할 겁니다.

지난달 출범한 제4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제해성 위원장(63)은 기자를 보자 대뜸 '국민이 행복한 건축'이라고 적힌 카드부터 내밀었다. 뒷면에는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건축문화를 진흥하고 국토환경을 개선해 국민들이 안전하고 건전한 환경에서 사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건축기본법에 근거해 설립된 대통령 소속위원회'란 설명이 담겼다.

제 위원장은 국내 최초 건축도시 전문 국책연구기관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 소장을 지난해 9월까지 3년간 맡았고, 2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도 역임해 '준비된 위원장'으로 통한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당연직인 기획재정부 · 국토교통부 장관 등 10개 부처 장관과 위촉직 민간위원 20명 등 30명으로 구성된다.

제 위원장은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설립 근본 취지를 살려 각 부처 간 조율 · 조정을 거쳐 국민 행복에 일조할 것"이라며 세 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첫째는 미래를 준비하는 정책 제언 활동이다. 다음달 출범할 미래건축포럼은 국민이 살아갈 미래 환경의 비전을 제시하려는 포석이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미래 건축 · 도시 모습을 짧은 동영상 등으로 표현하는 '미래건축 공모전'도 구상 중이다.

제 위원장은 "한국은 밀도가 높고 정보기술(IT)이 발달했을 뿐 아니라 변화에 긍정적이라는 점에서 IT와 건축, 도시가 융 · 복합된 스마트홈과 스마트시티를 추진하기에 최적"이라며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신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형 택배 수거 장치나 새로운 빌딩 구조 개발에서 우리나라가 선도할 수 있다.

둘째,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올해부터 한국건축규정 개선 · 보완을 위한 심의를 맡아 '앓던 이' 같던 건축규제 완화에 나선다. 한국건축규정은 수십 개 법령이나 행정규칙으로 흩어져 있는 건축물 관련 규정을 쉽게 파악해 적용하도록 통합 서비스하는 것이다. 제 위원장은 "규제의 투명성을 갖췄으니 공정성을 확보하는 작업이 올해부터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국민과 건축주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제도를 정착시키려 한다. 집을 짓는 개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건축센터를 제도화하는 한편,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를 강화할 예정이다. 공공건축은 사전검토 과정을 거쳐 공공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 공공건축 전체 수급 · 유지 · 관리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사용자 중심 설계나 안전 기술 문제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기존 업무 중 보육환경 개선은 애정을 갖고 추진하는 사안이다. 공공주택 건설 때 기부채납 방식으로 어린이집을 확보해 학부모들 부담을 덜어줄 방안도 추진한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심의한 2차 국가건축정책기본계획은 대통령 보고를 앞두고 있다.

***제 위원장은 서울대 건축학과와 미국 MIT 건축학 석사, 펜실베이니아대 박사를 마치고 1987년부터 아주대 교수로 재직해 왔다. 우리나라 건축도시 분야 첫 국비 장학생으로 선발돼 위원장 업무를 '국가와 사회에 봉사할 기회'로 여겼다. 국내 최초로 총괄건축가(MA)를 맡았고, 경기도시공사 광교신도시 개발 때 에듀타운과 스트리트몰 개념을 도입해 신도시 성공 모델을 제시했다. 2015년 한국건축문화대상 올해의 건축문화인상을 수상했다.

– 매일경제신문(2016. 03. 17.)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방문해 '도시재생' 정책 소통

대통령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28일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와 창작놀이센터, 청년창업주거공간 리모델링 대상지 등이 포함된 신촌 도시재생시범사업 지역을 방문하여 지역 도시재생 추진상황을 둘러봤다고 밝혔다.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는 지난해 국토도시디자인대전 대통령상으로 선정된 곳이다. 교통 수요관리 기법 적용, 차로를 축소하고 보도를 확장하여 걷기편한 거리 조성, 보행 지장물 정비, 상가 밀집지역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상생협의를 통하여 해결, 주말 차 없는 거리 운영으로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즐길 수 있게 됐다. 또한 신촌 도시재생시범사업지역은 지난 2014년 말 서울형 도시재생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된 이후 신촌동 일대 407,600㎡를 대상지로 '젊음과 활력의 문화 밸리(Culture-Valley) 신촌'을 구현하고자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 중인 곳이다. 골목문화를 기반으로 상권, 주거,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오는 2018년까지 4년간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5억 원, 사업비 100억 원을 투입해 창작놀이센터 설치, 문화발전소 건립, 청년창업 주거공간 리모델링 등 연계 사업을 펼치게 된다.

제해성 국가건축정책위원장은 서대문구 관계자의 설명을 듣는 자리에서 "10월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주관으로 개최한 전국순회포럼 주제도 도시재생으로 정했을 만큼 도시재생에 관심을 갖고 있다"며 "신촌 도시재생 시범사업이 전문가와 주민 참여 도시재생사업으로 공동체가 활성화되는 성공적인 사례로 남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 파이낸셜뉴스(2016. 10. 27.)

국가건축정책위, '2017 제1회 전국순회 건축 · 도시정책 포럼' 개최

'건축자산 제도와 관련주체 역할' 주제로 5일 경기도서… 9월 전남 · 11월 울산서도

국토교통부는 '2017 제1회 전국순회 건축 · 도시 정책포럼'이 5일 경기도문화의전당 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고 4일 밝혔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주최하고 경기도가 주관하는 전국순회포럼은 국가 건축정책 방향의 실효성 정립과 건축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국가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2011년 6개 권역을 대상으로 시작됐다.

주요 논의 주제는 해당지역 건축정책 이슈와 국가 정책 등이다. 위원회 위원 · 대학교수 · 연구원 · 건축사 등 관계 전문가와 공무원, 학생 등이 참여해 각자가 생각하는 의견을 발표한다. 나온 의견은 위원회를 거쳐 각 중앙부처의 관련 부서로 전달되고, 정책에 반영된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건축자산 제도와 관련주체의 역할'이다. 발제는 이규철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부연구위원과 남지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이 맡았다.

이어 남해경 위원과 박태원 광운대 교수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토론에 참여할 예정이다.

포럼은 7월 경기도(수도권)를 시작으로 오는 9월 전라남도(호남권), 11월에는 울산광역시(동부권)에서 각기 다른 주제로 개최될 예정이다.

– 건설타임즈(2017. 07. 05.)

도시재생에서 공공공간 재발견…미래건축포럼 개최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건축 분야의 미래이슈를 공유하고 대응전략 등을 논의하는 네 번째 '미래건축포럼'을 14일 서울시 중구에 소재한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미래건축포럼은 우리가 사는 생활공간의 미래를 상상하고 논의하기 위해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지난해부터 마련한 자리다.

지난해 열린 세 차례의 포럼에서는 이동수단 변화가 건축과 도시에 미치는 영향, 다세대주택의 생활환경 개선방법, 에너지 생태계 변화에 대응한 미래 건축물의 모습 등에 대해 다뤘다.

이번 네 번째 포럼에서는 최근 주목받고 있는 저층 주거지 도시재생 사업에서 주차장, 공원, 주민공동시설과 같은 공공공간이 어떤 역할을 해오고 있는지 사례를 살펴본다. 도시재생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공공공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도 논의한다.

이날 발제와 토론은 실제 도시재생 현장 사례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이상민 연구위원이 '도시재생에서 공공공간의 재발견'이라는 주제로 공공공간의 의미를 되짚는 총론적인 발제를 한다.

도시재생 사업과정에서 공공공간을 성공적으로 활용한 사례로서 창신 · 숭인 도시재생지원센터 공동체 서유림 코디네이터, 시흥시 도시재생지원센터 김상신 센터장, 부산발전연구원 한승욱 연구위원의 발제가 이어진다.

이후 전문가들이 참여해 공공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과 도시재생 뉴딜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 및 구체적인 실천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제해성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은 "노후 저층 주거지의 도시기능 회복을 위해서는 주차장 등과 같은 필수 공공공간이 주민생활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추진과정에서 이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 뉴시스(2017. 09. 13.)

국토교통부 – 건축정책위원회, '2017 녹색건축 한마당' 개최

국토교통부는 오는 15~18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COEX)에서 '2017 녹색건축 한마당'을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Toward Smart & Green Life'라는 주제로 올해 7회차인 이 행사는 국토교통부와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주관을 맡았다.

행사는 개막식에 이어 녹색건축 시상식, 기조연설, 공모전 사례발표와 토론회 등으로 구성됐다.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는 '두 동굴 이야기'를 주제로 한 기조 연설을 통해 생명과학과 인문학적 관점에서 삶과 건축에 대해 생각해보고 우리나라 녹색건축이 나아갈 방향을 조명해 볼 예정이다.

시상식에서는 녹색건축 · 한국건축산업대전 · 그린리모델링 유공자에 대한 표창 수여와 함께 녹색건축대전 · 그린리모델링 사례 공모전 우수 작품에 대한 상장 수여가 진행된다.

15~16일에는 녹색건축 정책 및 기술 등에 대한 토론회와 세미나가 열린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스마트 · 정보통신(ICT) 기술, 녹색건축 정책 방향, 그린리모델링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 등 다양한 주제로 진행되어 학생 · 공무원 · 전문가 등 각계각층이 관심 분야에 따라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행사기간 동안 상시 개관하는 1층 전시관(홀 B)에서는 녹색건축 공모전 수상작, 녹색건축 자재 · 기술 등을 소개하는 전시회와, 제로에너지건축 · 그린리모델링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 체험, 우리 집 에너지 소비량 점검 등의 행사를 진행한다.

– 매일경제신문(2017. 11. 14.)

3. 위원회 연구과제 수행 실적

연도	과제명	과제수행자	연구기간
2016	건축산업의 미래이슈 및 대응전략 마련연구	대한건축학회 (장기창 / 홍성준)	2016. 06. 24. ~ 2017. 01. 19.
2016	Smart City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이재용 / 박해진)	2016. 08. 18. ~ 2016. 12. 15.
2016	건축학 · 건축공학 교육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연구	대한건축학회 (박진철 / 서우현)	2016. 08. 16. ~ 2016. 12. 13.
2017	소규모 주택 건축 품질관리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성은영 / 김기택)	2017. 05. 16. ~ 2017. 11. 11.
2017	도시공공공간 이용 활성화 연구 (민간참여를 중심으로)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이상민 / 박해진)	2017. 05. 16. ~ 2017. 11. 11.

4. 기획단 직원 명단

구분	성명	직급	원소속	근무기간
단장	안충환	고위공무원	국토교통부	2016. 01. ~ 2017. 09.
	박승기	고위공무원	국토교통부	2017. 11. ~
과장	김정희	서기관	국토교통부	2015. 01. ~ 2016. 05.
	엄정희	서기관	국토교통부	2016. 05. ~ 2017. 05.
	남영우	서기관	국토교통부	2017. 05. ~
팀장	조한권	서기관	국토교통부	2011. 09. ~ 2016. 03.
	조세기	서기관	국토교통부	2016. 08. ~ 2017. 05.
	조기재	서기관	국토교통부	2017. 05. ~
직원	홍성준	사무관	국토교통부	2014. 02. ~ 2016. 12.
	김영아	서기관	국토교통부	2017. 02. ~ 2017. 10.

구분	성명	직급	원소속	근무기간
직원	김영미	사무관	문화체육관광부	2015. 04 ~ 2017. 04.
	손연경	사무관	문화체육관광부	2017. 04. ~
	정광순	사무관	서울특별시	2015. 07. ~ 2017. 12.
	김내환	사무관	서울특별시	2018. 01. ~
	강길순	사무관	경기도	2016. 01. ~ 2018. 01.
	홍일영	사무관	경기도	2018. 01. ~
	정이섭	사무관	인천광역시	2017. 09. ~
	김인호	사무관	전라남도	2015. 07. ~ 2017. 07.
	서우현	사무관	충청남도	2016. 01. ~ 2017. 01.
	김기택	사무관	충청남도	2017. 01. ~ 2018. 01.
	안유환	사무관	충청남도	2018. 01. ~
	양기현	사무관	대전광역시	2015. 07. ~ 2016. 07.
	조욱연	사무관	대전광역시	2016. 07. ~
	박해진	사무관	경상남도	2015. 12. ~ 2017. 12.
	박재복	사무관	경상남도	2017. 12. ~
	김정남	주무관	국토교통부	2015. 03. ~
	이상민	전문위원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16. 01. ~ 2016. 12.
	김꽃송이	전문위원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17. 01. ~ 2017. 12.
	전영준	전문위원	한국토지주택공사	2014. 03. ~ 2017. 01.
	박정식	전문위원	한국토지주택공사	2017. 01. ~ 2018. 01.
	김상은	전문위원	한국토지주택공사	2018. 01. ~
	김현우	사무직	국가건축정책위원회기획단	2011. 02. ~
	신지연	비서	국가건축정책위원회기획단	2016. 02. ~ 2018. 01.
	유호걸	운전원	국가건축정책위원회기획단	2011. 12. ~

국민이 행복한 건축

제4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활동보고서

발행일 2018년 6월 20일

발행처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발행인 제해성

감 수 조기재

편 집 정이섭

참여자 김내환, 박재복, 안유환, 홍일영, 조욱연,
손연경, 조영진, 김정남, 김상은, 김현우

주 소 서울 종로구 종로5길 68,
코리안리재보험빌딩 8층 809호

전 화 02-397-5522

제 작 성원기획(02-362-1511)